

제66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와교육학회 분과발표회

**디아스포라의 귀환:
만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일시: 2023. 10. 28.(토) 14:00~18:00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217호

주최: 역사와교육학회

- 식 순 -

제66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와교육학회 분과발표회

디아스포라의 귀환:
만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일시 : 2023년 10월 28일(토) 14:00

장소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217호

등 록 14:00~14:05

개 회 사 14:05~14:10

사회 : 허은철(총신대학교)

기조강연 14:10 ~ 14:35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인구이동과 이산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발표 : 정혜경(강제동원&평화위원회)

제1발표 14:35 ~ 15:00

중국동포 혐오에 대응하는 역사 수업방안 모색과 실제

발표 : 곽희정(숙명여자대학교)

토론 : 김지훈(성균관대학교)

제2발표 15:00 ~ 15:25

구소련 지역 고려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의 의미와 과제

발표 : 김대용(국민대학교)

토론 : 이은홍(명지중학교)

<중간 휴식> 15:25 ~ 15:50

제3발표 15:50 ~ 16:15

사할린한인 귀환을 둘러싼 시민운동과 정부 간 협상

발표 : 오일환(중앙대학교)

토론 : 임성숙(충남대학교)

제4발표 16:15 ~ 16:40

2018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재외동포사' 서술 분석

-만주, 사할린,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발표 : 이재욱(진선여자중학교)

토론 : 정호경(동국대학교)

<중간 휴식> 16:40 ~ 16:50

종합토론 16:50 ~ 17:55

사회 : 조성운(역사와교육학회장)

토론 : 주제 발표자, 토론자 전원, 청중

- 목 차 -

<기조강연>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인구이동과 이산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1

발표자: 정혜경(강제동원&평화위원회)

<제1발표>

중국동포 혐오에 대응하는 역사 수업방안 모색과 실제 23

발표자: 곽희정(숙명여자대학교)

토론자: 김지훈(성균관대학교)

<제2발표>

구소련 지역 고려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의 의미와 과제 37

발표자: 김대용(국민대학교)

토론자: 이은홍(명지중학교)

<제3발표>

사할린한인 귀환을 둘러싼 시민운동과 정부 간 협상 57

발표자: 오일환(중앙대학교)

토론자: 임성숙(충남대학교)

<제4발표>

2018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재외동포사' 서술 분석
-만주, 사할린,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75

발표자: 이재옥(진선여자중학교)

토론자: 정호경(동국대학교)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인구이동과 이산 -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¹⁾

정혜경(강제동원&평화위원회)

목 차

1. 국권 침탈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산물 - 인구이동과 이산
 2. 귀환의 길
 3. 미귀환 - 사망과 행방불명자
 4. 미귀환 - 이산, 정주, 역이민
 5. 향후 연구과제 - 장소성을 통한 연구
-

1. 국권 침탈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산물 - 인구이동과 이산

수천 년 이어온 인류 역사에서 대규모 인구이동과 이산의 원인은 대규모 전쟁과 혁명이다. 지속적인 한발과 홍수 등 재난도 인구이동과 이산의 원인을 제공한다.

한반도 민중의 경우에도 국권침탈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인구이동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두 가지 요인을 지속적으로 추동한 것은 지속적 한발과 홍수 등 자연재해였다. 특히 인구이동의 직종에서 농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자연재해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목하게 만든다. 근대적 영농기술에 도입되기 전 천수답에 의존하던 조선의 농민들은 자연재해에 취약했는데, 선행 연구 성과에 따르면, 1919~1939년간 발생한 총 10회(1919, 1924, 1928, 1929, 1932, 1935, 1936, 1938, 1939)의 대규모 한발은 동일한 지역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었고, 피해지역의 수전 수확고 감소와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3남 지방의 피해는 매우 심했고, 부채 농가와 소작농이 급증했다.²⁾ 1938년과 1939년의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지역은 전북과 경북이었으나 경남의 경우에도 1929년 한발 피해를 심하게 겪어 적지 않은 농민들이 일본행을 택한 지역이다.³⁾ 조선총독부가 자연재해로 인해 몰락하는 농민층을 구휼하는 대신 전업(轉業)과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1920년대 이후 일본과 만주로 이동한 조선인 규모는 급증했다.⁴⁾ 특히 1930년대 중반부터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정책이촌(政策離村)'은 만주와 남양군도, 남사할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책이촌의 특징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조선총독부는 '구제' 명목으로 한발피해지역을 특정해 한발피해농민의 이촌을 독려했다.

1) 해방 전은 조선인으로, 해방 후에는 한인으로 사용

2) 樋口雄一, 「植民地朝鮮における自然災害と農民移動」, 『法學新報』109, 2002, 189쪽 <표 1>, 194쪽

3) 한발로 인한 3남 지방 농민의 인구이동에 대해서는 1920년대 신문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4) 한발이 발생한 시기의 조선총독부가 구조한 호수와 이동한 인원수를 보면, 구조 호수는 일부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38년의 구조 호수는 34,481호인데, 일본과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188,990명이었다. 樋口雄一, 앞의 논문, 199쪽 <표 6>

이같은 상황에서 조선인의 인구이동은 조선 후기의 재해와 관리의 가렴주구를 벗어나기 위해 노령으로 농민의 이주가 시작되어 국권 침탈 이후 만주와 일본으로 적지 않은 인구이동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의 인구이동과 이산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배경으로 발생했다. 한민족의 대규모 인구이동은 일본의 패전으로 귀환과 미귀환의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이산을 낳았다.⁵⁾

마프 피티 연구에 따르면, 1944년 기준 조선 전 인구의 약 16%에 달하는 400만 명이 국외로 이동했는데, 이는 근대 식민지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비자발적 ‘민족 이산’이었다.⁶⁾

조선인의 인구이동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조선인의 공백을 일본인과 중국인이 메꾸었기 때문이다. 1944년 5월 당시 한반도에 거주한 일본인은 712,583명이었고, 1940년 기준 중국인 거주자는 6만 4천 명에 달했다. 조선인의 인구이동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과 통제로 대응했으나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제국 일본의 점령지와 전투지역이 늘어나면서 전황과 일본 당국의 정책만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인구이동과 이산은 지역별로 시기·성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이 총력전 체제를 운영한 1938년을 전후해 이동 목적과 구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 시기에 비해 강제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이동 지역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1) 만주

만주는 노령과 함께 이른 시기의 인구이동이 시작된 지역이다. 1840년 청조의 봉금(封禁)정책과 조선의 강금(江禁)정책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1860년대부터 1910년 이전에는 생존을 위한 인구이동이, 1910년대 이후에는 생존권과 함께 정치적 망명가의 이동이 있었으며, 만주사변 이후에는 일본의 정책에 따른 인구이동이 이루어졌다.⁸⁾ 특히 인구이동 초기부터 가족 단위의 농업이민이라는 점이 이 지역이 민족운동을 장기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만주사변 이전 시기의 조선인 이주사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남만주·동만주·북만주 등 지역별, 도시별로 다양한 양상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이주에서 식민(植民)으로’ 성격이 달라진 1930년대 대상 연구는 이전 시기 연구에 비해 풍부한 편은 아니다. 집단부락의 형성 과정 및 정책적 차원에 대한 연구(김기훈, 한석정, 임성모)도 있으나 정책이 삶에 미친 영향(신규섭, 다나카 류이치, 신주백)이나 조선인 사회 연구 중심(윤휘탁, 유필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만주사변 이전과 이후 시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동 규모의 증가와 함께 자발성 및 강제성의 비중 변화일 것이다. 1927~1930년간 인구 증가는 연평균 1만 6천여 명 정도였는데, 1933~1936년간 연평균은 7만 1천여 명으로 급증했다.⁹⁾ 미야카와(宮川善造) 통계에 따르면, 1935년 774,627명, 1936년 894,744명, 1937년 931,507명, 1938년 1,056,308명, 1940년 1,309,053명이다.¹⁰⁾ 이같이

5) 인구이동과 이산은 제국 일본을 구축하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경험했다.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인구이동에 대해서는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6) Mark.R.Peaty, 「日中戰爭・太平洋戰爭期の日本の植民地帝國」, 細谷千博他 編, 『太平洋戰爭』, 東京大學 出版會, 1993, 403쪽

7) 조선인의 인구이동 지역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국한한 것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라는 점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8) 1869년과 1870년간에 발생한 한반도의 대량 흉작도 북선지방 거주 조선인이 만주로 이동하는데 원인이 되었다.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30쪽

9) 滿洲國通信社, 『滿洲開拓年鑑』, 1941, 276쪽

10) 宮川善造, 『人口統計より見たる滿洲國の緣族複合狀態』, 滿洲事情案内所, 1941, 73쪽

이동 규모가 급증한 것은 일본당국의 정책 때문이었다.

식민지민의 인구이동이 식민지 경제정책이라는 구조와 제도의 문제이므로, 큰 틀에서 볼 때 이주의 성격을 자발과 강제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의 정책에 따라 공권력을 동원한 인구이동에서 강제성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¹¹⁾

1935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만주지역 인구이동은 '정책이촌'의 핵심을 차지했다. 만주는 가장 이른 시기부터 적용한 지역이다. 만주의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원을 중국 관내(화북)의 중국인에서 찾음으로써 조선인 배치지역은 소련과 국경을 맞댄 농촌에 집중되었다.¹²⁾ 그러므로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제시한 만주지역 노무동원 작업장 298개소 가운데 조선인이 집중 동원된 직종은 집단농장(개척민)이었다.¹³⁾



그림 1 동성용(東盛涌) 비행장 활주로 자리. 현재 벽돌공장으로 사용 중(2006년 7월 촬영)



그림 2 도문시 정암촌 바위산에 일본군 초소가 있던 곳(2006년 7월 촬영)

만주에서 조선인의 정책이촌은 일본인 이민사업의 대체물이었다. 만주의 영속적 지배를 위해 식민의 필요성을 인식한 관동군은 1932년 2월 특무부 중심으로 일본인·조선인·중국인의 순서로 이민정책을 수립했다. 당국이 이민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첫째, 만주의 농업약탈을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국내 토지문제와 인구문제의 해결이었다. 세 번째는 중국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일본인 중심의 만주국 건설을 위해서였다. 네 번째는 소련을 침공하기 위한 전진기지 확보 목적이었다.¹⁴⁾

원래 일본 정부는 일본인 100만 호 이주를 달성하기 위해 조선인의 이주를 제한했다. 1934년 특무부는 '일본인 개척민은 장려하고, 조선인은 통제 지도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후 1935년에 이민을 담당할 만주척식회사를 세웠다. 관동군 특무부 정책에 따라 일본인들의 시험이민이 시작되었다. 1932년 8월 일본 각의에서 '제1차 천명 이민'을 결정하고, 9월에 '척무성 제1차 무장이민단' 492명이 차무스(佳木斯)에 도착해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마을(永豐鎮, 일본이 이야사카무라

11) 법령을 통한 정책의 수립 및 운용과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용역보고서 - 만주 노무관련 법령 기초조사 - 개척정책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김윤미)』(2009)을, 만주지역 조선인 이동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허광무·정혜경·김미정,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동북아역사재단, 2021) 참조
 12) 1936년 조선인의 직업 분포에서 농목림어업 비중은 86.6%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宮川善造, 앞의 책, 8~9쪽
 13)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138쪽
 14) 손춘일, 「일제의 재만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연구 - 만주국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168~173쪽

(彌榮村)로 변경)에 조성한 일본인 이민촌) 집을 풀었다. 이후 일본인 집단이민은 1943년까지 13차례 실시되었는데,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재향군인 신분이었으나 추위와 척박한 토지, 소련과 국경을 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항일세력들의 공격으로 일본인들은 대부분 집단 마을에서 후퇴했다. 일본인들의 이주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대안은 조선인이었다.

당국이 조선인 이민을 실시한 계기는 1933년 길림성 경무청이 조선총독부·간도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3개 현(延吉, 和龍, 琿春) 8개 집단부락이 치안확보에 효과를 거두었고, 쌀농사에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만주와 같이 춥고 토질이 척박한 곳에서 쌀농사를 성공한 것을 보고, 미간지를 개간해 수확한 식량을 관동군이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을을 이루어 항일세력의 습격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선총독부는 1934년 1월 세부 준비를 한 후 동아(東亞)권업(주)을 통해 집단 이동을 실시했다. 1934년 10월 30일 각의결정(조선인 이주대책의 건)에 따라 1936년 6월 선만척식(주)을 설립(만주국은 만선척식주식회사 설립)하고 1938년 1월에 강원도 평강군에 증견인물양성을 위한 세포이민훈련소를 설치했다. 1938년부터 조선인들은 세포훈련소에서 40일, 또는 10개월까지 훈련을 받고 떠났다. 1939년부터는 호칭도 '개척민'으로 변경해 국책의 시행에 따른 동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1939년 12월 관동군은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을 제정하고 일본과 만주국 각의결정을 거쳐 공표했다. 이 요강은 관동군의 행정기구 개혁과 이민문제 재검토 일환으로 제정했는데,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한 도의적 신대륙 정책의 거점 확립"을 목표로 했다. 부속서류인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부속서에 따르면, 당국은 조선인 개척민의 종류를 농민·반농(半農)적 개척민(임업, 목축업, 농업 등)·상공광업 기타 개척민으로 구분했다. 부속서 내용에 따라 1941년 6월 선만척식과 만선척식은 만주척식공사로 병합해 개척민 담당 기구를 일원화했고, 조선인 만주개척청년의용대제도를 시행했다.¹⁵⁾

대미전쟁 직후인 1941년 12월 13일 일본 각의는 '만주개척 제2기 5개년 계획요강'을 결정하고, 제1기에서 설정한 일본인 30만명 개척민 배치를 50%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제2기에서는 적극적인 조선인 동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각의결정 후 조선총독부는 1942년부터 개척민 5만호를 송출한다는 제2기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개척민 동원과 관련해 1942년부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등 8개 도의 읍면 중 경지가 협소해 영농조건이 불리한 읍면을 지정해 해당 농가를 선정하는 할당모집 방식을 적용했다.

조선인 집단 이동은 당국의 계획과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 위원회가 파악한 만주지역 강제동원 피해 규모는 3,658호이다.¹⁶⁾ 정책은 관동군과 일본의 척무성, 조선총독부, 만주국의 합작품이었다. 만주 집단이민 업무를 담당할 만주의 최고결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은 관동군 사령부 내에 관동군참모장을 대표로 설치한 이민사무처리위원회(1937년)였다. 조선총독부 해당 부서는 이민위원회(1939.2.22 설치)·외사부 척무과(1939.8.3)·만주개척민지원자훈련소(1940.4.10.)·사정국 척무과(1941.11.19.)·외무과(1942.12.1.)·농상국 농무과(1943.12.1.)·농상국 농상과(1944.11.20) 등이다.¹⁷⁾

15) 만주개척청년의용대 제도의 수립 과정과 성격에 대해서는 김윤미, 「전시체제가 조선인 만주개척청년의용대에 관한 연구」(『한일민족문제연구』18, 2010) 참조

16)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135쪽

17) 정혜경, 『일본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도서출판 선인, 2011, 145~153쪽

2) 남양군도

일제강점기 중서부태평양 지역 623개 섬의 이름은 ‘남양군도’였다.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 해 차지한 구 독일령(마셜, 캐롤린, 마리아나 군도)이며, 주요 섬은 사이판(Saipan), 팔라우(Palau), चु(Chuuk), 폰페이(Pohnpei), 콰잘린(Kwajalein) 등이다.



그림 3 '남양군도'[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명부해제집』, 2009, 64쪽]



그림 4 티니안 소재 난요흥발 제당공장 자리(2007.6.25 촬영)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1914년 8월 23일 연합군에 가담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중국과 태평양의 독일령을 공격했다. 9월 30일, 마셜군도의 알루트(Jaluit, 현 미국령 젤루잇섬)에 상륙한 후 10월 7일 점령했고, 12일, 일장기를 게양함으로써 알루트 점령을 공식화했다. 이후 구 독일령 중서부태평양을 점령한 일본은 곧바로 임시남양군도 방비대조령(防備隊條令)을 발표하고 사령부를 동캐롤라인제도 측에 두고 군정을 실시했다. 전 군도를 사이판, 팔라우, चु, 포나페, 알루트 등 5개 민정구로 나뉘고(1915년 압Yap민정구 추가) 수비대를 배치했다. 1918년 6월 공포한 칙령(민정직원 설치에 관한 건)을 근거로 임시남양군도 방비대조령을 개정해 7월 1일 민정부를 설치하고 일반 시정사무를 민정부가 통할(統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개 민정 구에 설치되었던 군정청은 민정서로 개칭했다.

1920년 12월 17일 국제연맹 이사회가 일본을 수임국(受任國)으로 남양군도에 C식 위임통치조항을 결정한 후 일본은 1922년 4월 1일 위임통치 시정관청인 남양청(南洋廳)을 개설하고, 623개 섬의 추장을 남양청의 하급 직원으로 부렸다. 이로써 남양은 일본의 제국 영역 확장에 교두보가 되었다. 동남아와 미국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연맹 규정과 위임통치조항에 따라 방비책이 금지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해 국제연맹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¹⁸⁾ 그럼에도 일본 해군은 1933년 사이판 아스리토에 1,000m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일본은 남양군도 내 군사기지 건설을 시도했다.¹⁹⁾

1933년 3월 일본은 만주국 설립을 계기로 국제연맹을 탈퇴했으나 1935년 남양군도에 대한 위임통치국 지위는 유지했다. 통치권 유지 결정 후 일본은 위임통치규약을 어기고 남양군도의 군사기지화를 꾀했다. 1937년부터 남양청과 일본 해군은 비행장과 항만 등 군사시설 구축 토목공사를 본격적으로 벌였다.²⁰⁾

남양군도의 군사기지화는 산업과 인구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규모 토목공사 수행을 위해 많

18) 국제연맹 규약인 위임통치 조항의 규정 및 정신에 의하면, 일본은 남양군도에 축성이나 육해군 근거지를 건설할 수 없었고, 토착민 대상 군사교육과 노예매매, 강제노동이 금지되었으며, 무기 및 탄약 도입도 할 수 없었다. 矢内原忠雄, 『南洋群島の研究』, 岩波書店, 1935, 476~486쪽

19)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1970, 『戰史叢書-中部太平洋方面海軍作戰』 1, 朝雲新聞社, 62쪽

20) 今泉裕美子, 『南洋群島經濟の戰時化と南洋興發株式會社』, 『戰時下アジアの日本經濟團體』, 日本經濟評論社, 2004, 313쪽

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1930년 말 남양군도의 인구 규모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군사기지 구축의 진전에 따라 1930년 말에는 남양군도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고 노동력 재배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면서 새로운 노동자 조달처를 모색한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남양군도 통치원칙은 대규모 척식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 이민을 통한 인구이동 효과 제고와 함께 동남아시아 및 남중국과 연계한 태평양상 군사적 거점 등 정치·군사적 목적이 강했다. 남양군도 개발을 위해 여러 회사가 진출했고, 많은 일본인이 이주했다. 1922년 3,210명이었던 일본인은 1926년에 8,395명, 1928년에 12,460명, 1931년에 22,889명이 되었다.²¹⁾

전경운(全慶運)이 남긴 회고록(1981년 『남양살이 40년을 회고』, 1995년 『한족 2세 3세가 천인안도에 살고 있는 혼혈아들』)에 따르면, 남양군도에 조선인이 입도한 첫 시기는 1917년이다. 그러나 조선인 노동자들이 심한 차별에 저항하고, 1920년 여름부터 사탕 시장이 폭락하자 회사는 조선인의 강제퇴거를 결정해 대부분이 귀국했다.²²⁾ 1920년대 조선인 인구는 1922년 149명(남 129명, 여 20명), 1927년 148명으로 총인구(51,086명과 58,816명)와 비교하면 미미한 정도였다. 1938년에 704명이었던 조선인은 1939년에 1,968명으로 증가해 1940년에는 3,463명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강제동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조선총독부 등 동원 주체가 생산한 자료를 보면, 남양군도 노무동원의 기점은 1939년 2월 팔라우로 출발한 농민 500명(경남 거창, 남해, 경북, 전남북 출신) 사례다. 남양청 의뢰에 조선총독부 내무국 주관, 경무국 협조로 동원했다. 집단농장과 토건공사장의 알선노무자였다. 1939년 2월부터 3월까지 토건노무자를, 1939년 8월부터 1940년 1월까지 농업노무자를 보냈다. 토건노무자는 남양청의 공사 하청을 맡은 기무라구미(木村組)가, 농업노무자는 호난산업(주)과 난요흥발(주), 난요척식(주) 등 국책기업이 담당했다. 1939년 2월은 당국이 일본지역으로 노무동원을 개시한 10월보다 앞선 시기였다. 남양군도에서 1939년 2월 조선총독부 알선노무자를 동원한 배경에는 중일전쟁 이후 전쟁의 장기화가 있었다.

일본은 중일전쟁 후 국제연맹규약을 어기고 남양군도에 본격적인 비행장과 항만건설에 착수했다. 사탕수수농장과 광산, 비행장에서 일하던 일본 남성들이 중국 전선과 일본 본토 군수공장으로 떠나자 이들을 대신할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주목한 대상이 한발을 입은 조선의 농민들이었다. 조선총독부 내무국이 각도에 하달한 공문에서 ‘한발 이재민 구제’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한발 피해지역을 특정했다. 1939년 7월 13일자 문서 「남양농업이민알선방법에 관한 건」(『남양농업이민관계철』 수록)에서 내무국장은 경북도지사에게 ‘경남북 지방의 한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선정’을 요청했고, 1939년 9월 11일자 문서(남양이민알선 방법에 관한 건)에서도 전북과 경북 도지사에게 총독부 알선의 목적이 ‘한발 이재민 구제’임을 명시했다.

이후 지속적인 동원을 통해 1944년까지 노무자를 동원해 집단농장과 광산, 비행장 등 군시설공사에 투입했다. <표 1>에 따르면, 1943년까지 거주한 조선인의 인구는 7,899명인데, 미국립문서기록청(NARA) 소장 남양군도 승선자명부 수록 인원 11,017명 가운데 직업 구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면, 총 1만여 명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당국은 만주와 동일하게 한발의 재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로 동원했다.

21) 南洋廳, 『南洋廳施政十年史』, 1932, 11~12쪽

22) 今泉裕美子, 「南洋群島」, 『貝志川市史 - 移民・出嫁ぎ 論考編』, 2002, 558쪽

<표 1 > 남양군도 거주 조선인 현황²³⁾

연도	인원수	연도	인원수
1922	147①/143③	1935	360②/546③
1923	80①/82③	1936	545②③
1924	89①	1937	596②/579③
1925	86①	1938	704②③
1926	93③	1939	1968②③
1931	224③	1940	3463②/2782③
1932	278③	1941	5824②/4563③
1933	313③	1942	6646③
1934	318③	1943	7899③

① 南洋廳, 『南洋統計年報-第1回』(今泉裕美子, 『サイパン島における南洋興發株式會社と社會團體』, 『近代アジアの日本人經濟團體』, 同文館出版株式會社, 1997, 68쪽, 재인용)

② 南洋廳, 『南洋群島要覽』, 각 해당연도

③ 坂本悠一, 『日本帝國における人の移動と朝鮮人』, 日本史研究會 發表文, 2004년 5월

3) 남사할린

러시아의 유일한 섬인 사할린은 러시아와 일본이 19세기 초 지정학적 중요성과 천연자원의 가치에 대해 눈뜨면서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적 대치를 시작해 갈등의 형태와 지역을 달리한 채 오늘날까지 이어진 곳이다. 1905년 포츠머스 강화조약 후 일본은 1907년 도요하라(豊原, 원래 지명 블라디미로프카, 현재 사할린주의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화태청(樺太廳)을 설치하고 남사할린 통치에 들어갔다. 일본이 지배한 남사할린은 조선에서도 한자 독음을 차용한 화태(樺太)로 불렸다.

그러나 최초로 사할린에 들어간 조선인은 북사할린에서 생활했고, 1937년 소련이 강제이주정책을 발동할 때까지 북사할린은 조선인의 생활 터전으로 존재했다.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사할린 조선인은 수인이었다. 1897년 러시아 제1회 국세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할린 인구는 약 28,000명인데, 조선인은 67명이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대부분 연해주를 거쳐 사할린으로 갔다.²⁴⁾

1905년 이후 한반도의 정치적 변동은 조선인들의 국외 탈출을 가속화했다. 1910년 북사할린의 알렉산드롭스크에서 조선인 망명자들은 상호부조협회를 조직하고 자금을 모아 토지를 구입했다. 1910년 도우에 광산에서 중국인과 중국인을 포함한 500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켜 군부대가 진압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사할린 조선인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⁵⁾ 그러나 1926년 일본 당국이 남사할린에 ‘집단지민정책’을 적용한 후 조선인 인구이동의 중심지는 남사할린이 되었다.

23) 굵고 붉은 표시 : 인용자

24) アナトーリー・チモフェーエヴィチ・クージン 著, 岡奈津子・田中水絵 共訳, 『沿海州・サハリン近い昔の話 : 翻弄された朝鮮人の歴史』, 凱風社, 1998, 171~172쪽

25) 정혜경,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의 화태(樺太) 인식」, 『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 두리미디어, 2007, 269쪽

<표 2> 남사할린 거주 인구 (단위 : 명)²⁶⁾

연도	총인구	일본인	원주민	외국인	중국인	조선인		
						남	여	총수
1906	12,361	10,806	1986	227	13	17	7	24
1921	103,630	101,329	1724	96	19	434	28	462
1925	189,036	183,742	1724	161	203	2,324	882	3,206
1930	284,930	277,279	1933	184	175	3,703	1,656	5,359
1935	322,475	313,115	1955	249	103	4,521	2,532	7,053
1936	321,765	312,926	1876	237	122	4,231	2,373	6,604
1937	326,946	318,321	1746	218	69	4,153	2,439	6,592
1938	339,357	329,743	1648	233	108	4,803	2,822	7,625
1939	355,330	344,342	1666	225	101	5,915	3,081	8,996
1940	398,838	380,803	1660	213	106	11,661	4,395	16,056
1941	406,557	386,058*	425	202	104	13,603	6,165	19,768
1943*	-	-	-	-	-	18,213	7,552	25,765
1944*	-	-	-	-	-	-	-	26,825

* 1941년의 일본인 통계에는 아이누인 포함

<자료> 『樺太要覽』, 『樺太廳統計書』, 『樺太廳治一斑』(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編, 『朝鮮人強制連行強制勞働の記録 - 北海道千島樺太編』, 現代史出版會, 1975, 352쪽 재구성)

1920년대 중반 남사할린 거주 조선인의 다수는 연해주나 북사할린 이주자들로 추정한다. 1925년 일본이 북사할린에서 철병할 때 북부에 거주하던 조선인 중 일부도 남하했기 때문이다. 1925년 이후 국가총동원법 공포 이전까지 남사할린 거주 조선인들의 이동 경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해주·북사할린을 거쳐 남사할린으로 이동하는 경로다. 둘째, 조선으로부터 직접 남사할린으로 이동하는 경로다. 세 번째 일본 내 거주 조선인의 남사할린 이동이다. 지리적 근접성으로 볼 때 홋카이도 거주 조선인들의 사할린 입도가 두드러졌을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중반 후 중일전쟁 발발로 석탄의 수요가 증가하자 남사할린의 탄전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섰고, 1939년부터 조선인의 강제동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만주, 남양군도와 동일하게 한발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중심으로 강제동원을 실시했다. 남사할린에 동원된 조선인은 탄광 외에 제지공장, 삼채별장, 군시설공사장(비행장 등)에 약 3만 명 이상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림 5 삭쇼르스크에 남은 옛 합숙소(나가야)의 모습.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은 찾을 수 없다 (2005.8.6. 위위회 촬영)



그림 6 옹덩이만 남은 가네보 소속 탄광 갱구(삭쇼르스크)

26) 허광무·정혜경·김미정,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동북아역사재단, 2021, 353~354쪽

27)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사할린

4) 일본

조선인의 도일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선의 개항이고, 두 번째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다. 강제병합에 따른 국권 상실로 조선인의 법적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일본이 총력전 체제기에 들어간 후 일본으로 강제동원을 본격화한 1939년(조선인 노무자 내지이주에 관한 건)이다.

조선인 도일정책은 1910년부터 1939년간에도 일본의 경제 상황, 당국의 정책 수립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했다. 그러나 조선인의 도일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의 요구는 당국의 정책 방향을 넘어 자연스럽게 비합법적 방법을 넘나들었다.²⁸⁾

<표 3> 일본 거주 조선인 현황 (단위:명)²⁹⁾

연도	거주 조선인 규모			연도	거주 조선인 규모		
	(1)	(2)	(3)		(1)	(2)	(3)
1882	4			1924	118,152	168,002	172,130
1895	12	12		1925	129,870	187,102	214,657
1896	19			1926	143,798	207,853	247,358
1898	71			1927	165,286	246,515	308,685
1900	196			1928	238,102	341,737	358,121
1905	303	303		1929	275,206	387,901	398,920
1907	459	459		1930	298,091	419,009	419,009
1909	790	790		1931	311,247	437,519	427,275
1911	2,527		5,728	1932	390,543	504,176	433,692
1912	3,171		7,796	1933	456,217	573,896	500,637
1913	3,635	3,952	10,394	1934	537,695	689,651	559,080
1914	3,542	4,176	12,961	1935	625,678	720,818	615,869
1915	3,917	5,064	15,106	1936	690,501	780,528	657,497
1916	5,624	7,225	17,972	1937	735,689	822,214	693,138
1917	14,502	17,463	22,218	1938	799,878	881,347	796,927
1918	22,411	27,340	34,082	1939	961,591	1,030,394	980,700
1919	26,605	35,995	37,732	1940	1,190,444	1,241,315	1,241,315
1920	30,189	40,755	40,755	1941	1,469,230	1,469,230	1,484,025
1921	38,651	48,774	62,404	1942	1,625,054	1,625,054	1,778,480
1922	59,722	82,693	90,741	1943	1,882,456	1,768,180	1,946,047
1923	80,415	112,051	136,557	1944	1,936,843	1,911,307	2,139,143

(1) 『日本帝國統計年鑑』, 해당연도

(2)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研究』, 新紀元社, 1957, 23~29쪽

(3) 田村紀之, 「內務省警保局調査に依る朝鮮人人口(1)」, 『經濟と經濟學』46, 1981, 58쪽

1910년대 도일 조선인이 유학생과 관공리 중심이었다면, 강제병합 이후 1920년대 조선인의 직종은 노동자 중심이었다. 1920년대 도일한 조선인은 1920년대 후반부터 정착에 들어가 1930년대에 안정적인 생활권을 확보했다.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실태 및 귀환』, 2011, 22~28쪽

28) 정혜경, 『항일과 친일의 재일코리안운동』, 도서출판 선인, 2021, 42~50쪽

29) 정혜경, 『일제시대 재일조선인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1, 48쪽

<표 4> 주요 도시의 조선인 직업별 현황 (단위 : 명/%³⁰⁾)

직종	학생	노동자*	상업업	관공리*	기타	총수	
시기	1915.12						
지역	오사카	8/2.0	315/79.0	22/5.5		54/13.3	399
	도쿄	362/66.0	104/12.2	67/12.2	7/1.3	9/1.6	549
	후쿠오카	1/0.2	418/76.4	85/15.5		43/7.9	547
시기	1917.12						
지역	오사카	10/0.5	2,130/95.3	24/1.1	7/0.8	64/2.9	2,235
	도쿄	436/47.5	380/41.4	90/9.8	8/0.9	4/0.5	919
	후쿠오카	2/0.1	1,337/96.4	33/2.4	2/0.1	12/0.9	1,386
시기	1920.6						
지역	오사카	10/0.2	4,362/97.1	89/2.0		33/0.7	4,494
	도쿄	988/46.6	941/44.4	102/4.8	22/1.1	67/3.2	2,120
	후쿠오카	1/0.02	6,956/98.9	16/0.2	3/0.1	57/0.8	7,033

* 노동자 : 무직자와 직공, 배달부, 인력거꾼, 고용인 등 포함/관공리 : 관리, 의사, 목사, 군인 등 포함

<자료> 內務省 警保局, 「朝鮮人概況」1916(朴慶植,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 三一書房, 1975, 58~59쪽); 內務省 警保局, 「朝鮮人概況」제2, 1918(『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 62쪽); 內務省 警保局, 「朝鮮人概況」1920(『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 117~119쪽)

조선인의 도일 배경에도 한반도의 대가뭄(한발)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1932년 가뭄은 비교적 수리시설이 잘 갖추어진 경상-전라도 곡창지대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경남에서만 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였다. 1935년 가뭄은 3월~5월간 북부지방에, 6월~8월간 남부지방에 피해를 주었다. 피해는 전국적이었으나 충청도와 전라도의 피해가 가장 심했다. '3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할 정도의 극심한 재해로 전남에서 발생한 이재농가가 10만 호였고 전북에서도 6만 7천 호에 달했다.³¹⁾ 가뭄의 여파는 1936년 춘궁기까지 이어졌다.



그림 7 하자마구미(間組)가 세운 구마모토(熊本)현 히사쓰(肥薩)선 철도공사장 추도비. 뒷면에 1908년 3월 16일에 사망한 경기도 남양주군 출신 최길남(33세)의 이름이 있다.(2020.2.15. 촬영)



그림 8 1936년 오사카시 이카이노(猪飼野) 상점가 모습(在日韓人歷史資料館, 『在日韓人歷史資料館圖錄』, 39쪽)

30) 총수 대비 비율

31) 《동아일보》 1932년 11월 3일자; 1935년 8월 20일자; 9월 7일자; 11월 13일자

1939년부터 조선인 노무자의 일본지역 동원이 시작되면서 이미 도일한 기주조선인과 다른 성격의 조선인이 일본 땅을 밟았다. 전시이입노무자로 불리던 강제동원 조선인은 규모에서 기주조선인을 압도했다. <표 3>은 기주조선인과 강제동원 조선인을 포함한 통계이다. 이 통계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규모를 살펴보면, 노무동원 1,020,125명이고, 군무원이 60,668명이었다.³²⁾ 군인으로 동원된 조선인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2. 귀환의 길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공식 발표한 포츠담 선언 수락은 한민족의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귀환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귀환의 길은 쉽지 않았다.

8월 21일, 일본 정부는 「조선인 징용공 징용해제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조선인 노무자의 귀환이 아닌 ‘기민(棄民)’을 의미했다. 식민지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조선인 인구에 대한 ‘방치’와 ‘기민’은 일본을 포함한 전체 제국 일본 영역에서 발생했다. 같은 시기 다른 제국과 차이점이자 제국 일본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1) 일본

“종전의 대혼란의 와중에 재일조선인의 귀국심이 화살과 같아 민족의 해방과 조국으로 귀환을 외치며 시모노세키(下關), 센자키(仙崎), 하카타(博多), 사세보(佐世保), 마이즈루(舞鶴), 하코다테(函館), 우라가(浦賀) 혹은 미이케(三池), 우스노우라(臼の浦), 모지(門司), 하기(萩), 나나오(七尾), 니가타(新潟), 오타루(小樽), 무로란(室蘭) 등의 항구에 쇄도했다. 그들은 편선(便船), 전선선 또는 부산 마산 여수 등지에서 일본으로 귀환하는 일본인을 태운 배를 잡아 무궤도의 상태로 귀향했다. 그런 배도 타지 못한 사람들은 방황하며 거세게 항의해 매일 관계 당국에 진정활동을 했다. 그 중에서도 집단이입노무자의 동요가 심해 귀국을 둘러싼 분쟁이 각지에서 발생했다.”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소장한 자료 『태평양전쟁 종결에 의한 구 일본 국적인의 보호인양관계 잡건 조선인 관계1』에 수록된 기록이다. 귀국을 향한 조선인의 열망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일본 당국의 실태를 잘 볼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임시열차 증편이나 배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선박 부족이라는 현실은 극복할 수 없었다. 일본 당국은 전쟁 중에 군용선은 물론 민간 상선까지 수송선으로 징발했는데, 엄청난 선박 손실로 인해 멸절한 선박을 찾기 어려웠다. 전쟁 초기 기획원은 선박의 연간 상실량을 80~100만 톤 억제에 성공한다면 1941년도 물동계획수준의 물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1942년도 선박 상실량은 이미 100만 톤을 넘었고, 1943년의 선박 상실량은 전년 대비 두 배가 넘었다. 선박 보유율 지수도 1944년에는 40%에 불과했다. 그나마 남은 몇 안 되는 선박도 일본 항구가 아니라 대부분 멀리 떨어진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해상에 있었다.

전선으로 나간 선박이 돌아오는 데 기간이 필요했고, 생산성 절감을 우려한 당국과 기업들이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일본의 패전 소식을 알리지 않기도 했다. 이 같은 당국과 기업의 무책임과 비협조

32)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135쪽

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선박을 구하지 못하거나 귀환 비용을 받지 못해 귀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화살과 같이' 돌아가려 한 한인 수만 명이 주요 항구에서 노숙하며 몇 개월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로 1945년 8월 15일 직후에 귀국선을 탄 강제동원 피해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니가타현 사도시의 미쓰비시광업(주) 소속 사도(佐渡)광산의 조선인 광부는 11월이 되어서야 귀국길에 올랐다. 일본 동북 지역과 홋카이도의 귀국 시기는 더욱 늦었다. 1946년 2월에 홋카이도에서 귀국을 기다리는 조선인 노무자는 7만 명이였다.³³⁾

일본이 이른바 '계획수송'이라 불리는 체계적인 조선인 귀환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 일본지역 조선인 귀환 현황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조직정비시기인데, 1945년 8월~11월까지이다. 제2기(1945년 12월~1946년 3월)는 계획 준비 시기이고, 제3기(1946년 4월~12월)는 계획 송출 시기로서 가장 많은 인원이 귀환한 시기이다. 이 가운데 제1기는 제대로 귀환 준비도 시작하지 못한 시기이다. 조선인 귀환과 관련한 최초의 일본 정부 통달은 9월 1일자 「조선인 집단이입노무자 등의 긴급조치에 관한 건」인데, 귀환에 대한 기본방침만 있을 뿐, 언제부터 몇 명을 어떻게 수송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전혀 없다. 구체 계획이 나온 것은 9월 12일 철도총국 업무국장이 내린 통달 「관부(關釜. 시모노세키-부산) 및 박부(博釜. 하카타-부산) 항로 경유 여객수송의 건」이 최초이다.³⁴⁾

조선인의 귀환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해난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재 귀환 조선인의 해난사고에 대해서는 전체 현황을 알 수 없다. 우키시마호(浮島丸) 사건이나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조난 사건 등 일부가 알려졌을 뿐이다.³⁵⁾

2) 명부로 남은 남양군도 귀환 동포

1944년부터 중부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의 포화가 그치기 시작했다. 일본군이 전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이듬해에 끝났다. 1945년 9월 2일, 아이라이(Airai) 앞바다에 정박한 미군 구축함에서 미일 정전문서 조인식을 가진 후, 미군은 남양청 본청이 있던 팔라우에 미군정청을 설치했다. 이로써 태평양의 전쟁은 끝났다.

지역별 귀국 과정을 보면, 티니안에서는 1944년 8월에 미군이 상륙하면서 2,400명의 조선인을 일본인과 분리 수용했다. 그리고 미군정이 시작되자 조선인들은 자치 조직을 만들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미군정부로부터 경찰권까지 얻어냈다. 그들은 자치 조직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귀환 문제를 협의하여 귀국할 수 있었다. 팔라우에서는 티니안보다 좀 늦은 시기인 1945년 9월 2일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조선인을 가려내는 작업을 했다. 팔라우 지역의 조선인들은 자치회를 조직하고 산속에 흩어진 동포들 3,600명을 모았다. 이들은 귀국을 기다리며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고 필요한 밀가루나 통조림 등 식량을 구하기도 했다. 팔라우의 일본인들은 1945년 10월부터 귀환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조선인은 귀환하지 못하자 자치회가 미군정에 항의하여 1946년 1월에 2,400명이 귀국할 수 있었다.³⁶⁾

33) 정혜경, 「조선인 연초배급명부」로 본 미쓰비시(三菱) 광업 사도(佐渡)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43, 2022, 81쪽;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輯委員會·札幌學院大學北海道委託調査報告書編輯室, 『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北海道廳, 1999, 417쪽

34)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 광복』, 글모인, 1995, 23~24쪽, 114~142쪽

35) 상세한 내용은 허광무·정혜경·김미정, 앞의 책, 531~532쪽 참조

36) 정혜경, 『조선청년이어, 황국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2010, 114쪽



그림 9 하카타항에서 귀환을 기다리며 식사 준비하는 모습(재일한인역사자료관 편저, 『재일한인역사자료관도록 - 사진으로 보는 재일코리아 100년』, 2008, 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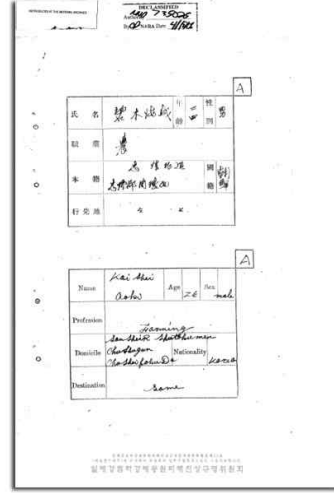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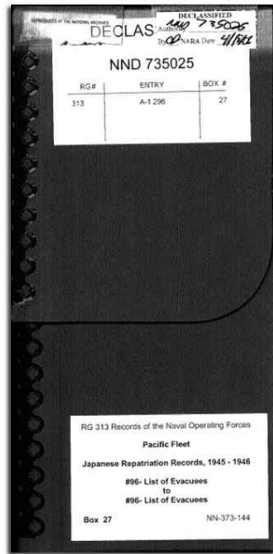


그림 10 남양군도 귀환자 명부 표지 및 명부 내용 중 일부

미군정청 설치 후 중부 태평양에 동원된 한인들은 귀국선에 뒀고, 귀환을 담당했던 미군은 관련 자료를 남겼다. 1945년 10월 16일부터 1946년 3월 28일까지 배에 오른 조선인들의 명단이다. 자료의 제목이 없으므로 '승선자 명부'나 '귀환자 명부'라고도 부른다.

남양군도 귀환자 명부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연합군이 작성한 자료이다. 남양군도 재류 조선인의 본국 송환을 위해 미군이 직접 작성하거나 미군의 명령에 따라 일본인이 작성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 국립문서기록청(NARA)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입수해 2006년 8월 11일에 일반에 공개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청에 「Records Group 313 미해군태평양함대 일본인송환자기록 1945~1946 중 한국인승선자귀환명단자료」라는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다. 총 39권의 문서철에 11,324명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귀환지, 소속 부대, 동원 전 국내 주소 및 본적지 등이 한자와 영어로 기재되어 있다. 이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조선인 귀환자도 있으므로 남양군도 조선인의 총수로 볼 수 없다. 이 가운데 민간인(노무자와 가족들)은 7,105명이고, 군무원은 3,990명, 군인은 229명이다. 출항한 항구는 4개소(사이판, 티니안, 팔라우, 로타, 축)이다.

하와이에서 귀환한 이들도 있었다. 사이판이나 축, 타라와의 조선인과 티니안에 있었던 한인 2,600여 명이 미군 포로가 되어 1944년과 1945년 초에 하와이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미군에 항복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호놀룰루 외곽의 호놀울리울리에 수용되었다. 비록 포로수용소이기는 하지만 하와이에 한인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동포들과 미군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치 조직을 만들고 주간지(〈자유한인보〉)도 발간하다가 1945년 12월과 1946년 1월에 귀국했다. 광복 이후 국내 신문과 잡지 기사에 따르면 총 2만 5,733명이 귀국했다. 일시에 돌아온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947년 초에는 대부분 귀환했다.³⁷⁾

37) 상세한 내용은 김도형, 김도형, 「태평양전쟁기 하와이 포로수용소의 한인 전쟁포로 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 22, 2002) 참조

3. 미귀환 - 사망과 행방불명자

국권상실과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조선인들은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없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전쟁 과정에서 공습으로 사망한 인원도 적지 않다. 연합군이 실시한 공습의 큰 피해지역은 일본과 격전지인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이다. 중국 관내에서는 일본군이 자행한 공습의 피해가 심했다.

일본지역의 현황을 보면, 후생성 기록(육해군관계문서)은 일본 전국에서 조선인 이재자를 239,320명으로, 협화회 관계 서류는 250,069명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이재자는 대도시에 거주하던 기주조선인이었다. 조선인 이재자의 지역별 분포에서 만 명 이상을 차지한 지역은 오사카(83,900명), 도쿄(51,300명), 효고(20,500명), 히로시마(12,900명), 후쿠오카(10,200명), 가나가와(10,100명)다.³⁸⁾

일본 외 지역에서 공습 등 재해재난 사고로 사망한 조선인의 현황은 알 수 없다. 강제동원 조선인의 사망 및 행방불명자 피해 현황도 추정만 할 뿐이다. 현재 한국 정부나 학계는 강제동원 조선인의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가 추정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중 사망·행방불명자의 규모와 통계는 약 20만 명에서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다. 재일사학자 박경식(朴慶植)은 2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했다.³⁹⁾ 김민영은 노무자 사망자 43만여 명, 군인·군속 사망자 121,566명 등 55만여 명으로 추산했다.⁴⁰⁾ 지역별로는 일본지역 노무자 사망자를 1만명(원폭 등 재해 사망자 제외)으로 파악한 연구가 있다.⁴¹⁾ 이 가운데 모리아 요시히코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계는 과다 추정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 성과 및 일본 정부 자료를 통해 사망·행방불명자 통계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지역 노무자 1만 명, 재해자 5만 명(원자폭탄 약 4만 명, 도쿄공습 약 1만 명)이고, 기타 해외 지역의 노무자는 알 수 없다.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는 일본 후생성의 통계(조선인 사망 및 행방불명 비율 55.9%)를 군인 군무원 동원 통계(272,591명)에 적용하면, 172,650명이 된다. 이를 종합하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사망·행방불명자 추산치는 최소 23만 명이 된다.⁴²⁾ 이 통계는 일본을 제외하면, 군인과 군무원 통계 중심이므로 정확한 사망행방불명자 통계는 각 지역별 조사를 완료해야 산출할 수 있다.

4. 미귀환 - 이산, 정주, 역이민

1) 일본

해방 당시 2백만 명에 달하던 한인 가운데 해방 후 귀환자 100만 명이고, 일본에 남은 이가 100만 명 정도이다. 100만 명이거나 되는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귀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한인 귀환의 책임을 질 의지나 대책이 없었고, 연합국군총사령부(GHQ)는 한인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1945년 10월 15일 지령 각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비(非)일본인을 송환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제한(1인당 들고 갈 수 있는 화물의 무게 1인당 113.4kg과 1,000엔 이하)을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이다. GHQ가 화물과 현금 소지를 제한한 이유는 일본의 경제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화물제한 조치는 1946년 8월에 완화되었다.

38) 정혜경, 『항일과 친일의 재일코리아운동』, 도서출판 선인, 2021, 397쪽

39)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来社, 1965, 91쪽

40)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연구』, 한울출판사, 1995, 46쪽, 48쪽

41) 守屋敬彦, 「朝鮮人 被強制連行死亡者の遺骨・遺族扶助料」, 『季刊 戦争責任研究』55호, 2007, 4~5쪽

42) 해방 직후 귀국 과정에서 발생한 해난사고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주로 강제 동원된 사람들은 귀국선에 올랐으나, 전쟁 이전에 도일한 기주자들은 당국의 조치가 풀리기까지 기다렸다.

같은 시기, 한반도의 사정은 좋지 못했다. 수백만의 귀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회가 혼란해졌다. 콜레라가 극성이었고 인플레가 대단했으며, 주택난도 심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귀국자들 사이에 일명 '선회(旋回) 도일'이라 부르는 역밀항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재일동포 사회이다. 그러므로 현재 재일동포 사회의 중심은 강제동원 조선인이 아닌 기주조선인이다. 이후 제주4.3사건 등 한반도의 격변에 따라 밀항자가 추가되었다.

1982년에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광복 당시 귀환하려 한 동포들은 6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들었다. 일본의 방기와 모국의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정주이다. 그러나 귀국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았으므로 해방 이전부터 있었던 교육의 전통을 이어 1945년 9월부터 노천교실에서 등사판(謄寫版)으로 만든 교과서로 민족교육을 시작했다. 1946년에는 6.3제 학제를 도입하고 1948년에 학생이 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왕성했다. 당시 한인 아동의 취학률은 100%라고 알려진다. 1948년 1월 GHQ의 통달과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전국 200여 개에 달하던 학교는 강제 폐쇄당했으나 5월에 타협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민족학교와 민족학급을 이어나가고 있다.

1945년 9월 4일 도쿄에서 결성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조선인연맹이 전국 조직으로 자리잡았으나 1949년에 강제로 해산되었고, 1946년 3월에 재일한국거류민단이, 1955년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가 각각 문을 열었다. 이로써 동포 사회의 중심점은 두 단체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후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신청을 하지 않은 총련 소속 한인들은 무국적 상태에 놓여 일제강점기 국적인 조선적(朝鮮籍) 상태에 머물게 되었고, 일본과 북한은 공식 외교 관계가 없으므로 총련은 외교 공관의 기능도 겸했다.⁴³⁾

1958년부터 시작된 '귀국운동'으로 적지 않은 재일동포들이 고향인 남한 대신 북한을 택했다. '귀국운동'의 배경은 일본 정부의 기민정책과 북한 정부의 대일민간외교의 성과라 할 수 있다. 1956년 4월 재일동포 48명이 일본적십자사 본사 앞에서 북한귀국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후 이들이 그해 12월 일본과 북한의 적십자사 알선으로 적십자국제위원회의 비자를 받아 북한으로 귀국한 후 1958년 재일동포들의 집단귀국 의사를 담은 편지에 대해 김일성 수상과 남일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화답하면서 재일동포 사회에서 '귀국운동'은 본격화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9~1984년간 약 9만 3,340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⁴⁴⁾

주로 남한 출신자들이 북한행을 택하게 된 배경에는 한반도에 수립된 정부가 보인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도 자리하고 있었다. 1954년 8월 30일 남일 외상의 성명에서 '공화국 공민' 발언은 차별적인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던 재일동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는 재일동포의 존재를 방기했고,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및 제협정(이하 한일협정)」에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협정'을 통해 영주권 문제, 강제퇴거 문제, 본국으로의 귀환 때 재산의 처리 문제를 규정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규정한 기본조약 제3조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가 되는 상황은 재일동포 사회의 분열에 영향을 미쳤다. 그 외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서도 재일동포의 재산과 권리 및 이익을 제외하는 등 한일협정 체결은 재일동포 사회에 소외감과 상처를 남겼고, 법적 지위 문제나 참정권 문제는 현재도 재일동포 사회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지금도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상황은 그대로 재일동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재일동포

43) 정혜경, 『조선청년이어, 황국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2010, 356~359쪽

44) 상세한 내용은 테사 모리스 스투키 저, 한철호 역, 『북한행 액세스』(책과함께, 2008) 참조

사회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을 바라보는 ‘모국 지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재일동포들은 가장 역사가 깊은 오사카지역의 코리아타운을 비롯해 도쿄의 신오쿠보(新大久保), 교토, 가와사키(川崎), 나고야 등지에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올드커머와 뉴커머들이 ‘한류와 혐한류’를 경험하며 일본 사회와 공생하고 있다.⁴⁵⁾

2) 남양군도 - King이라 불리는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남양군도로 간 사람들이 모두 귀국한 것은 아니었다. 1917년에 니시무라 척식(주)의 모집으로 사이판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 원주민과 결혼해서 정착하거나 전투 중 정글에 숨어 있다가 원주민이 사는 섬에 들어가 같이 생활한 조선인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람은 전경운(全慶運, 일명 마쓰모토)이다.

1915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나 오산학교를 다닌 전경운은 도쿄고등척식학교 졸업 후 난요(南洋)무역(주)에 취직해 남양군도로 갔다. 회사에서는 척식과 소속으로 남양군도 전역에 있던 야자원을 관리했다. 1939년 견습 사원으로 사이판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파간섬에서 해군비행장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일본 패전을 맞았다. 전경운은 남양군도에 갈 당시 고향에서 조혼해 자식도 있는 상태였으나 전쟁 기간 중인 1944년 마리아와 결혼해, 해방 후 광을 거쳐 티니안에 정착했다. 배우자인 마리아는 조선인 아버지인 유성만과 스페인계 차모로 원주민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성만은 1917년 사이판에 인부로 왔던 조선 청년 중 한 사람인데, 이후 로타 섬에서 면화 재배 인부로 일하다가 결혼했다. 전경운은 1946년 수용소 동료들이 귀국선을 탈 때, 현지에 남아 마리아나 사회에 정착했다. 차모로 사회의 일원이 된 전경운은 티니안에서 두 종류의 회고록(1981년 ‘남양살이 40년을 회고’, 1995년 ‘한족 2세 3세가 천인안도에 살고 있는 혼혈아들’)을 남겼다.⁴⁶⁾

전쟁 말기에 오키나와인이나 일본 본토인과 결혼한 조선인도 있었고, 일본인과 원주민의 혼혈 여성과 결혼한 조선인도 있었다. 현재 티니안의 인구는 2,500명인데, 원주민 인구의 40% 이상이 한국인 핏줄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이들이 그곳에 남은 이유는 현지의 아내와 자식을 생각해서기도 하지만, 귀국선을 탔다가 아내가 항구에 쫓아와 미군에 항의하는 바람에 배에서 내리게 된 경우도 있었다. 원래 이곳 원주민 사회는 모계 중심이어서 여성의 발언권이 매우 강했으므로 미군이 원주민 아내를 둔 조선인들을 배에서 내리도록 해서 현지에 남았다.

2005년 부산방송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잊혀진 성, King>을 보면 유독 현재 이 지역 주민(한인)들의 성씨 가운데 King이 많은데, 그것은 김이 ‘King’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崔)’는 일본식 발음대로 ‘사이’가 되었다. 현재 중부태평양의 한인들은 일제강점기에 잔류한 이들의 후손도 있지만 대부분 1970년대 이후 이민자들이다. 사이판에 가장 많아서 3,000명 정도이고, 티니안에는 500명 정도 있다. 그 외 지역에는 수십 명 단위의 동포들이 살고 있다.⁴⁷⁾

45) 상세한 내용은 황익구, 『재일코리아의 이주와 정주 - 코리아타운의 기억과 지평』(도서출판 선인, 2021) 참조

46) 정혜경, 『팩트로 보는 일제말기 강제동원1- ‘남양군도’의 조선인 노무자』, 도서출판 선인, 2019, 20~22쪽

47) 정혜경, 『조선청년이야, 황국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2010, 116쪽

TINIAN 의 역사·태력을 논하면서 한민과의 인연

보통서 Mariana에서 사라온 Chamorro 라는 이름 주민의 역사를 내가 아는 대로 대략 써볼까 합니다. 역사 학자가 아닌 필자를 가만하여 믿어 주실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중략)

자문과 해법은 마니코코베스와 각섬마다 원주민들이 사라지고있는데 그 이유에서 이후 해문점이 분명히 없다며 2000년 전 불이 이 섬에서 사라진 모양입니다. 다른 섬들과 달리 남자가 죽지 않고 그의 딸처럼 살았으며 낙원성이며 후로 해변에서 고기잡이를 한 것은 미남이며 체격도 장신, 이성은 추상, 왕도 없고 다만 약자인 단위로 출장 품앗이를 전이하고 공적이라는 것이 전해졌다는 것은 처음 방문한 Spain 의 Magellan 의 일지책에 기록 되었으며 1512년 Guam 남안 무마닥촌 앞 바다에서 한달 동안 정박 감시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 말이 내세로 옮겨와 후로 해변에서 수염 원주민이 배우를 향하여로 무뎠이건 가다가 버린 뒤랍니다. Magellan 은 떠나기 직전 태도를 하여 선원들 동원시켜 섬 장부작성에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지책에는 '도적맞인들'이라고 명사했다고 합니다.

RAPOWESIA (Islands of the F) 에

모든 Spain 공략 한리가 아가나 왕(왕) 산바와에 정박 부드 한적한 상륙선이 Spain 국기용세우고 칼뿔고 이 섬은 Spain 왕의 소유임을 선언하고 Spain 의 PHILIP 11세 왕, 서명된 포도도 동방의 동로가서했다. 원주민들은 죽거나 혼수에 넘어가 버렸다고만 있었으나 1565년이였다.

1825-1828년에 걸쳐 100년 동안은 정부 관공서와 직원과 불이 상주하도록 Spain 의 전술들의 중하게 지휘되고 과거원가환 상주할수있는 Camp 가 세워졌다. 이 때까지는 원주민들은 산의 라코브전연 하산하고 다만 Spain 의 Philibin은 약탈해가 가본 선단에게 음독수와 야채 과일 등을 보충해주는 것만 섬 주민 무관하다

Spain 의 항 Marina 가 자선사에서 같은 중도의 사은 원주민이라고 재빨리 지었고, 같은 사면대우를 허락하며 조정성이었다. 이제부터 자기 이름을 마리아나,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하게 된다는 선언이였다

그림 11 전경운, 『韓族 2세 3세가 天仁安島에 살고 있는 混血兒들』, 1995년 7월, 프린트물

7 A

1916	1916	1916	1916	1916	1916
306	308	309	310	311	312
1916	1916	1916	1916	1916	1916
1916	1916	1916	1916	1916	1916

13

그림 12 박노학이 귀국운동을 위해 작성한 자료(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지상규명위원회 소장 자료)

3) 남사할린 -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

남사할린은 이산의 상징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항복하고 조국은 광복을 맞았으나 남사할린의 조선인은 '얼어붙은 땅'에 '억류된 동포'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일선전포고를 발령한 소련은 1945년 8월 8일 남사할린으로 진격해 23일 도요하라(유즈노사할린스크)에 진주하고 소야(宗谷)해협을 봉쇄했다. 1946년 3월 연합국군총사령부(GHQ)는 「귀환(引揚)에 관한 각서」를 공표하고, 이를 기초로 도쿄에서 「소련지구귀환에 관한 미소협정」을 체결(12.19)했다. 이에 따라 1947년 봄부터 1948년 여름까지 남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있던 일본 국민 264,063명(아이누 포함)이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이 자국민의 송환에는 적극적이었으나 한인 송환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사할린 한인들의 귀환을 미·소 양국에 건의할 책임이 있었으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소 간 협정에 따라 사할린 거주 일본인의 집단귀환이 결정되자, 귀환대상자를 '일본 호적에 입적된 일본인'으로 한정해 한인을 귀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도 사할린 거주 한인 문제에 대한 별다른 이익을 제기하지 않고 협정을 소련과 체결함으로써 한인을 송환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한반도 남쪽을 차지하고 있던 미군정은 '한인의 귀환이 사회 안정을 해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소련도 한인 귀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후에는 한인의 귀국 길을 막아버렸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한인의 귀환은 고려하지 않았다.⁴⁸⁾

일본은 남사할린에 남은 약 8만 명의 잔류 일본인들을 송환하기 위해 소련 측과 교섭해 「일소공

48) 상세한 내용은 방일권, 「이루어지지 못한 귀환 : 소련의 귀환정책과 사할린 한인」(『동북아연구논총』 48, 2015); 이연식·방일권·오일환,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채륜, 2018) 참조

동선언」을 발표(1956.10.19)했다. 이 선언으로 사할린 잔류 일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인 한인의 일본 송환 길이 열렸다. 그 결과 1957년 8월 1일부터 1959년 9월 2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일본인 766명과 동반 가족인 한인 1,541명이 귀환했다. 이로써 일본인 송환은 완료되었으나 한인의 합법적 귀국길은 막혀버려 1990년 한소수교 체결까지 기다려야 했다.

조국의 해방과 함께 찾아온 이산이다. 이 외 사할린 한인의 이산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는 한반도의 분단과 영주귀국을 들 수 있다. 일부 사할린 한인들이 강제추방과 여러 이유로 북한으로 갔는데, 이들의 고향은 대부분 남한이므로 고향에 있는 가족과 이산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 다른 이산의 배경이 된 영주귀국은 '사할린의 우편배달부'로 불렸던 박노학(朴魯學, 1912~1988)의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박노학이 일본에서 시작한 '귀국운동'은 1992년 영주귀국으로 결실을 이루었다.⁴⁹⁾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은 1992년에 실현되어 2021년 9월 말 현재 전국 19개 영주귀국촌에 4,408명이 귀국했다. 1985년부터 실시한 '일시모국방문사업'은 영주귀국의 전 단계로서 촉매제 역할을 했다.⁵⁰⁾ 영주귀국은 한인 1세(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만이 귀국 대상이므로 새로운 디아스포라(이산)를 낳았다. 2020년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부 보완했으나 특별법과 함께 다른 관련 법령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이산'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만주

전쟁이 끝난 후 중국에 있던 한인들은 귀환 준비에 분주했으나 귀환 과정은 어려웠다. 일단 일본군에 소속되어 있던 군인과 군속은 일본군이 무장 해제된 이후에도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다가 귀환 허가를 받았다. 중국과 만주지역 한인의 귀환이 늦어진 이유는 일본군이 주둔하던 지역이 넓어서 무장 해제된 시기가 달랐던 이유도 있고, 중국의 내부 사정 때문이기도 했다. 중국의 정치 세력이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뉘는 데다가 군벌들의 세력도 나뉘어 있어 일관된 지시나 정책이 어려웠다. 또한 중국인들이 한인을 일본인으로 오인해 귀국이 늦어진 까닭도 있다. 군인이나 군속으로 동원된 사람들은 단체도 만들고 당국에 배를 요구하기도 할 수 있었지만, 집단농장에 갇힌 사람들은 스스로 집을 꾸려서 고향으로 와야 했다. 귀환 과정에서 추위와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당시 만주 상황도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일단 이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만주로 떠날 때는 당국의 여러 가지 약속을 믿고 갔는데, 황무지에서 몇 년간이나 고생했지만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다. 게다가 한반도의 정세는 불안했으므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다 국공내전을 맞으면서 길이 막혀 중국에 동포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략 100만 명이 귀국했고, 130만 명 정도가 중국에 남은 것으로 알려진다.⁵¹⁾

재중동포 사회의 중심이라고 하면 지린(吉林)성에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다. 조선족자치주는 최근 한인의 비율이 줄어서 자치주 유지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지만, 여전히 한인 동포들에게는 삶의 구심점이다. 1945년 8월 20일 소련군과 동북항일연군은 간도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해 11월 중국공산당은 간도 임시정부를 해산한 후 '연변행정독찰전원공사'를 설치, 1948년 3월에 연변전구를 창립했다. 1952년 9월 3일 연변전구가 철폐되고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설립되었다. 자치구는 1955년 12월에 연변조선족자치주(소재지는 연길)로 승격되었다. 중국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 중에서 한인들이 자치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중국 혁명사에 기여한 때문이다. 1942년 7월 중국 타이

49) 상세한 내용은 오일환, 「박노학의 생애와 사할린한인 귀환운동에 관한 연구」(『한일민족문제연구』38, 2020) 참조

50) 상세한 내용은 정혜경, 「대한적십자사 소장 사할린 한인 관련 문서를 통해 본 '일시모국방문'(1980~1990년대)」(『한국민족운동사연구』112, 2022) 참조

51) 상세한 내용은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역사비평사, 2008) 참조

항 산(太行山)에서 탄생한 조선의용군은 조선의용대로 바뀐 후 중국 화베이(華北) 지역에서 중국공산당과 함께 일제와 싸워 수없이 많은 전공을 세웠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동북민주연군으로 개편되어 중국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 바로 그 대가가 조선족의 자치주 설립이다. 조선족자치주는 이들의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것이다.⁵²⁾

그러나 일본 패망 후 중국에 정주한 한인의 희생은 그치지 않았다. 국공내전에 동북 3성의 한인 6만 3천여 명이 참가해 3,550명이 전사했고, 1956년 반우파운동으로 조선족 지식인과 기술자 등이 탄압당했으며, 1958년 대약진운동과 1966년 문화대혁명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중수교 후 재중동포 2~4세의 역이민은 2015년 기준 약 48만 명(총 재중동포 270만 명)으로 추산한다. 이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30%에 달하는 규모이다.⁵³⁾

5. 향후 연구과제 - 장소성을 통한 연구

국권침탈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따라 아태지역으로 떠났던 한민족은 해방 후 귀환과 미귀환, 정주, 이산을 경험했다. 그러나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인구 이동, 귀환과 미귀환, 정주, 이산의 역사를 이해하는 후손은 줄어들고 있다. 뉴-커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역사성을 보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공간, 즉 장소성을 통한 연구이다.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떠난 이들은 지금 살아 있지 않지만, 이들이 떠났던 곳에는 일부 그들의 후손과 함께, '귀환과 미귀환, 정주, 이산'의 경험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들의 생활터전이다. 그들의 생활터전은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이 남긴 유적이다. 일부는 전쟁유적이고, 일부는 생활유적이다.

일제강점기에 아태지역에 한민족이 남긴 유적은 과거의 유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방 후 그곳에 정주한 이들의 역사의 더께를 켜켜이 축적하며, 현재진행형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들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이 경험한 역사를 토대로 미래로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

일제강점기에 아태지역에 한민족이 남긴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것은 해당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보존 및 활용 방안 수립이다. 현재 해당 지역별 현황을 파악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관련 자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정혜경 조사자료)가 있을 뿐이다.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한 사례를 들면, 사할린의 경우에는 이 지역이 아시아태평양전쟁기간 중에도 대일전쟁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소련 정부가 남사할린 거주 조선인에 대한 관심이 미미했고, 일본 패전 후에도 사할린 동포를 호의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역사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사할린에서 일본 기업의 영향력이나 러시아연방으로써 관의 주도성이 매우 크다는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활용할 콘텐츠의 성격도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중심으로 적용하는 등 지역에 따른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존과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⁵⁴⁾

52) 정혜경, 『조선청년이어, 황국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2010, 224~225쪽

53) 김상열, 「한민족 디아스포라 개관 및 한국이민사박물관」, 『2016 한국이민사박물관 전문직 및 성인 교육 자료집』, 2016, 9쪽

54) 그러한 점을 감안한 사할린지역의 한인 유적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세 가지이다. 정혜경, 「남사할린 지역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방안」, 『평화연구』29-1, 2019, 63~65쪽

<참고문헌>

- 南洋廳, 『南洋群島要覽』, 각 해당연도
- 南洋廳, 『南洋廳施政十年史』, 1932
- 宮川善造, 『人口統計より見たる滿洲國の綠族複合狀態』, 滿洲事情案内所, 1941
-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来社, 1965
-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戰史叢書-中部太平洋方面海軍作戰』 1, 朝雲新聞社, 1970
- 朴慶植,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 三一書房, 1975
-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연구』, 한울출판사, 1995
-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 광복』, 글모인, 1995
- アナトリー・チモフェーエヴィチ・クージン 著, 岡奈津子·田中水絵 共訳, 『沿海州・サハリン近い昔の話: 翻弄された朝鮮人の歴史』, 凱風社, 1998
-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輯委員會·札幌學院大學北海道委託調査報告書編輯室, 『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北海道廳, 1999
-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9
- 정혜경, 『일제시대 재일조선인민족운동연구』, 국학자료원, 2001
-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朝鮮人戦時労働動員』, 岩波書店, 2005
-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한·일유골정책자료집』, 2006
-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용역보고서 - 만주지역 조선인 강제동원 등에 관한 기초 연구(손춘일)』, 2006
-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할린 ‘이중징용’ 피해 진상조사』, 2007
-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자료집 I』, 2007
- 田中隆一,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有志舎, 2007
-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 - 만주 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2008
- 테사 모리스 스텔스키 저, 한철호 역, 『북한행 액세서스』, 책과함께, 2008
-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용역보고서 - 만주 노무관련 법령 기초조사 - 개척정책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김윤미)』, 2009
-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남양군도 지역 한인 노무자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1939~1941)』, 2009
- 오카베 마키오 지음, 최혜주 옮김,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어문학사, 2009
- 정혜경, 『조선 청년이여 황국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2010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사할린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실태 및 귀환』, 2011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히로시마·나가사키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2011
- 정혜경, 『일본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도서출판 선인, 2011
- 전국역사학대회조직위원회, 『국경을 넘어서 이주와 이산의 역사』, 제54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 자료집, 2011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1944년 도 남양청 동원 조선인 노무자 피해실태조사』, 2012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 이연식·방일권·오일환,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 채륜, 2018
- 정혜경, 『우리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 방안과 사례』, 도서출판 선인, 2018
- 정혜경, 『팩트로 보는 일제말기 강제동원1- '남양군도'의 조선인 노무자』, 도서출판 선인, 2019
- 정혜경·오일환·허광무, 『일제강제동원, 정부가 중단한 진상규명』, 도서출판 선인, 2020
- 허광무·정혜경·김미정,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동북아역사재단, 2021
- 정혜경, 『항일과 친일의 재일코리아운동』, 도서출판 선인, 2021
- 황익구, 『재일코리아의 이주와 정주 - 코리아타운의 기억과 지평』, 도서출판 선인, 2021
- Mark.R.Peaty, 『日中戰爭・太平洋戰爭期の日本の植民地帝國』, 細谷千博他 編, 『太平洋戰爭』, 東京大學 出版會, 1993
- 今泉裕美子, 『サイパン島における南洋興發株式會社と社會團體』, 『近代アジアの日本人經濟團體』, 同文館出版株式會社, 1997
- 손춘일, 「일제의 재만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연구 - 만주국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申奎燮, 「帝國日本の民族政策と在滿朝鮮人」, 도쿄도립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今泉裕美子, 「南洋群島」, 『貝志川市史 - 移民・出嫁』 論考編』, 2002
- 정혜경, 「공문서의 미시적 구조 인식으로 본 남양농업이민(1939~1940)」, 『한일민족문제연구』3, 2002
- 樋口雄一,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自然災害と農民移動」, 『法學新報』109, 2002
- 윤휘탁, 「'만주국' 노동계의 민족구성과 민족간 위상」, 『동아시아 비교와 전망』창간호, 2003(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 今泉裕美子, 「南洋群島經濟の戰時化と南洋興發株式會社」, 『戰時下アジアの日本經濟團體』, 日本經濟評論社, 2004
- 오일환, 「태평양 전쟁 희생자의 유골문제와 일본 : 1950년대 재중일본인, 재일화교 및 유골 송환에 대한 연구 -재일조선인 복송문제의 거울-」, 『한일민족문제연구』8, 2005
- 정혜경, 「일제말기 '남양군도'의 조선인 노동자」, 『한국민족운동사연구』44, 2005
- 정혜경, 「태평양 전쟁 희생자의 유골문제와 일본 : 일제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문제의 본질과 해결을 위한 제언」, 『한일민족문제연구』8, 2005
- 남상구, 「戰後 日本 政府의 「戰歿者」 遺骨 政策 : 「한국인 전몰자」 유골문제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9, 2005
- 守屋敬彦, 「朝鮮人 被強制連行死亡者の遺骨・遺族扶助料」, 『季刊 戰爭責任研究』55호, 2007
- 정혜경,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의 화태(樺太) 인식」, 『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 두리미디어, 2007, 269쪽
- 오일환, 「강제동원 사망자 유골봉환을 둘러싼 한일 정부 간 협상에 관한 소고 -1969년, 제3차 한일 각료회의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17, 2009
- 김명환, 「일제말기 조선인의 남양군도 이주와 그 성격(1939~1941)」, 『한국민족운동사연구』64, 2010
- 김윤미, 「전시체제가 조선인 만주개척청년의용대에 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18, 2010
- 오일환, 「전후 한인유골국내봉환(戰後韓人遺骨國內奉還)을 위한 일본인유골수습(日本人遺骨收拾), 송환(送還)에 관한 연구-1970년대초까지 일본인유골수습(日本人遺骨收拾), 송환사례(送還事例)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24, 2013

- 방일권, 「이루어지지 못한 귀환 : 소련의 귀환정책과 사할린 한인」, 『동북아연구논총』48, 2015
- 김상열, 「한민족 디아스포라 개관 및 한국이민사박물관」, 『2016 한국이민사박물관 전문직 및 성인 교육 자료집』, 2016
- 정혜경, 「남사할린 지역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방안」, 『평화연구』29-1, 2019(제주대학교)
- 오일환, 「박노학의 생애와 사할린한인 귀환운동에 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38, 2020
- 정혜경, 「대한적십자사 소장 사할린 한인 관련 문서를 통해 본 ‘일시모국방문’(1980~1990년대)」, 『한국민족운동사연구』112, 2022
- 정혜경, 「‘조선인 연초배급명부’로 본 미쓰비시(三菱) 광업 사도(佐渡)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43, 2022

중국동포 혐오에 대응하는 역사 수업방안 모색과 실제

곽희정(숙명여자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이론적 배경
 - 1. 중국동포의 귀환과 정착
 - 2.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역사교육
 - III. 중국동포 혐오에 대응하는 역사 수업방안
 - 1. 수업 내용의 방향
 - 2. 수업지도안 설계
 - IV. 중국동포 혐오에 대응하는 역사 수업의 결과 분석
 - V. 맺음말
-
-

I. 머리말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 ‘반중 감정’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¹⁾에 대한 편견적 시선과 혐오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동포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기준조차 경시하는 범죄자 집단으로 인식하거나 이들을 ‘동포’가 아닌 ‘한국말을 사용하는 중국인’으로 여기며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윤인진 외, 2019).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일반 외국인 근로자 세 그룹에 대한 내국인의 혐오감 분석에서 한국인들은 중국동포를 가장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상준 외, 2014).

도대체 왜 한국인은 중국동포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혹자는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경제적 이유를 꼽고(최서리 외, 2016), 혹자는 중국동포의 기본적인 인성과 삶의 방식이 폭력적이고 위험하다는 문화적인 이유를 지적한다(송원찬, 2017). 그리고 혹자는 다문화정책으로 인해 한국인이 중국동포에게 역차별 당한다는 정치적 이유를 들며 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양혜우, 2019).

주지하다시피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언론과 대중매체의 영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범죄도시’, ‘청년경찰’, ‘황해’, ‘신세계’ 등의 영화를 통해 중국동포는 범죄자 집단의 이미지로 한국인에게 낙인되었다. 아울러 한국인의 내면에 뿌리 깊은 편견

1) 본 연구는 대한민국 수립이전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된 후 오늘날까지 중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후 한국으로 유입된 이들을 모두 ‘중국동포’라 통칭하겠다. 참고로 ‘조선족’이라는 이름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의 민족 식별 조사에 의해 중국에 살고 있는 한민족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이름이다.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 중의 하나가 ‘조선족’이다.

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일 것이다.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Wave 7(2017~2022)의 결과에 따르면 에스닉 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소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22%는 ‘이주자 및 외국인 노동자가 내 이웃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독일(3.9%), 영국(4.7%), 뉴질랜드(4.7%), 미국(8.0%), 캐나다(8.8%), 호주(8.9%)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한국인은 빠른 서구화와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경계의 대상’과 같이 차별적으로 구별 짓는 경향이 있어 왔다. 더욱이 후진국으로 여겨지는 나라출신의 이주민집단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로서 ‘동정의 대상’ 또는 ‘일탈과 범죄’ 등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윤인진 외, 2019).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은 백인이면서 선진국 출신의 이주민집단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김종태, 2012). 요컨대 한국인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차별하는 감정이 뚜렷하고, 이러한 경향은 이주민집단에 대한 호감도 면에서도 양면성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하루빨리 단일민족 신화에서 벗어나 다문화사회에 적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등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매체에서 들여다본 국민들의 여론은 이와 다르다. 중국동포를 포함한 이주민집단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단순히 불안을 넘어 혐오와 분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어휘를 살펴보면 ‘범죄자’, ‘불법’, ‘짱깨’, ‘잔악’, ‘폭력’, ‘미개’, ‘추방’, ‘살인’ 등의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윤인진 외, 2019).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인 중국동포를 향해서 혐오감을 분출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번져가는 비인간성과 잔인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다. 아울러 실제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사회적인 분노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인이 중국동포에게 느끼는 혐오감을 역사교육을 통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우선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역사 교육적인 내용을 고민하고, 역사수업 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여부를 검증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을 연구참여자로 선택한 이유는 이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양인으로 유연한 관점과 비판적인 자세로 중국동포를 향한 혐오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역사교육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역사교육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역사교육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치유해 나가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동포의 귀환과 정착

중국동포는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 만주지역으로 건너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국 조선족이란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즉 중국 동북 지역에서 살아가던 조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 ‘조선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현재까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중국 현대사에 막대한 기여를 하여 중국 내에서 높은 사회·정치적 지위를 향유해 왔다(곽승지, 2023).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중국동포들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 ‘코리아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당시에는 한국에 연고가 있는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6개월의 여행비자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한 입국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비자만료 이후에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3D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한국의 임금이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²⁾ 이에 정부는 출입국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1992년 사증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중국동포의 한국 입국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는 중국동포의 불법체류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중국동포는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당시 재외동포법의 제2조 제2항에서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 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 한정 규정하여 일제 식민지 시대 중국 및 구 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배제했다. 당시에 중국동포들은 동포로 인정해 줄 것과 출입국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며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단식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에 ‘해외로 진출한 동포를 정부수립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2004년 3월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중국동포와 고려인은 재외동포로서의 법률이 정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³⁾ 그리고 2007년부터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었는데, 이 정책은 연고가 없는 해외 거주 한인동포를 포함한 재입국 자에게도 3년에서 5년까지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하여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방문취업제’시행 결과, 중국과 구 소련 지역 동포사회에는 한국 열풍이 불게 되었고, 남한에 연고가 없고 비교적 정보에 어두운 오지마을에 거주하던 중국동포들마저 활발하게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곽승지 외, 2014)⁴⁾.

2) 1990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087USD이었으며, 중국은 1,516USD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중국의 8배 정도에 달했다. 실로 이러한 경제 소득에서의 국가 간 격차는 중국동포들이 ‘코리아안 드림’을 갖고 한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격차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 초까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5배 이상을 유지했다(오승은 외,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 조사』, 재외동포재단, 2016).

3)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19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타국으로 이주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동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중국동포들은 차별적인 동포법에 항의하기 위해 명동성당 농성을 비롯하여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04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 제 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4)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결과, 국내에 체류하는 방문취업 중국동포 인구도 급증하였다. 시행 전체인 2006년에 국내에 입국한 중국동포는 65,355명이었으나 방문취업제가 실시된 2007년에는 181,974명으로 전년대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30,549명이 방문취업(H-2)사증으로 국내에 유입되었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 참조). 방문취업제는 방문취업 동포들에게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함에 따라, 모국과 중국동포사회 간 순환적 출입국을 통한 활발한 교류와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불법체류의 요인도 억제하는 순기능의 역할도 하였다(오승은 외, 『국내체

한 걸음 더 나아가 2008년 1월에는 재외동포(F-4)비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국동포가 장기간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와 모국의 유대강화 및 재외동포 거주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영주자격(F-5)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동포들에게 영주자격 부여를 활성화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으로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612,07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023). 이들은 비교적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가리봉동과 대림동, 안산시 원곡동, 경기도 시흥시 등 수도권에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들어오게 된 중국동포는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편견은 갈수록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사회는 중국동포를 중국 동북지역에서 가난하게 살아온 친북한적·친공산당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틀 속에서 단면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곽승지, 2023).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 집단적인 문제에 이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사회갈등 완화와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역사교육의 역할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역사교육

요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는 ‘혐오’이다. 혐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혐오’라는 말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그것은 최근의 일이다. 물론 혐오라는 용어는 이전부터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그렇지만 차별문제와 관련된 사회적인 언어로 혐오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홍성수에 의하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반다문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혐오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여성, 성소수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한다(2019).

누스바움(Nussbaum)은『혐오와 수치심』(2015)에서 혐오란 막연히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역사 속에서 혐오는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어 왔고, 특권을 지닌 집단들이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구분 짓고 배척하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감정이다.『혐오사회』의 저자 캐롤린 엠케는 좀 더 나아가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으로 개인적인 것도, 우발적인 것도, 단순히 실수나 궁지에 몰려 자신도 모르게 분출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형성된 감정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사회적 소수자란 사회적,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으로 숫자가 많더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여성, 성소수자(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장애인,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소수 종교 신도 등이 해당된다(홍성수 외, 2018). 문제는 개인적 기호나 취향으로서 특정 동물이나 특정 음식 등에 대한 싫음을 표현하는 혐오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현상으로서의 혐오

류 중국동포 현황 조사』, 재외동포재단, 2016).

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혐오는 여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비도덕성과 잔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감정이고 사회정의를 위협하는 감정이다. 이에 사회적 공공선의 실천과 민주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역사교육에서 혐오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역사교육에서는 아쉽게도 혐오에 관한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역사교육에서 혐오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참고할 만한 이론을 찾기도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윤세병은 역사적으로 혐오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역사교육에서 혐오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과 현실 수업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2021). 아울러 사회과교육에서 혐오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시론적인 제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설규주는 2022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토대로 사회과교육에서 소수자 혐오 문제를 다룰 때의 방향성을 고찰하고, 사회과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 바 있다(2023). 또한 구정화는 사회과교육에서 혐오표현 관련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 중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2018). 하지만 위의 논의들은 아쉽게도 실제 수업 실천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문제를 역사 교육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업모형을 설계하여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실제 수업 실천을 통해 수업 효과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와의 뚜렷한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역사교육이 혐오 문제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되어 적극적인 수업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Ⅲ. 중국동포 인식개선을 위한 역사 수업방안

1. 수업 내용의 방향

본 연구는 역사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중국동포에 대한 편견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틀을 깨고 이들의 삶에 공감하며, 공존과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세병의「혐오를 넘어서는 역사교육」(2021)에서 제안한 수업 방향을 참고하였다. 윤세병은 혐오에 맞서는 역사 수업 방향으로 우선은 타자에 대한 협소하고 습관화된 인식에 균열을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타자의 얼굴을 찾아주어 차이의 연대에 기초한 포괄적인 우리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타자와 공감하고 연대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2021). 그렇다면 한국인이 중국동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에 균열을 내고, 감정이입을 통해 이들의 삶에 공감하며 공고한 연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수업내용으로 다루어야 할까?

우선 학생들에게 ‘중국동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질문하면서 정보의 출처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통계자료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중국동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에 균열을 내도록 한다. 학생들은 대체로 유튜브나 인터넷 뉴스, SNS 등 이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이는 특정한 프레임을 부여하려는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 조장될 수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대중매체를 비판

적으로 읽는 태도가 중요함을 다시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이 보는 방식에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다르게 보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동포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이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도록 중국동포의 역사를 공유하도록 한다. 중국동포의 이주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들에 대한 혐오감이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구체적으로 19세기 말부터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조선인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한 역사를 알려준다. 이는 동일한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이주’라는 행위가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이 과정에서 ‘나’도 이민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나’도 어느 시기, 어느 사회에서는 한 명의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나’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고,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혐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동기부여로 작동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타국에서는 소수자가 되며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계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님을 생각해 봄으로써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의 예시를 통해 이 시기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19세기 말 생계를 위해서 고향을 두고 이주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운동주 집안의 이야기와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길을 떠났던 이회영 집안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한다.

한편, 중국동포는 한국인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한국인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중국동포의 얼굴을 찾아주어야 한다. 즉, 중국동포는 한민족이면서도 중국 국민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식민지 해방 이후 두 나라가 경험한 현대사에 대한 상호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라는 전혀 다른 체제의 두 나라가 냉전과 분단의 단절 시기에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을 도와 참전함으로써 한·중 수교 이전까지 한국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전혀 다른 체제에서 서로 간에 타자로 지내온 한국인과 중국동포가 어떻게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시간에 서로를 이해하면서 연대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두 나라가 처했던 역사적 조건을 이해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고, 중국동포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동포의 한국이주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동포의 한국 정착 과정에서 이들이 건설업이나 식당 등 한국 사회에서 3D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한국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실제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특히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이민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들과 함께 한국이민정책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동포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국적 인재로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이들 중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정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동포와 실제 인터뷰한 내용과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중국동포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중국동포는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언어적·문화적 우세를 가지고 있다. 중국동포는 중

국과 한반도를 잇는 문화 가교자로서의 역할, 한반도와 중국 교류에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남북한 통합과 한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절벽으로 인해 급격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국동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이처럼 중국동포와의 공존과 연대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역사 수업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보았다. 다만, 수업 내용을 중국동포의 역사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의 한국 정착 과정과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동포의 실제모습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국동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중국동포의 역사와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중국동포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수업지도안 설계

본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 전과 수업 후에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할 것이다. 설문내용은 ‘중국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국동포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생성되었나요’, ‘중국동포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 연구자가 파악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을 섞어서 개발하였다. 덧붙여 한국인 대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양인으로 유연한 관점과 비판적인 자세로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는 것이 수월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소재 S 여자대학의 학생 이외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O 대학 등 타 대학의 학생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대학 선정은 연구자의 인맥에 의해서 무작위로 하였고, 대학 강의 일정상의 한계로 2시간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문까지 포함하여 1회 2시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수업 진행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이다.

수업지도안은 도입, 전개, 결말의 3단계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우선 도입에서는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 표현 관련기사나 문헌 등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생성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중국동포에게 덧씌워진 범죄자 집단의 이미지는 허위·과장된 면이 있음을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알려주도록 한다. 다음으로 전개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국동포의 역사를 다룬다. 이 단계에서는 “운동주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와 같이 학생들이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이에 따른 주요 내용 및 수행과제를 제시하여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다 깊이 있게 중국동포의 역사와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사회로 입국한 중국동포의 정착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덧붙여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한 중국동포의 삶을 동영상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여 보여준다. 이를 통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중국동포와의 공존과 연대는 상당히 중요한 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수업지도안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업지도안

▶ 도입(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중국동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기(5분) ◦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는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알려주기(인구수, 불법체류율, 강력범죄율 등)(15분) ◦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기(10분)
▶ 전개(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동주 관련 EBS 동영상과 영화 '동주'의 도입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윤동주가 간도지역(현재 중국 용정시)에서 출생하였음을 알려주기(5분) ◦ 윤동주 가계도를 중심으로 19세기 말 조선인의 만주 이주 역사를 알려주기. 덧붙여 이회영 집안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만주 이주 역사를 설명하기(30분)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조선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함. 이후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암울했던 조선족의 역사를 설명하기(10분) ◦ 학생들에게 '19세기 말이나 일제시기에 조선에서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주제로 글쓰기 시간을 갖기(15분)
▶ 결론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한·중 수교 이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대거 한국으로 유입한 중국동포들의 귀환과 정착과정 설명하기(10분) ◦ 중국동포의 한국생활을 보여주는 영상자료 보기 (5분) ◦ 한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중국동포를 소개하고,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 공유하기(10분) ◦ 초국적 인재로서의 중국동포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이들과의 공존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5분)

IV. 중국동포 혐오에 대응하는 역사 수업의 결과 분석

학생들에게 '중국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동포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중국동포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단, 설문에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과를 보면 중국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70명 중 43명으로 61% 정도이다. 나머지 25명(36%)의 학생은 '보통이다'라고 답변하였고, '긍정적이다'라고 답변한 학생도 있었다(2명). 그리고 '중국동포라는 말을 들을 때 드는 감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에 돈 벌러 온 중국인'(30명, 43%), '범죄를 일으키는 거친 사람'(26명, 37%),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동포'(12명, 17%)라는 인식 순으로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체로 중국동포를 한국에

돈 벌러 온 중국인이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거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중국동포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주로 TV, 영화 등 방송매체(38명, 54%)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27명, 39%)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식당, 병원, 서비스 시설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응답한 학생(12명, 17%)이나 가정이나 학교 등 사적 모임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답변한 학생도 있었다(9명, 13%). 또한 중국동포와 교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수의 한국 대학생들은 평소에 중국동포와 교류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50명, 71%). 이를 통해 한국의 대학생들은 중국동포와 실제로 교류한 경험 없이 대체로 방송매체나 온라인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특강이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6%(61명)였다. 특히, '도움이 된다'라고 답변한 학생의 다수는 중국동포를 범죄자 집단이라고 인식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면 특별히 어떤 내용에서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중국동포 범죄율이나 불법체류율에 대한 실제 통계자료를 제시해 준 점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운동주 집안의 예를 들어 조선인의 만주로의 이주 역사를 언급한 점이 이들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다수의 학생들은 운동주가 만주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한다. 나아가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의 한국 정착기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중국동포의 삶을 이들과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보여준 것이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수의 학생들은 중국동포와의 실제적인 교류없이 단순히 대중매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강 이후 자신들이 중국동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범죄 집단이라는 편견이 대중매체에 의해서 잘못 형성되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는 중국동포의 삶과 역사를 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을 분명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즉, 중국동포의 역사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게 정착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국동포의 모습을 한국인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들과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하여 중국동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한국인은 이들을 친근하게 느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동포가 인구 절벽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임을 알려주고, 이들이 바로 동북아 시대의 초국적 인재로서 한국 사회 발전에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V. 맺음말

이 연구는 최근에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동포를 향한 혐오 문제를 역사 교육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내 이주민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한국 사회에서 혐오 집단으로 낙인찍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중국동포 출신으로 인권 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P씨는 한국에 8년 동안 유학하면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

다고 한다. 하지만 국적과 출신을 묻는 순간 절대다수의 공적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비국민’이자 ‘비정상성’을 지닌 사회적 소수자로 전락하고 만다고 토로하였다(한겨레, 2022. 1.23). 이렇듯 중국동포는 이름만으로 이들의 삶은 차별과 혐오로 낙인 되어 있다. 이는 중국동포에게 심리적·물리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역사 교육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인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 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역사 수업방안을 설계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인 대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설문을 통하여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변화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되었음이 검증되었다. 특히, 범죄자 집단의 이미지가 강했던 중국동포에 대한 이미지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국적 인재라는 점을 다수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역사교육은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 문제를 개선하고 이들과의 공존과 연대를 모색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수도권에 있는 제한된 대학생들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기에 연구 결과를 보편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대학 강의 일정상의 한계로 1회 2시간에 한정하여 강사의 설명식 강의 위주로 수업이 구성되었다. 이에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 등 다양한 강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라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를 역사교육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역사교육이 사회의 공공선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임을 보여주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역사교육이 초·중·고에 국한된 논의에서 벗어나 대학의 교양교육,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지평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보다 더 실천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가상준 외,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분쟁해결연구』 12(1), 2014.
- 곽재석 외, 『한중 수교 30년의 조선족』, 한국학술정보, 2022.
- 곽승지,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인간사랑, 2023.
- 곽승지 외, 「중국 동북3성 조선족 마을 현황연구」, 재외동포재단, 2014.
- 김종태, 「다문화 대중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족주의, 선진국 담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50, 2012.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 마사 누스바움(우석영 옮김),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공리, 2011.
_____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 배영주, 「혐오 표현 문제 해소를 위한 시민교육 구상 대학생의 혐오 표현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10(1), 2020.
- 윤세병, 「혐오를 넘어서는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41, 2021.
- 윤인진 외, 「재외동포 귀환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현황」, 『한국민족문화』60, 2016.
_____,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 『이주와 통합』9, 2019.
- 예동근 외, 『조선족 3세들의 서울 이야기』, 백산서당, 2011.
- 최서리 외, 「한국의 한국계중국인 대상 정책의 전개: `동포`와 `외국인력` 사이의 절충」, 『다문화와 평화』 10(3), 2016.
- 송원찬, 「경계인: 한국 미디어 속 조선족 형상 연구 -영화 <황해>와 <청년경찰>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18(3), 2017.
- 양혜우, 「누가 혐오를 생산하는가? - 인종적 위계의 하층에 배치된 외국인들」, 『비교문화연구』 56, 2019.
- 홍성수 외,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 홍성수, 「혐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법학연구』 30(2), 2019.
- World Values Survey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7.jsp>
- 한겨레 신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387.html(검색일자 2022.1.23.) 조선족' 말하는 순간 나는 비정상 소수자가 된

중국동포 혐오에 대응하는 역사 수업방안 모색과 실제 토론문

김지훈(성균관대학교)

이 글은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중국동포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적 시선과 혐오감을 우려하면서 중국동포의 혐오에 대응하는 역사수업 방안을 제시하고 역사 수업을 통한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중 수교이후 현재까지 한중간의 교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인적 교류가 확대되었지만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중 사이에 역사문화를 둘러싼 갈등과 한중관계 악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와 공격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 아래로 하락하여 세계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에서는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추산에 따르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지만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감소하고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30만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유소년 인구가 격감하면서 앞으로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노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하게 감소하는 한국의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도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사회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가진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역사수업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그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운동주와 같이 가족이 중국으로 이주한 후 중국에서 출생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중국동포의 이주를 역사적인 맥락으로 설명한 부분은 설득력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주로 방송매체나 온라인을 통해서 중국동포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레거시 언론과 유튜브와 SNS, 인터넷 뉴스 등이 가진 특징과 한계 등을 지적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적이다.

이러한 혐오에 대응하는 역사수업이 좀 더 심화되기 위해서는 운동주나 이회영 일가의 중국 이주 사례와 더불어 보다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을 읽어보고 주인공인 김산(장지락)의 생애를 통해 식민지 시기 중국으로 이주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30년대 중국에서 “영화황제”라고 불렸던 영화배우 김염(金焰), 개혁 개방 이후 중국 로큰롤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수 최건(崔健) 등 문화계의 인물들이나 중국중양의학의 선구자 김현택(金顯宅) 등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중국동포와 한중관계를 설명하면 좋겠다.

최근 한중 간에는 역사문화 관련 갈등 사례도 많기 때문에 한국문화와 중국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둘러싸고 “자국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이다.

중국동포 혐오에 대응하는 역사 수업방안은 중국동포를 넘어서 가능하다면 재외동포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홍범도장군 등의 해외 이주 사례를 통해서 러시아로 이주한 고려인에 대해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혐오에 대응하는 역사교육은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혐오와 갈등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소련 지역 고려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의 의미와 과제

김대용(국민대학교)

목 차

1. 머리말
 2. 해방 이전 한인의 해외 이주
 3. 국외 독립운동가 묘지 관련 시설 현황과 유해의 국내 귀환
 4. 구소련 지역 고려인 독립운동가 묘지와 유해 봉환
 5. 맺음말
-
-

1. 머리말

한국인들은 1860년대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로의 이주를 필두로 유럽과 남미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등 전세계로 이민이 이어져 현재 750만 명의 해외 동포들이 산재해 있다. 그중 본래 삶의 터전이었던 한반도와 인접성으로 이른 시기부터 이주가 진행된 지역이 중국과 러시아였다.

초기 한인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척박한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가옥을 지어 거주하며 농사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점차 이들 지역으로 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집단 거주지나 부락을 형성하는 등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중국의 북간도는 청의 봉금지역이었으나 1880년대 들어 점차 개방되면서 사실상 해제되었다. 러시아도 부동향을 찾아 영토 확장을 진행하면서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게 된 연해주가 이주의 대상지가 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보다 앞서 1902년에는 미국의 사탕수수농장으로 계약노동자 이민이 시작되었다. 1910~1945년 해방 이전까지의 한인의 해외 이주는 경제적 이유의 자발적 이주와 강제이주·징용 등 일제의 압박에 의한 비자발적 이주가 함께 진행되었다.¹⁾

일제강점기 국외에서 독립활동을 전개하다 희생된 유해들이 전세계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국내로 봉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독립운동가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일은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독립운동가 예우에 관한 일이다. 본 글은 그간 국외 독립운동가 유해의 국내 봉환의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구소련 지역 고려인 독립운동가 묘지 현황과 유해 봉환의 문제에 대해 공유해 보고자 한다.

1) 김경제, 『재외동포의 귀환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25쪽.

2. 해방 이전 한인의 해외 이주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로 하여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한인의 해외 이주는 가속화되었다. 특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망명을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유럽으로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까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는 일제의 식민 수탈과 탄압에 의한 이주뿐 아니라 일제가 대륙침략 전쟁의 촉발로 징용과 징병, 군속, 정신근로대, 일본군 위안부, 노무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연행이 급증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의 한인 수는 1930년 전후 60여만 명이었으나 1940년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1945년에는 216만여 명으로 급증하였다. 일본지역에도 1930년경 30만 명이었던 한인 거주자가 1940년에 12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1945년에는 21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²⁾ 이는 일제의 만주침공 이후 침략전쟁 과정에서 한인을 대규모로 동원한 것이었으며 강제적 성격의 한인 유출로 이어진 것이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촉발된 강제동원은 한인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700~800만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³⁾

한편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는 일찍이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1910년대 후반에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거주하였다. 또한 한인사회가 크게 팽창하면서 연해주 이외의 시베리아와 러시아 각지로의 이주가 빠르게 진행되어 50만 명의 한인들이 러시아 전역에 거주하였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며 원동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구소련의 조치로 연해주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1937년 9월부터 20여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의 동의 없는 불법적인 이주가 소련 정부에 의해 결정 및 단행된 것이었다. 한인들은 강제 이주 과정에서 어떠한 보호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으며, 낯선 환경에 집단적으로 배치되어 토굴과 창고, 마구간 등에서 생활하는 열악한 상황을 견뎌내야 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도 박탈당한 채 오랫동안 거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리고 소련 국민으로 법적 권리도 부여받지 못하기도 했다.⁴⁾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한국은 해방되었지만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미군정과 연합국에 의해 남북분단과 냉전체제의 영향은 해외 한인의 귀환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미국의 전략에 의해 중국 동북지역의 한인을 귀환시키지 않고 현지에 정착시키려 했지만 대부분의 한인은 귀환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중국 내 한인의 귀환은 미국과 중국의 국민당 정부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형국이었다.

1945년 해방 직후 해외의 한인 수는 500만 명에 달했다. 이중 절반인 250여만 명이 귀환하지 못하거나 현지에서 정착 또는 억류되어 미귀환으로 남아있다.⁵⁾ 미귀환 한인 중에는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고자 하였으나 오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개인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되어 강제로 해외로 나갔다가 희생

2) 장석흥, 「일제강점기 한인 해외 이주의 강제성과 귀환 문제」, 『한국학논총』 2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5, 160쪽.

3) 이시중,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통한 ‘남북일’연대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85집, 2021, 213쪽.

4) 장석흥, 「일제강점기 한인 해외 이주의 강제성과 귀환 문제」, 『한국학논총』 2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5, 165~166쪽.

5) 장석흥, 「일제강점기 한인 해외 이주의 강제성과 귀환 문제」, 『한국학논총』 2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5, 157쪽.

당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다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70~8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⁶⁾ 구소련 지역의 한인들은 고려인으로 불리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제가 패망하여 돌아갈 해방된 조국이 있었으나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에서 거주제한에 묶여 귀환할 수 없었다.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 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 독립국가로 탄생하면서 대부분의 고려인은 자동적으로 해당 국적을 갖고 해당 국민이 되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20만 명,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 명, 러시아에 13만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해당 국가의 국민 정책에 따라 살아가야만 했다. 2000년대 초부터 이들 국가의 고려인들은 국내로 귀환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이주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내에 고려인 집거지가 형성되었다.⁷⁾

3. 국외 독립운동가 묘지 관련 시설 현황과 유해의 국내 귀환

(1)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의 묘지 시설 현황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전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방법과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독립운동가가 활동한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 사적지가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와 근접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기에 해외에 수많은 독립운동 사적지가 보고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현황>

구분	의병	3.1운동	국내항일	임시정부	만주노령	일본미주	기타
인원	2,717	6,193	4,199	1,271	2,674	705	88
비율	15.22%	34.7%	23.53%	7.12%	14.98%	3.95%	0.49%

국가보훈부에 의하면 독립유공자는 17,800여 명이며, 이중 운동계열별에 따라 임시정부, 만주노령, 일본미주, 기타 인도네시아방면의 독립유공자는 4,100여 명이다.⁸⁾ 이에 의하면 23%의 독립운동가가 해외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한편 구소련 지역 활동으로 분류된 독립유공자는 174명으로 확인되는데 만주와 노령 지역은 활동 범위가 겹치는데다 임시정부나 광복군 등 운동계열이 중복되어 다르게 분류되어 있으므로 실제 구소련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⁹⁾ 이들 중에는 국내로 귀환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6) 미군정 맥아더 사령부는 1947년 12월 19일 일본정부에 「조선인 유골 등 송환에 관한 명령 건」을 보내 조선인 희생자 유골에 대한 봉환을 지시하였고, 1948년 1월 4일 남조선과도정부 외부처장 문장욱이 전쟁 중 사망한 38이남 조선인들의 유해가 귀환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시종,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통한 '남북일'연대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85집, 2021, 221쪽.

7)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는 2019년 말 기준 최대 870만여 명이며, 구소련 지역 고려인의 국내 체류인원은 러시아 2만 8천여 명, 우즈베키스탄 3만 6천여 명, 카자흐스탄 1만 4천여 명, 키르기스스탄 2천 9백여 명이다. 김경제, 「재외동포의 귀환정책지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35~36쪽.

8)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 2023년 8월 현재.

9) 홍범도(카자흐스탄에서 서거)는 만주방면, 계봉우(카자흐스탄에서 서거), 이동휘(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거), 최재형(우스리스크에서 서거)은 임시정부로 분류되는 등 다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타계하여 유해가 해외에 남아있기도 하다.

<국내 독립운동 관련 시설>

구분	탑·비석	조형물	공원장소등	기념관	사당	동상	생가	합계
개소	579	10	127	77	48	97	47	985

현재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내 독립운동 관련 시설은 985개소에 이른다.¹⁰⁾ 지역별로는 활동 양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공훈 선양을 위해 건립한 탑과 비석의 비율이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장소, 동상, 공원장소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그리고 국내에서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현충시설’로 명시하여 건립 및 관리되고 있다.¹²⁾

국가보훈부 자료(2022년 말)에 의하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는 9개 국가군 1,032개소로 중국 483개소, 미국 159개소, 러시아 123개소, 일본 69개소, 카자흐스탄 25개소, 멕시코 53개소, 쿠바 13개소, 유럽 34개소, 기타 73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기념관 49개소, 탑·비석 89개소, 동상 5개소, 묘역 59개소, 표지물 6개소, 건물 247개소, 장소 577개소이다.¹³⁾ 이중 사적지 조사를 통해 독립기념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현황>¹⁴⁾

연번	구분	개소	비율(%)	비고
1	중국	327	55.99	25개 지역
2	일본	32	5.48	10개 지역
3	러시아	46	7.88	6개 지역
4	우즈베키스탄	6	1.03	
5	카자흐스탄	9	1.54	
6	말레이시아	2	0.34	
7	싱가포르	2	0.34	
8	인도	4	0.69	
9	타이완	8	1.37	
10	필리핀	1	0.17	
11	몽골	1	0.17	
12	미국	101	17.30	
13	멕시코	14	2.40	
14	쿠바	7	1.20	
15	네덜란드	4	0.69	
16	독일	3	0.51	
17	벨기에	2	0.34	
18	스위스	3	0.51	
19	영국	2	0.34	
20	이탈리아	1	0.17	
21	프랑스	9	1.54	
	합계	584	100	

10)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http://mfis.mpva.go.kr/>)

11)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 및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가 적시되어 있다.(제5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 및 기념사업, 공훈과 나라사랑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인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을 건립하고 설치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제23조, 제26조)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공훈 선양 시설을 ‘현충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13) 국가보훈처, 『2022년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023, 271쪽.

위 자료에 따르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독립운동의 활동 지역이 이들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및 확인 되었음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다. 한편 구소련 지역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가 61개소로 약 10%를 차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584개소 중 묘지 관련 시설로는 49곳으로 조사 및 확인되었는데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국가별 묘지 관련 시설 현황>¹⁵⁾

연번	국가	명칭	비고
1	중국	광저우 김근제 안테 묘	
2	중국	네이멍구 이자해 묘	내몽골 정착, 부부합장묘(1985)
3	중국	관덴 이진룡 기념원	부인우씨묘비
4	중국	하이청 윤희순 기념비	국내 봉환(1994)
5	중국	타이항산 조선의용대 무명열사 묘	
6	중국	상하이 독립운동가 묘	노백린·박은식·신규식·안태국·김인전 국내 봉환(1993) 윤현진·오영선 국내 봉환(1995)
7	중국	김약연 묘	김약연 일가 묘소
8	중국	룽징 3.13 반일의사릉	순국 13인 묘소
9	중국	룽징 감하규 묘	
10	중국	룽징 현석칠 초묘	국내 봉환(2005)
11	중국	송몽규 묘	
12	중국	윤동주 묘	
13	중국	장암동 경신참변지	
14	중국	허룽 대중교 삼종사 묘	서일, 나철, 김교현
15	중국	훈춘 김남극 묘	김남극 일가 묘소
16	중국	훈춘 대항구 13열사 묘역	
17	중국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묘지 터	송병조·차리석·이달·손일민·조선의용대 대원 묘지 곽낙원·김인 국내 봉환(1948) 웹손 확인 불가
18	중국	타이항산 윤세주·진광화 초묘	가묘
19	중국	타이항산 조선의용대 4열사 묘역	손일봉·최철호·왕현순·박철동
20	중국	한단 윤세주·진광화 묘	열사능원 이장지(1950)
21	중국	미산 홍량춘 4열사 기념비	덕해·황옥청·오복·이종근
22	중국	샹즈 김규식 부인 주명수 묘	
23	중국	옌서우 박세황 묘	
24	중국	하얼빈 남자현 묘 터	추정지, 웹손 확인 불가
25	일본	사이타마 이봉창 매장지	국내 봉환(1946) 우라와형무소 터, 확인 불가
26	일본	가나자와 윤봉길 암장지적비	국내 봉환(1946)
27	러시아	모스크바 강상진 묘	
28	러시아	모스크바 김규면 묘	

14)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http://oversea.i815.or.kr/>)에 등록된 현황으로 국가보훈부가 파악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통계와는 차이가 있어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전반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15) 독립기념관 국외독립운동사적지(<http://oversea.i815.or.kr/>)에 등록된 국가별 묘지와 관련된 시설을 정리한 것이다.

29	러시아	우수리스크 이갑 묘터	훼손, 확인불가
30	러시아	하바롭스크 김승빈 묘	
31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인 희생자 묘지	조명희 등
32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이인섭 묘	
3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최호림 묘	
34	카자흐스탄	침켄트 최봉설 묘	이장, 부부합장묘
35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계봉우 묘터	국내 봉환(2019)
36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홍범도 묘터	국내 봉환(2021)
37	몽골	울란바토르 이태준 묘역	기념공원 조성
38	미국	로스앤젤레스 로즈데일 공동묘지	한시대·이성례·김병국·임치호·임인재·임준기 등 다수의 한인 묘
39	미국	리들리 공동묘지	145기의 한인묘지 김호 국내 봉환(2002)
40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이프러스 공동묘지	이대위·양주은 묘
41	미국	호놀룰루 다이아몬드헤드 메모리얼 파크	전수산·이동빈 묘
42	미국	호놀룰루 오아후 공동묘지	200기의 한인 묘 추정 민찬호·김노덕 묘
43	멕시코	메리다 판테온 헤네랄 공동묘지	이종오 묘
44	멕시코	멕시코시티 돌로레스 공동묘지	김익주 묘
45	쿠바	마탄사스 카를로스 묘지	임천택 묘
46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묘 터	국내 봉환(1963)
47	카자흐스탄	알마티 루스쿨로바 공동묘지	황운정, 국내 봉환(2019)
48* 16)	미국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	황기환, 국내 봉환(2023)
49*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	최재형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국내 봉환(2023) 합장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중 묘지 관련 시설이 가장 많은 국가는 단연 중국으로 8개 지역에서 24개소이며, 일본 2개소, 구소련 지역 12개소, 몽골 1개소, 미국 6개소, 멕시코 2개소, 쿠가·네덜란드 각각 1개소이다. 이 중 13개소의 묘지 시설에서 21건의 독립운동가 및 가족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국가보훈부에서 파악한 묘역 59개소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공동묘지의 경우 다수가 매장되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 국외 독립운동가 유해 국내 귀환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당사자 및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보상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에 광복운동 과정에서 순국하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전담부서로 전계국의 설치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1939년 순국선열기념일을 제정하여 공식기념일로 제도화할만큼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특히 중시했다.¹⁷⁾

16) *48·49번은 사적지 실태조사 조사보고서 및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정보에 미등록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국외 독립운동가 및 가족의 유해가 봉환된 시설이다.

17) 황선익,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光復運動者 禮遇와 순국선열 紀念」, 『역사와교육』 제32집, 역사와교

해방 이전에 국외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의 유해가 국내로 귀환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01년 주영공사관 참서관으로 임명되어 1904년 대리공사로 업무를 수행한 이한응은 한국의 독립의 보장받기 위해 구국외교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국권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1905년 5월 자결 순국하였다. 유해는 7월 고향인 경기도 용인군 덕성리 금현에 안장되었다.¹⁸⁾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좌진은 1930년 1월 독립운동 노선을 달리하던 방상실의 흉탄에 맞아 해림시 금성정미소에서 순국했다. 당시 묘는 만주에 안장되었는데 1933년 부인 오숙근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국내로 옮겨와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에 안장하였다.¹⁹⁾

국내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다 1908년 2월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하여 1909년 의병부대를 조직하고 13도의군 도총재로 활약한 의암 유인석은 1915년 관전현 방취구에서 타계하였다. 당시 묘는 량오닝성 흥경현 평정산 난천자로에 안장되었다가 1935년 4월 강원도 춘천군 가정리로 반장되어 묘역을 조성하였다.²⁰⁾

해방 공간의 정세 속에서는 정부의 부재로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봉환하거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는데 전념할 수 없었다. 1945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환국했던 김국은 국외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의 유해 봉환사업을 펼쳐 제일거류민단장 박열에게 의뢰하여 일본으로부터 이봉창·윤봉길·백정기의 유해를 모아 첫 국민장으로 효창원에 묘지를 조성하였다. 이때 안중근의 가묘를 함께 마련하여 유해를 반드시 봉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의지는 1948년 4월 김구가 남북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일성에게 안중근의 유해를 봉환하고자 제의한 것으로 이어졌다.²¹⁾

이후 중국,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지에서 비정기적으로 독립운동가 유해가 봉환되었다. 그러다 1984년 8월에 구성된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외국에 매장된 독립운동가들의 유해 환국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 중국 당국과 교섭해 유해 봉환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1988년 정부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100여 기의 독립운동가 유해를 송환할 수 있도록 두 나라 정부와 교섭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²²⁾

1990년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매년 독립운동가 유해가 중국으로부터 봉환되기 시작되었으며,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정부가 독립운동가 유해의 본국 송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1993년에는 중국 상하이 만국공묘에 안치되어 있던 임시정부 요인 5인(노백린·박은식·신규식·안태국·김인전)과 1995년에도 2인(윤현진·오영선)이 국내로 봉환되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다가 타계한 이들의 묘는 원래 징안스루에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만국공묘로 이전되었다.²³⁾

최근에는 1904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1918년 미군에 자원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이후 유럽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 외무부 런던주차위원 등을 역임하며 외교활동을 펼치다 1923년 타계한 황기환의 유해가 2023년 미국으로부터 국내로 봉환되어

육학회, 2021, 9~10쪽.

18) 당시 영국에서 유해를 돌아올 때 관에 부착한 철명판이 현재 남아있다.

19) 1958년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로 이장하였다.

20) 1946년 8월에 백범 김구가 묘역을 방문하였으며, 친필 고유문이 현재 남아있다.

21) 한철호, 「해방 이후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현황과 방향 제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346쪽.

22) 한철호, 「해방 이후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현황과 방향 제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347~348쪽.

23) 만국공묘에는 한국인 묘로 확인 및 추정되는 14기의 묘가 있었으며, 현재도 표석이 남아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²⁴⁾ 이로써 국외 독립운동가 147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광복 이전에 타계하고 직계 후손이 없는 운동주, 송몽규, 장인환, 홍범도, 황기환 등 무호적 상태인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부의 직권으로 2022년부터 창설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4. 구소련 지역 고려인 독립운동가 묘지와 유해 봉환

(1) 고려인 독립운동가 묘지 현황

1990년대 구소련의 해체 후 러시아연방과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위성국가들의 독립으로 개방과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었다. 특히 러시아지역은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지였으며, 활발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기에 이와 관련한 사적지가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일찍부터 러시아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연해주 지역에 마을을 형성하고, 점차 집단 거주지를 광범위하게 넓혀 나가며 전역에 한인사회를 형성하였다. 이곳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으며, 1905년을 전후하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러시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착지였다. 그러던 중 1937년 스탈린의 탄압정책에 의해 약 18만 명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이때 러시아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가족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국가로 강제이주를 당했다.

2010년대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은 러시아에 약 16만 명, 우즈베키스탄에 약 18만 명, 카자흐스탄에 약 10만 명, 기타 지역에도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고려인들은 이주 1세대에 이어 구소련 지역 태생의 후손들이 거주하며 살아온 동포들이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활동 중 사망하거나 해방 후 현지에서 정착 또는 억류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여생을 보내다가 타계하여 현지에 묻혔다.

현재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이 조사한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독립운동가 묘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황운정 묘지²⁵⁾

- 카자흐스탄, 알마티, 브로드스키 거리 173번지 일대, 루스쿨로바 공동묘지 41구역

(Казахстан, г.Алматы, ул.Бродского 173, Кладбище Рыскулова кв-л 41)

황운정은 함북 종성·운성 지역의 3·1운동에 참가한 뒤 1920년 중국 지린성 왕칭현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러시아지역으로 이주하여 1920~22년까지 연해주 추풍 솔밭관 한족공산당에서 활동하였으며, 러시아 내전 기간 중 일본군·러시아 백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1935년 일본의 간접 협의로 3년형을 선고받아 1938년 11월까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수용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1958년 신분 복권되어 생활하다가 1989년 12월 31일 타계하였다. 카자흐스탄 루스쿨로바 공동묘지에 묻힌 황운정의 묘비에는 러시아어로 “ХВАН УН-ДЕН(황운정) 1899. 9. 11 ~ 1989. 12. 31 혁명가 빨치산연맹차원의 의의를 가진 개인연금자”라고

24) 황기환의 묘지는 2008년 미국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서 뉴욕한인교회 장철우 목사에 의해 발견되어 정부가 2013년부터 유해 봉환을 본격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2차례 제기하였으나 후손을 확인하기 어려워 법원의 승인받지 못했다.

25)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017, 18쪽.

새겨져 있었다. 2019년 4월 국내로 봉환되었다.

② 최봉설 묘²⁶⁾

- 카자흐스탄, 남카자흐스탄주, 칩켄트시, 정교회 공동묘지

(Казахстан, Южно-Казахстанская область, городской акимат Шымкент, Православное кладбище)

최봉설은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서 군자금 모집과 무장투쟁에 참여하였다. 철혈광복단의 단원, 적기단의 단장으로 활약한 최봉설은 1937년 우즈베키스탄 호레즘으로 강제이주 당했으며,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칩켄트 등지에서 고려인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1973년 타계하였다. 칩켄트 시내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도로 건설로 2008년 6월에 이장하여 새로 조성되었다. 묘비에는 “Цой ГЕРИБ(최계립) 최봉설 1899. 11.27~1973. 1. 19 КИМ СИН ЖИ 1896. 10. 5 ~ 1970. 10. 3”라고 새겨져 있다.

③ 계봉우 묘터²⁷⁾

-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구기독교공동묘지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Старое христианское кладбище)

계봉우는 국내에서 구국운동을 시작으로 망명 후 북간도와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독립운동과 언론인·역사가·민족교육자 등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상하이에서 활동하다가 연해주로 활동지를 옮겨 한인사회당·고려공산당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되어 고려사범대학과 고려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언어·문학·역사에 대한 연구와 집필활동에 전념하다 1959년 타계하였다. 크즐오르다 공동묘지에 묻힌 계봉우의 묘비에는 “계봉우 고려의 영웅 학자이자 계몽가”라는 제목 아래 계봉우의 약력이 연도별로 새겨져 있으며, 중앙의 받침대 위에 흉상이 있었다. 2019년 4월 국내로 봉환되었다.

④ 흥범도 묘터²⁸⁾

-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구기독교공동묘지

(Казахстан, г.Кызылорда, Старое христианское кладбище)

흥범도는 구한말에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북간도와 러시아 원동지역에서 독립군 지도자로 활약했다. 1913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노동회를 조직하고, 대한독립군을 조직하여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였다. 1920년 6월 봉오동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으며, 10월에는 김좌진의 독립군과 청산리전투에서 승전을 올렸다.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된 후 크즐오르다 고려극장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나 1943년 타계하였다. 당시 묘는 독일과 소련이 전쟁 중이라 임시로 조성되었다가 1951년 임시묘소의 훼손이 심해져 보수되었다. 1981년 현재의 자리로 이장하였으며, 1996년 추모비를 세우고 묘소를 단장하였다. 흥범도 흉상 주위에는 3개의 기념비가 있는데 1937년의 강제이주, 1995년의 광복 50주년, 1997년 강제이주 6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졌으며, 각각 러시아어로 “다시는 반복되지

26)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017, 82쪽.

27)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017, 98쪽.

28)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017, 116쪽.

않기를”, “국제평화와 화합을 위하여”, 간단한 약력이 새겨져 있다. 2021년 8월 국내로 봉환되었다.

⑤ 최호림 묘²⁹⁾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쿠르간지구(군), 아쿠르간 공동묘지

(Узбекистан, Ташкентская область, Аккурганский район, Аккурганское кладбище)

최호림은 1919년 2월 연해주 우수리스크 부근(현재 라즈돌리노예)에서 의병대를 조직하였다. 1920년 러시아 자유시에서 한인보병대대에 합류하여 중대장·대대정치위원, 1921년 6월에는 고려혁명군 사관학교 제1연대 군정위원을 지냈다. 1922년경 고려공산당 특파원으로 활동하였고, 12월 니콜리스크에서 단지동맹단장을 맡았다. 1923년 4월 고려공산당 고려부 연추 독립부장으로 해별사 원도치에서 한인 모집과 1926년 연해도 당위원 남오지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선봉』의 주필과 1934년 소련작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36년부터 3차례에 걸쳐 13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1957년 석방되었다. 1960년 우즈베키스탄 아쿠르간에서 타계하였다. 묘비에는 “혁명가, 애국지사, 시인”이라고 새겨져 있다.

⑥ 이인섭 묘³⁰⁾

-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 안디잔시, (정교회)공동묘지 “사도보예”(정원)

(Узбекистан, Андижанская область, г.Андижан, проспект Алишера Навои, кладбище “Садовое”)

이인섭은 구한말 평안도 일대에서 활약한 김관수 의병부대에서 활동하던 중 북간도와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하여 항일투쟁과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였다. 1953년경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로 이주하여 살다가 1982년 타계하였다.

안디잔 중앙공동묘지에 묻힌 이인섭의 사진을 새겨 놓았고, 러시아어로 'Li Inseb 1988.9.14. ~ 1982.1.5 1919년 이래의 소련공산당원'이라고 쓰여 있다.

⑦ 이갑 묘³¹⁾

- 연해주 우수리스크시 동북쪽 외곽 식용유 마가린 공장 부지

(Россия,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Уссурийск, Волочаевская улица)

이갑은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치타, 블라디보스토크 등 각지에서 한인지도자로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시베리아 지방총회 제2대 총회장에 임명되었으며, 『대한인정교보』 발행과 밀산(密山)에 설립된 무관학교 사업을 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갑은 거주지를 우수리스크로 옮기고, 다양한 계열의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였으나 1917년 타계하였다. 유해는 우수리스크 시내 뒷산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나 1990년 마가린 공장 및 식용유 공장이 생기면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이곳이 공동묘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묘지석 몇 기가 공장 부근에 남아있다.

29)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017, 166쪽.

30)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017, 180쪽.

31)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8』, 2018, 46~47쪽.

⑧ 김승빈 묘

- 하바로프스크 시립 공동묘지

(Россия, Хабаровск, Центральное кладбище)

김승빈은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가 풀려난 뒤 만주로 망명하였다.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며, 교생대에 참여하였다. 이후 러시아지역에서 한인 독립보병여단·고려혁명군정의회 등에 소속되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러시아 내전 이후 우수리스크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1937~1946년까지 국경지대인 하산지역에서 장교로 근무하였다. 1938년 소련과 일본의 국경문제로 충돌한 ‘장고봉(張鼓峯) 사건’ 때 전투에 참전했으며, 1945년 8월 일본군과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소련 정부로부터 수차례 훈장을 받았다.

⑨ 한인 희생자 묘지³²⁾

- 하바로프스크 시립 공동묘지

(Россия, Хабаровск, Центральное кладбище)

1930년대 스탈린 대탄압 시기 희생된 한인들의 명패가 걸려있는 공동묘지로 1937년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다수의 소비에트 혁명가 및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숙청되어 이 장소에 큰 구덩이 3개를 만들어 묻었다고 한다. 이후 1990년 10월 공원묘지 입구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석판이 세워져 있다. 희생자 명단에는 조명희(ЧОМЯН ХИ)를 포함한 한인명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추모예배당 바로 옆에 조명희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⑩ 김규면 묘³³⁾

- 모스크바 루쥬네츠키이 통로 2번지 노보제비치 공동묘지

(Москва, Лужнецкий проезд 2, Новодевичье кладбище)

김규면은 구한말 신민회 회원으로 교육·종교운동을 통한 계몽활동에 참가하였고, 침례교 목사로 독립교회인 성리교를 창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3·1 운동 후 항일투쟁단체 신민단을 창단하였다. 19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재조직된 한인사회당의 부위원장 겸 군사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1921년에 만주에서 연해주로 이동해 온 군비단을 근간으로 조직된 대한의용군사회의 고문을 지냈다. 이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차장 등을 역임하였다.

1927년 러시아 연해주로 돌아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서점에서 동양서적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1934년 이후 모스크바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1967년 러시아혁명 50주년을 기념하여 소련정부로부터 적기훈장을 받았으며, 1969년 타계하였다.

김규면의 묘판에는 러시아어로 “극동에서 소비에트 권력을 위한 투쟁에 참가자 김백추”라고 새겨져 있다.

⑪ 강상진 묘³⁴⁾

- 모스크바주 노보 프레지노 공동묘지

(Moskovskaya Novo Friazinoskoye Kladbishche)

32)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8』, 2018, 200쪽.

33)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2013, 36~37쪽.

34)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2013, 40쪽.

서간도 장백현에서 조직된 군비단과 이 부대가 연해주로 이동해 재조직된 고려혁명의용군대 및 대한의용군사회의 등에서 활동한 강상진의 묘

강상진은 3·1운동에 참가한 후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군비단'에 가담하여 여러 전투에 참가하였다. 1921년 원동해방전쟁에 참여하여 1922년 2월 볼로차예프전투에 6연대 1중대 소대장으로 참가하여 최초로 철조망 장애물 지대에 접근하여 돌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노동군으로 복무하였으며 이후 툴라시의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였다. 1957년 소련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1973년 타계하였다.

강상진의 묘비에는 “КАН САН ДИИ, 강상진, 1897-1973” 이라고 간략히 새겨져 있다.

⑫ 이범진 묘³⁵⁾

- 상트페테부르크 북방묘지(옛 우스펜스키 묘지)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еверное кладбище)

이범진은 1899년 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 3국 주재 전권공사로 임명되었으며, 1900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7월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사 업무를 개시하였다. 1901년 3월 겸직 공사직에 해제되고, 러시아 상주 공사로 근무했다. 1904년 9월 면직되었으나 1906년 초 공사관이 철폐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1911년 나라의 멸망 소식에 3통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 순국하였다.

1911년 2월 우스펜스키 묘지에 안장되었다. 1958년에 우스펜스키 공동묘지가 북방 공동묘지로 재편되면서 이범진의 묘역도 소실되었다. 이범진 공사의 유해가 묻혔던 곳은 페테레스부르크 시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통해 유해 추정지에 2007년 7월 한국정부가 순국비를 세웠다.

(2) 구소련 지역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

한국정부는 해외에 산재한 독립운동가의 묘지를 160여 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정부수립 이후 1946년부터 현재까지 국외 독립유공자 147위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였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현황>³⁶⁾

구분	위수	지역
1946~1990	19	미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1991~2000	55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2001~2010	48	미국, 중국, 일본, 쿠바
2011~2020	21	미국,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2012~2023	4	카자흐스탄, 프랑스, 스위스, 미국
합계	147	

*2008·2011·2015년 미봉환

해방 직후 김구는 일본에 묻혔던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의 유해 발굴을 추진하였고, 1946

35)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2013, 78~79쪽.

36) 국가보훈처, 『2022년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023, 234쪽.

년 7월 국내로 봉환하여 효창원에 묘지를 조성한 것을 계기로 1948년 중국 충칭과 치장에 묻혀있던 곽낙원, 김인, 차리석, 이동녕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여 현재 국립대전현충원과 효창원에 안장되어 있다. 한국전쟁과 정치적 격변 등으로 15년 간 국외 독립유공자의 국내 봉환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독립유공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이 본격적으로 포상되면서 196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묻혀있던 이준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쿠바, 카자흐스탄, 스위스, 프랑스에서 최근까지 거의 매년 국내 봉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국내로 봉환한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는 효창원에 5위, 국립서울현충원에 22위, 국립대전현충원에 116위, 기타 장소에 4위가 각각 안장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85위, 미국 40위, 일본 11위, 기타 국가로부터 11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었다.³⁷⁾ 특히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로 변화하면서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중국과 구소련과의 수교와 개혁개방의 분위기 속에 내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외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양국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지역은 1990년부터 매해 국내 봉환이 추진되었고, 구소련 지역은 1994년 러시아 세르푸호프시에 묻혔던 김공집의 유해가 봉환되었지만³⁸⁾ 최근에서야 국내 봉환이 이루어졌다.

<구소련 지역 독립유공자 유해 국내 봉환 현황>

연번	유공자명	지역	훈격	안장지	봉안유형	봉환연도
1	김공집	러시아	애족장	국립서울현충원	묘소 (독립유공자-142)	1994
2	계봉우	카자흐스탄	독립장	국립서울현충원	총헌당 (320실144호)	2019
3	황운정	카자흐스탄	애족장	국립대전현충원	묘소 (독립유공자5-329)	2019
4	홍범도	카자흐스탄	대한민국장	국립대전현충원	묘소 (독립유공자3-917)	2021
5	최재형 ³⁹⁾	러시아	독립장	국립서울현충원	묘소 (독립유공자-108)	2023

앞에서 언급한 구소련 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 중 묘지 관련 시설은 최재형의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를 포함해 총 13곳이 확인되었으나 독립유공자 및 가족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것은 총 5차례에 불과하다.⁴⁰⁾ 구소련 지역에서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독립운동가 유해 및

37) 국가보훈처, 『2022년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023, 235~238쪽.

38) 「고국 돌아온 김공집 선생 유해 내달 국내봉환」, 『한겨레신문』, 1994년 6월 26일자.

39) 최재형의 묘는 1970년 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조성됐으나 가짜 유족 사건으로 2000년대 멸실돼 빈터로 남아있다가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키르기스스탄 공동묘지에 묻힌 배우자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의 유해를 봉환, 합장하여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묘를 복원하였다.

40) 1993년 김영삼대통령 담화 발표에서 당시 국가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 유해는 92위이며, 러시아지역에 8위가 남아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해외 87위 추가 봉환 위해 노력” 김대통령 담화 발표」, 『한겨레신문』, 1993년 8월 6일자.

묘소 찾기가 절실히 보이는 실정이다.

2019년 카자흐스탄에 안장되어 있던 계봉우, 황운정은 구소련의 고려인으로 강제 이주 지역인 카자흐스탄에서 공식 절차를 거쳐 모국으로 봉환한 최초의 경우로 현직 대통령이 해외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식을 주관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국내로 유해를 옮겨온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구소련 국가를 포함한 몽골, 중국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북방지역과의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문화·교육 분야 협력을 통한 한국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⁴¹⁾ 북방국가와의 문화·인적교류에서 가장 상징적인 성과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한 것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조와 지원으로 계봉우·황운정에 이어 2021년 8월에는 홍범도의 유해가 봉환될 수 있었다.⁴²⁾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다 현지에서 타계한 독립운동가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유족 등과 협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일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당연한 일이다. 다만 구소련 지역의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이 그간 미진했던 것은 정부가 이들 국가와의 외교적 교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국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첫째 멸실의 우려다.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구소련 지역은 전쟁 등으로 인한 외적 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피해로 파괴될 수 있다. 또한 환경적 변화와 지역 개발 등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가 묘소 찾기 및 유해 봉환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관리 부실로 인한 묘소 훼손이다. 요즘 장례문화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관습 약화, 가족 및 친족 범위 축소 등으로 묘지 조성과 관리에 부정적 견해와 개선의 필요성이 커진 양상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마당에 국외의 독립운동가 묘지도 관리할 후손이 없어질 것에 대비해 하루빨리 국내로 봉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현지 고려인과의 관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민족적 뿌리가 같다는 동포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지만 고려인의 이주 역사와 현지에 밝다는 점은 가장 이로운 부분일 것이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밝혀내고, 사적지를 발굴하는데 고려인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찾고, 국내로 봉환하는 일에는 현지 고려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관계성을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정부의 노력과 기념사업회 등 민간 단체의 관심이다.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은 국가 간의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며, 기념사업회나 민간 단체 간의 교류와 공통적 인식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유해 봉환 이후 현지의 묘터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 지원과 민간 단체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출함으로써 독립운동 사적으로 유지되고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1) 변현섭·박선진,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성과와 신정부의 과제 -문화·교육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제38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2. 2쪽.

42) 변현섭·박선진,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성과와 신정부의 과제 -문화·교육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제38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2. 16쪽.

5. 맺음말

1919년 3·1운동을 계승하며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순국하거나 공로가 있는 자를 조사하는 전담 부서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1939년 순국선열기념관일을 제정하는 등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에 대한 사안을 실시하려는 노력을 다했다.

해방 이후 국외 소재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은 1946년 삼의사의 유해 봉환을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 중국과 구소련과의 교류 통로가 이어지고,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와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로부터 현재까지 11개국에서 147위의 독립유공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어 국립묘지 등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중 23%가 해외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산할 때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찾기와 유해 봉환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외에 안장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국내 봉환 문제는 독립유공자 예우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국내 봉환 대상의 범위, 봉환 절차 과정과 방법, 안장의 장소와 형태 등에 있어서는 면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카자흐스탄에서 국내 봉환된 계봉우·황운정의 유해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국립묘지에 각각 안장되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묘소와 충훈당으로 봉안되는 상이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두 독립운동가의 본적은 함남과 함북으로 고향으로의 귀환도 아닌 대한민국으로 봉환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해방 직후부터 줄곧 시도되어 온 황해도 출신인 안중근의 유해 찾기와 2021년 카자흐스탄에서 국내로 봉환된 흥범도의 사안과 함께 볼 수 있다. 남북관계가 유연할 때는 상호 협력적 방안이 제시되지만 남북 간에 경색 국면으로 변하면 유해 봉환 문제가 정치적 문제와 연동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⁴³⁾ 독립운동으로 희생된 독립운동가를 선양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일임에도 남북의 분단과 갈등으로 유해를 봉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향후 조사와 봉환에 있어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최봉설의 묘는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아 국내 봉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내로 봉환된 기존의 묘터는 기능을 상실하여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봉환뿐 아니라 기존 묘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흥범도의 소련공산당 입당 이력과 마주하여 유해 봉환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바로프스크에 안장된 김승빈도 유사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구소련 지역 고려인 독립운동가 유해의 국내 봉환이 대한민국에서 이념적 논란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닌지 고려인 사회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광포한 탄압을 견디고 소비에트체제에 순응해야 하는 고려인의 삶과 독립운동의 시대적 맥락을 무시하는 편협한 인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43) 흥범도의 유해 봉환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자 북한은 고향이 평양인 흥범도의 유해를 남측이 봉환한다는 것에 '조상 전례의 풍습을 무시한 반인적 행위'라고 비난했다.('흥범도장군 유해봉환 요청은 도발, 문대통령 저격한 북 매체', 『국민일보』, 2020년 6월 23일자.)

<참고문헌>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 <https://e-gonghun.mpva.go.kr/>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보서비스 <http://mfis.mpva.go.kr/>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3』, 2013.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 2017.

독립기념관·국가보훈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8』, 2018.

국가보훈처, 『2022년 국가보훈처 보훈연감』, 2023.

장석흥, 「일제강점기 한인 해외 이주의 강제성과 귀환 문제」, 『한국학논총』 2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한철호, 「해방 이후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현황과 방향 제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이시종,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통한 ‘남북일’연대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85집, 2021.

황선익,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光復運動者 禮遇와 순국선열 紀念」, 『역사와교육』 제32집, 역사와교육학회, 2021.

김경제, 『재외동포의 귀환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변현섭·박선진,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성과와 신정부의 과제 -문화·교육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제38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2.

「구소련 지역 고려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의 의미와 과제」 토론문

이은홍 (명지중학교)

1. 논문의 내용과 의의

본고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의 주제를 주목하여 그 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 글입니다. 특히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독립운동가 묘지 현황과 유해 봉환의 문제에 천착하여 유해 봉환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고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유해 국내 봉환 대상의 범위와 절차에 대한 면밀한 방안 제시, 남북 이념을 뛰어 넘어 남북의 공동으로 유해 봉환에 협력하는 방안 모색, 기존 묘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고려인의 삶과 독립운동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 평가의 필요성 등입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 연구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독립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유해 봉환은 해당 주제를 연구하는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함의와 역사교육적 함의를 가집니다. 독립운동가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예우하고 기념하는지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표자가 주장한 것처럼 유해 봉환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묘터를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동의합니다.

둘째, 국외 이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합니다. 장별로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해외 이주부터 국외 독립운동가 묘지 및 유해 봉환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글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구소련 지역에서 강제 이주를 당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역사 속 소외된 주제들의 행적과 활동을 재발견합니다. 거대한 숫자에 파묻혀 있는 이주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행적 등을 주목한 연구로 시대사에 가려져 있던 소외된 역사의 주체를 발견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묘지와 유해에 주목하면서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살았던 치열했던 삶과 정신을 재발견 및 재구성하여 역사화하는 작업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유해 봉환 문제의 시의성을 다룹니다. 토론자가 보기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해 봉환 문제는 역사성과 현재성, 이념성을 동시에 가지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발표자가 글에서 밝혔던 것처럼 현재 유해 봉환은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이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향후 유해 봉환의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다른 남북한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해 봉환 문제는 정부가 행정력과 외교력,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유해 봉환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 봉환의 문제는 언제나 시의성을 가지게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논문의 의문점과 제안

본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발표자의 논문이 다른 연구와 어떤 차별성과 의의를 가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 선행 연구가 본문에서 인용만 되어있어서 본고가 어떠한 연구사적 맥락에서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을 주제를 연구하며, 무엇에 집중하여 분석과 해석을 진행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본고가 해당 주제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면 그와 관련한 의의를 밝혀주시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둘째, 머리말 부분에서 내용 연결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머리말에 첫 문단부터 세 번째 문단까지는 한국인의 국외 이주에 대한 일반적 내용인데, 네 번째 문단은 국외 독립활동 희생자 유해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머리말에 국외 이주자가 독립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타 다른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외 이주자와 독립운동가의 구분을 어떻게 지으실 것인지 기준이 필요해 보이고, 이에 따라 머리말도 이주 독립운동가 중심으로 수정되면 어떨지요. 그리고 머리말에서 본고가 왜 구소련 지역 고려인 독립운동을 다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들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16쪽 발표자의 주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① 멸실의 우려, ② 묘지 훼손, ③ 현지 고려인과의 관계성, ④ 정부의 노력과 민간 단체의 관심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①, ②와 ③, ④는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①, ②는 국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이 중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③, ④는 중요한 유해 봉환을 위해 방법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발표자가 생각하시는 국외 독립 운동가 유해 봉환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역사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연구자가 새롭게 발굴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자료의 분석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주로 4장에서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7』를 인용하여 12명의 고려인 독립운동가 묘지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칫 기존 자료의 나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누락된 새로운 자료를 찾아 내거나, 자료에 대한 의미있는 분류 및 해석 추가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물론, 신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관련 자료를 새로 발굴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째, 아직 국내로 유해가 봉환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업적 및 활동에 대한 내용 및 연구가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최봉설의 경우는 ‘용정 15만원 탈취사건’¹⁾ 등 대한 내용을 추가해주면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발표자가 주장하는 유해 봉환의 당위성에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섯째, 유해 봉환의 의미와 과제 중 의미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었으면 합니다. 발표자는 유해 봉환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독립운동가 예우’라고 서술한 부분에 공감합니다. 국가가 유해 봉환에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해 봉환을 죽은 자의 인권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인지, 국가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인지 논의하거나, 다른 사건이나 해외에서의 유해 봉환 사례를 살펴보면서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의 당위성을 논의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1) 고승룡, 「만주국시기 동만지역 일위특무조직과 특무 밀정들의 침략죄행연구」, 『한국보훈논총』17-4, 2018.

3. 소소한 오류와 제안

- 1) 김국 → 김구 (6쪽)
- 2) 일본의 간접 협의? (10쪽)
- 3) '귀환'과 '봉환'의 의미 차이는 무엇일까요? 3장 제목에는 '귀환'으로 쓰고, 4장 제목에는 '봉환'으로 쓴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목차)
- 4) 선행 연구의 추가
 - 신운용, 「안중근유해의 조사·발굴 현황과 전망」, 『역사문화연구』36, 2010.

구소련 지역 고려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의 의미와 과제

오일환(중앙대학교)

목 차

1. 들어가면서
 2. 박노학과 화태귀환역류한국인회
 - 1) 박노학의 강제동원과 귀환운동의 시작
 - 2) ‘화태귀환역류한국인회’의 초기 활동
 3. 민단, 일본 정관계와의 연계
 - 1) 일본 정관계 네트워크
 - 2) 외무성과의 협조
 - 3) 의원간담회 발족과 활동에 관여
 4.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
 - 1) 미하라 레이와 ‘부인회’
 - 2) 사할린재판
 5. 정부 간 외교협상
 - 1) 한국과 일본
 - 2) 일본과 소련
 - 3) 한국과 소련(러시아)
 6. 북한, 소련(러시아)
 7. 나오면서
-
-

1. 들어가면서

해방 이후 1990년대까지 사할린한인의 영주귀국이 실현되기까지 약 반세기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사할린한인의 영주귀국이 시작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학계에서 사할린한인의 역사와 귀환운동, 그리고 영주귀국 이후의 문제들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다만, 사할린한인의 귀환에 관해서는 일부 개인과 특정 단체, 그리고 한일 정부 간 합의에 관해서만 주로 알려져 왔을 뿐, 그밖의 수많은 개인과 여러 시민단체, 정치인, 러시아(구 소련)·북한·미국 등 제3국, 그리고 비정부기구의 개입과 역할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후 사할린한인의 귀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그간 역사학과 일

제강제동원 관련 연구 또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언급되어 온 주요 인물과 시민단체의 행위와 역할, 관련 당사국인 한국, 일본, 러시아(구 소련), 북한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박노학 등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관계, 한·일, 러·일, 북·러 간 협상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

사할린한인에 관한 연구는 사할린과 일본의 일부 연구자와 활동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인 복지고우(Бок Зи Коу)²⁾와 쿠진(Кузин А.Т)³⁾, 사할린한인인 박승의⁴⁾ 등의 저작, 그리고 1970년대 일본에서 사할린한인의 귀환을 지원하기 시작한 미타 히데아키(三田英彬)⁵⁾,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⁶⁾ 등의 책과 저술이 그것들이다.⁷⁾

이후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영주귀국자와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는 한인들에 관한 실태와 귀환운동에 초점을 둔 개인과 단체들의 자료집이 다수 출현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구는 2010년 이후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된 자료집과 보고서⁸⁾, 그리고 정혜경⁹⁾, 방일권¹⁰⁾, 이연식¹¹⁾, 오일환¹²⁾, 등의 연구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혜경은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관한 명부와 대한적십자사에 소장되어 있는 사할린한인 관련 명부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 초석을 놓았으며, 방일권, 이연식, 오일환의 3인은 각각 소련, 한국, 일본 정부의 공문서와 외교문서를 분석하여 사할린한인에 관한 정책과 한·일 및 일·소 간 협상에 관한 연구에 토대를 제공하였다.¹³⁾ 다만, 사할린한인에 관한 각국 정부의 공문

- 1) 그밖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미국 등의 개입과 역할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차후 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 2) Бок Зи Коу.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3, с. 102.
- 3) Кузин А.Т.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 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нография. В трех книгах. К. 2. Интеграция и ассимиляция(1945-1990 г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10. с. 72.
- 4) Пак Сын Ы. Проблемы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 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27-28 марта 2007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08. С. 277~287.
- 5) 三品英彬, 『棄てられた四万三千人:樺太朝鮮人の長く苦しい帰還の道』, 三一書房, 1981.
- 6) 大沼保昭, 『サハリン棄民: 戦後責任の点景』, 中央公論社, 1992.
- 7) 그밖에 일본의 연구와 자료는 다음과 같다. 小田島和平·矢野牧夫, 「サハリン国立文書館における日本文献所蔵調査」, 『1991年度'北の歴史·文化交流研究事業'中間報告』北海道開拓記念館, 1992 ; 柳下み咲, 「門戸開放2年目のサハリンを旅して図書館と文書館を見学する」 『びぶろす』第43巻第5号, 1992 ; 佐藤京子, 「サハリン州の文書館」, 『北海道立文書館研究紀要』第8号, 1993 ; 井濶裕, 「サハリン州公文書館の日本語文書」, 『アジア経済』第44巻第7号, 2003. ; 竹内桂, 『国文学 研究資料紀要』アーカイブズ研究 編 2号(通巻37号), 2005 ; 矢野牧夫 外, 「'樺太'のソ連邦領土編入に関する資料-サハリン州公文書館の調査から」, 『北海道開拓記念館研究紀要』24, 1996 ; 全国樺太連盟, 『サハリン州公文書館所蔵日本関係文書件名目録』, 2000. 井濶裕, 「資料 サハリン州公文書館 の日本語文書」, 『アジア経済』44巻7号, 2003 ; 崔吉城 外, 『ロシア·サハリンにおける日本植民地遺産と朝鮮人に関する緊急調査研究』, 科研-14 41015 研究成果報告書, 2004.
- 8) 김명환, 「사할린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실태 및 귀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Ⅱ-2, 2016.
- 9) 정혜경, 「1944년에 日本 本土로 '轉換配置'된 사할린(樺太)의 朝鮮人 鑛夫」, 『한일민족문제연구』제14호, 2008, 5~73쪽 ; 정혜경, 「전시체제기 樺太 전환배치 조선인 노무자 관련 명부의 미시적 분석」, 『송실사학』제22집, 2009, 155~182쪽 ; 정혜경, 「대한적십자사 소장 사할린 한인 관련 문서를 통해 본 '일시모국방문'(1980~1990년대)」, 『한국민족운동사학회』112권, 2022, 347~406쪽.
- 10) 사할린한인사에 대한 국내 연구와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방일권,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한인 연구 - 연구사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38호, 2012, 363~413쪽 참조.
- 11) 이연식, 「화태청(樺太庁) 자료를 통해 본 일본제국의 사할린한인 동원 실태연구」, 『일본사상』 32호, 2017, 152~153쪽.
- 12) 오일환, 「박노학의 생애와 사할린한인 귀환운동에 관한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제38호, 2018, 255~307쪽.
- 13) 이연식·방일권·오일환 저,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 사할린한인 문제를 둘러싼 한러일 3국의 외교협

서와 외교문서 등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 3인의 연구는 1990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연구에 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박노학과 그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회 단체의 활동에 관한 연구, 외교부의 외교사료관에서 최근에 공개된 1990년대 초반의 사할린한인에 관한 외교문서를 중심으로¹⁴⁾, 사할린한인의 귀환과 영주귀국을 둘러싼 개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국들 간의 입장과 태도, 관계 및 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박노학과 화태귀환역류한국인회

사할린한인 귀환은 한국과 일본 등 정부 간 협의에 의해 성사되었지만, 그 시작과 가장 큰 동력원은 바로 사할린한인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개인과 시민단체의 눈물겨운 호소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박노학과 그가 주도한 제일 ‘화태귀환역류한국인회’의 활동은 그 중심이었다고 할 것이다.

1) 박노학의 강제동원과 귀환운동의 시작

박노학은 1914년생으로 충청북도 충주시 출신이다.¹⁵⁾ 중농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서 충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린 시절 숙부로부터 기본적인 한학과 한자를 익혔다. 15세 이후 이발관의 견습생을 거쳐 이발사라는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1934년 혼인하여 장남 박창규를 비롯해 2남2녀의 자녀를 두었다. 결혼 후 박노학은 함경남도 장진군의 대동광업(大同鑛業) 기계부에 취업하였다. 이후 여러 도시들을 전전하며 기술직과 이발소, 무역업 등에 종사했다.

1942년 7월 무렵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다시 충주로 내려 와 이발관에서 일하던 중, 박노학은 동창생으로부터 사할린 노무자에 ‘응모’하라는 권유를 받게 된다. 마침 가족 생계를 위해 더 나은 보수와 직업을 찾던 박노학은 친구로부터 ‘어차피 한 집에 남자 둘이면 한 사람은 징용 가야하는데, 어차피 갈 거면 빨리 지원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를 듣고 사할린 노무자 모집에 응모하였다. 박노학은 당시 이발소 수입이 ‘1일 2엔’이었는데, 사할린 인조석유회사에 가면 ‘1일 7엔’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했다고 하였다.

1942년 12월 6일 박노학이 배치된 곳은 사할린 오토마리(大泊, 코르사코프)에 있는 나이부치탄산(內淵炭山)이었는데, 1944년에 명칭이 ‘제국연료주식회사 나이부치탄광 제2사업소’로 바뀌었다. 이곳에서 박노학은 ‘갱내 기계부’에 배속되었다. 12시간 교대제로 중노동에 시달리던 박노학은 당초 계약과 달리 막상 가족들에게 송금된 금액은 ‘2엔 50전’에 불과했다고 기록했다. 계약 2년차인 1945년 6월 무렵엔 헌병중대장 등이 와서 집에 갈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 계속 일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일본 당국과 관리자들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조선인들은 배를 타기 위해 최남단의 항구인 코르사코프로 몰려들었지만,

상』, 채륜, 2018년.

14) 외교사료관이 2023년에 공개한 사할린한인 관련 문서는 3종인데, 이 가운데 사할린한인에 관한 것은 2종이다. 모두 1991~1992년에 작성된 것이다. 동북아1과 외, 『재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및 영주귀국문제 검토, 1991-92』; 재외국민2과, 『재사할린 동포 모국 방문, 1992』

15) 이하 내용은 박노학의 장남 박창규와의 구술면담(2019.5.21)과 박노학의 자필이력서를 참고한 것이다.

일본인들만 승선하여 철수하고 조선인들을 태우지 않았다. 이윽고 소련군 연안경비대의 감시와 횡포가 심해지자 남겨진 조선인들은 추위를 피하고 생계를 위해 벌목장과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흩어졌다. 이때 박노학은 동향 사람들인 이희팔, 이문택 등과 함께 막노동을 하며 지내다가 ‘조선인거류민회’를 만들었는데, 각자 생계 활동과 귀환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성격의 친목회에 불과했다.

사할린에 발이 묶인 조선인들은 각자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하는데, 1947년 9월 무렵 박노학은 지인의 소개로 일본인 여성 호리에 가즈코(堀江和子)와 결혼하였다. 당시 사할린에서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조선인 남성들과, 남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결혼 적령기의 일본인 여성 간의 혼인이 적지 않았다.¹⁶⁾ 귀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박노학은 조선에서 이미 결혼하여 자식이 있었지만, 사할린에서 일본인 여성과 중혼을 선택한 것이다. 그후 박노학과 호리에 사이에 3남매가 태어났다.

이런 가운데,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 따라 국교가 회복되자, 사할린잔류 일본인의 귀환이 추진되었다.¹⁷⁾ 이때 한국인 남편의 동반 귀환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로써 박노학, 이희팔 등 일본인 아내를 둔 한국인의 일본 귀환이 이루어졌다.

박노학 등 일행이 일본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할린에 남겨진 지인과 친구들은 이들을 환송하는 한편 고향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소식을 어떻게든 전해달라고 당부하고 애원했다. 이에 박노학 등은 일본으로 귀환하는 배 안에서 사할린에 남겨진 동포들의 귀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고, 실제로 남은 여생을 사할린한인의 귀환운동에 헌신했다.

1957년 일본으로 귀환한 박노학, 이희팔 등은 ‘화태역류귀환한국인회’(이하 ‘한국인회’¹⁸⁾)를 결성하고 박노학은 대표로 추대되었다.

이후 박노학 등은 주일한국대표부를 비롯해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대한적십자사, 일본적십자사, 소련(러시아)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각국 국회의 의회, 방송사,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관계 기관과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탄원서와 호소문을 전달하며 사할린한인의 귀환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박노학은 일본과 소련 간 서신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할린의 한인들이 보내 온 편지와 답장을 한국의 각 고향과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사할린한인이 보내 온 편지 속에 적힌 사할린한인들의 인명과 가족관계 등을 별도의 명부로 정리하고 증보해 나갔다. 그리고 이 명부를 다수 복사하여 각국 정부와 적십자사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며 사할린한인의 존재와 간절한 열망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이 이른 바, ‘박노학 편지’ 또는 ‘박노학 명부’라 불리는 것이다.

1967년 기준으로 작성된 ‘박노학 명부’에 따르면, 한국 또는 일본으로 귀환과 영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1,744세대, 6,924명에 달한다.¹⁹⁾

당시 소련은 사할린한인의 역류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들의 귀국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사할린한인 문제에 관여하기를 거부해 왔는데,

16) 일본인 남성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귀환하자, 사할린에 남겨진 고아, 어린 여성, 독신 여성들은 러시아 남자들을 두려워하며 나이가 들어 결혼적령기가 되자 조선인 남성과의 결혼을 선호하였다.
17) 일본의 패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사할린의 일본인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혼인한 경우라도 일본인 호적과 국적을 가진 사람만 귀환할 수 있었다. 이에 조선인 남성과 결혼한 가정의 일본인 처들은 남편과 자식들을 두고 일본으로 귀환할 수 없어 계속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었다.
18) 단체의 명칭은 몇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사할린귀환재일한인회’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모두 ‘한국인회’로 통칭한다.
19) 1967년 작성된 일본의 사본(대한적십자사 소장)에서 필자가 발췌. 이연식·방일권·오일환,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 : 사할린한인 문제를 둘러싼 한·러·일 3국의 외교협상』, 149쪽.

박노학이 작성한 명부를 통해 이들의 실체와 귀환 의사가 명백히 밝혀짐으로써 한국과 일본, 소련의 각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이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80년대 후반 사할린한인의 일시 일본 방문과 가족상봉, 모국방문, 영주귀국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박노학 명부라고 할 수 있다.

2) ‘화태귀환억류한국인회’의 초기 활동

박노학과 이희팔 등이 주도한 ‘한국인회’는 박노학의 다섯 식구가 거처하는 단칸방에서 시작되었다. 주로 막노동을 하는 회원들이 회비를 모았지만 박노학과 부인의 헌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간혹 외부인과 몇몇 단체가 후원금을 제공했지만 우표값에도 미치지 못했다. 어느 독지가가 큰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박노학은 “동포들을 위해 좋지 않다”며 거절한 적도 있다.²⁰⁾

‘한국인회’가 처음에 시작한 일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일한국대표부를 찾아 가 사할린한인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의 귀환에 한국 정부가 나서 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후 사할린의 한인들이 박노학에게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귀환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하자, 박노학은 이 편지를 한국의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다시 가족들의 편지를 받아서 사할린에 보내는 운동에 매달렸다.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장남 박창규를 통해 인편으로 전국의 가족들에게 편지와 답장을 주고 받다가, 편지의 수가 늘어나고 소재가 불분명한 가족을 직접 찾아나서야 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리고 가족들마저 박창규와 박노학을 직접 만나²¹⁾ 소식을 듣고자 하는 일이 늘어나자, 박노학은 국내에서도 단체의 조직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위해 나섰다. 박노학은 한영상, 이두훈 등을 설득하여 ‘화태억류교포귀환촉진회’(나중에 ‘중·소이산가족회’로 변경)를 결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박노학 편지’는 장남 박창규와 ‘중·소이산가족회’를 통해 국내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국가와 정부 간 수교가 없고, 우편교환조차 불가능한 시절에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3국 간 우편교환 시스템이 이루어진 것이다.

동시에 박노학과 ‘한국인회’는 사할린에서 밀려드는 편지를 정리하고 명부를 작성한 다음, 이를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제출하고, ICRC에도 보내는 사업에 착수했다.

탄원서와 호소문, 그리고 ‘박노학 명부’의 제출은 해마다 빠짐없이 반복되는 일이었는데, 박노학과 ‘한국인회’ 회원들은 주일한국대표부와 일본 정부 기관, 각 적십자사를 방문하여 읍소하고 호소하였다. 해마다 담당자가 바뀌고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박노학 등은 끊임없이 각 기관과 담당자를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읍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사할린한인 귀환에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외교적 압박을 가하게 만들었으며, 일본 정부가 소련에게 사할린한인의 귀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가하게 만들었다. 주일한국대표부와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된 박노학과 ‘한국인회’의 호소와 증거물(‘박노학 명부’)는 결국 한국 외교부와 정부가 대일협상에서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에 압박을 가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도 ‘박노학 명부’를 주소련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 출국희망자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소련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답변하도록 추동했다.²²⁾

20) 産経新聞, 「凍として」取材班, 『凍として-日本人の生き方』, 202쪽.

21) 박노학은 일본 정착 후 고향인 청주의 본가를 이따금 방문하였다. 이때 사할린에 남겨진 가족들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국내 가족들이 청주의 본가를 찾아 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장남 박창규의 증언.

22) 大沼保昭, 『サハリン棄民-戦後責任の点景』, 中公親書, 1992, 75~76쪽.

한편, 사할린한인 귀환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박노학과 한국인회는 탄원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각국 정부와 관계기관을 추동하는 시민단체로서의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단체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정부 간, 정부와 국제기관(ICRC) 간의 협조와 연대를 이끌어 내고 직접 수행하는 수준으로까지 진화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3. 민단, 일본 정관계와의 연계

1) 일본 정관계 네트워크

박노학과 ‘한국인회’의 초기 활동은 탄원서와 ‘박노학 명부’ 등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사할린한인과 가족을 연계해 주는 수준이었는데, 점차 국내외 시민단체와 정치인, 양국 정부와 관련 기관을 추동하고 외교협상을 지원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실무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 당국과 협조하는 관계로 진화했다. 그 배경에는 박노학과 ‘한국인회’가 국내외 관계기관과 형성한 네트워크가 있었다.

초창기 박노학과 ‘한국인회’가 주로 활동한 대상은 ‘재일대한민국민단’(이하 ‘재일민단’)과 한국 정부였다. 1970년 ‘한국인회’가 이후락 주일한국대사에게 보내는 탄원서의 표지에는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소속 ‘화태역류귀환한국인회’라고 기록되어 있다.²³⁾

이때 민단의 활동가이자 재력가였던 김주봉(金周奉)은 박노학과 ‘한국인회’의 후원자가 되었으며, 일본의 유력인사와 정치인을 연결시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노학과 ‘한국인회’가 일본의 주요 정치인과 연결될 수 있었던 접점은 김주봉이 소개한 자민당 고문인 호시시마 니로(星島二郎) 전 의원이었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 존경받는 원로였고, 여야 정치인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정치인이었다. 호시시마는 박노학의 열의에 동감하며 그를 일본의 전현직 총리와 자민당의 주요 정치인, 민사당의 다부치 테츠야(田淵哲也) 의원, 공명당의 부대표인 쿠사가와 쇼조(草川昭三) 참의원의원 등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호시시마는 총리와 주요 정치인, 외무성 관료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박노학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주선하기도 했다. 그의 주선으로 박노학은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외상과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수상에게도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를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다나카 수상은 호시시마 고문과 다부치 의원, 그리고 한국 정부로부터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박노학의 적극적인 호소와 로비가 뒷받침되었다. 이에 다나카 수상은 소련을 방문하기 2개월 전인 1973년 여름 무렵 이례적으로 외무성, 법무성, 후생성, 경찰청의 각 실무자에게 사할린한인 문제의 검토와 일소회담에서의 대응에 관해 조사하고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원래 니카이도 스스무(二階堂進) 관방장관이 주도하는 소련 방문 준비를 위한 연구회에 다나카 수상이 나타나 직접 주관한 적이 있는데, 이때 사할린한인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²⁴⁾

그 결과, 1972년 1월 소련의 그로미코(Андрей А. Громыко) 외상이 전후 최초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후쿠다 외상은 사할린한인의 귀환 문제에 ‘호의적 검토’를 적극 요청했다. 1973년 10월 소련을 방문한 다나카 수상은 브레즈네프 서기장과의 회담에서 북방영토 문제 외에 사할린한인의 귀환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서 소련 측을 놀라게 했다.²⁵⁾ 당시 다나카 수상은 브

23) 華太抑留歸還韓國人會, 『歎願書』, 1970년(월일 미상), ‘박노학 유품(박창규 제공)’에서.

24) 大沼保昭著, 앞의 책, 90쪽. 오누마는 당시 다나카 수상이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꼬여있던 한일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사할린한인 문제에 적극적이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다.

25) 위의 책, 88쪽. 물론, 당시 일본이 소련에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요

레즈 네프(Леонид И. Брежнев) 서기장 외에 코시긴(Алексей Н. Косыгин) 수상, 그로미코외상 등 소련 수뇌부를 상대로 모두 네 번의 회담 기회 때마다 사할린한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일본 수상의 적극적인 태도는 단순히 한국 정부의 요구와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박노학과 호시시마이 직접 또는 주요 정치인들을 통해 수상과 외상 등에게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를 잘 설득함으로써, 한일과 일러간의 중대한 외교적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데 서로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밖에 민사당의 다부치 의원, 우케다 신키치(受田新吉) 의원, 공명당의 부대표인 쿠사가와 쇼조(草川昭三) 참의원의원 등은 수시로 대정부질의에서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고, 박노학과 빈번하게 접촉하며 소련에 대한 정보 공유와 문제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쿠사가와 의원은 평소 박노학과의 교류를 통해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일본인 성묘단의 사할린 방문 행사 등을 위해 소련을 방문할 때마다 소련 측과 접촉하며 사할린한인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는 데 노력하였다. 당초 소련 측은 난색을 표했지만, 쿠사가와 의원과 박노학의 논의를 통해 소련 측에 '일본 일시방문 및 가족상봉'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1984년 9월 사할린한인의 최초 출국, 즉 일본 일시방문을 통한 한국 가족과의 상봉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 외무성과의 협조

박노학과 '한국인회'는 단순히 일본 정관계 인사에게 탄원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과 협력을 통해 사할린한인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도 참여하였다.

1973년 초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입국사무소가 '일본이 입국을 허용하면 사할린한인의 출국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방침을 입수한 박노학은 이 정보를 곧바로 외무성에 전달하였다. 이는 곧 일본의 외교 경로를 통해 확인되었고, 일소 간 외교협상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75~1976년의 일명 '나훗트카 4인 사건'이 발생하자, 외무성은 박노학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였다. 오랜 기간 출국을 요청해 왔던 황인갑 등 4인에게 사할린 당국의 허가를 받아 나훗트카에서 일본영사관의 비자를 신청했는데,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국 보증'을 전제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는 '다나카 답변'²⁶⁾의 원칙을 고수할 때였다.

1976년 '나훗트카 4인'이 일본 입국 비자를 신청하자, 당시 외무성은 한국 정부의 보장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그러자, 6월 하순 외무성 담당자는 박노학에게 긴급히 연락을 해서, 한국 정부의 '입국허가 보증'이 나올 동안 일본의 통과사증 발급에 필요한 '신원보증인'의 주선을 의뢰하였고 박노학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하였다. 박노학은 김주봉 이사장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하여 일본 정부의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시켰다.

비록 한국 정부의 대응 지연과 '나훗트카 4인'의 여행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이들은 일본으로의 출국을 포기하고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그 사이 외무성과 박노학의 정보 공유와 '신원보증' 공조 등의 협조 관계는 이후 전개될 사할린한인의 '일시 일본방문' 성

구와 외교적 노력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박노학 등 '한국인회'의 접촉과 설명, 노력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26) 1972년 7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다나카 수상이 사할린한인의 일본 입국 허용의 전제조건을 가리킨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국 허용, 즉 한국 귀환을 전제로 한 일본 통과 허용'이었다.

사에 새로운 발판이 되었다.

3) 의원간담회 발족과 활동에 관여

1980년대 후반 사할린한인의 ‘일시 일본방문 및 가족상봉’, ‘일본방문 중(일본 경유) 일시 모국 방문’,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직행하는 ‘일시 모국방문’, 나아가 ‘영주귀국’ 사업이 차례대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과 소련 정부 간 협의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할린잔류 한국·조선인 문제 의원간담회’(이하 ‘의원간담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의원간담회’는 일본의 여야 정치인들이 두루 참여했고, 일본 정부에 사할린한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지원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한편, ‘의원간담회’가 직접 사할린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소련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중재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협조를 중재하기도 하고, 북한과의 물밑 교섭을 통해 북한의 호전적인 반대를 무마시킴으로써 단계적 귀환운동이 추진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⁷⁾

이처럼 ‘의원간담회’가 발족하고 관련 정부와 관계 기관들을 추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박노학과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다카키 겐이치(高木健一) 등의 계획적인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아시아에 대한 전후책임을 생각하는 모임’을 이끌며 박노학과 사할린한인 귀환운동을 해왔던 오누마, 다카키 등은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을 움직이기 위해 집권당인 자민당과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조직체의 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1986년부터 직접 주요 정치인들을 설득하여 참여할 의원들을 수배하여 자민당의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²⁸⁾ 총무회장을 비롯해, 마당발인 하라 봄베에(原文兵衛)²⁹⁾ 의원, 사회당의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廣三), 도이 다카코(土井たか子)³⁰⁾, 사민련의 에다 사츠키(江田五月) 등 거물급 여야 국회의원 138명이 참여하는 ‘의원간담회’를 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의원간담회의 결성과 활동, 그리고 그 영향력은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과 소련의 관계 당국과 시민사회, 여론 나아가 북한에까지 전방위로 미쳤기 때문에 사할린한인 귀환운동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 의원간담회의 주요 활동방침과 세부적인 운영전략, 대정부 질의 등은 당연히 박노학과 오누마, 다카키, 미하라 레이(三原令) 등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의원간담회에 제공한 것이었다.³¹⁾

4.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

1) 미하라 레이와 ‘부인회’

박노학과 ‘한국인회’의 귀환운동은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대함으로써 그 활동의 규모와 내용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27)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문제 의원간담회 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역,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문제와 일본의 정치』,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4.

28) 아베 신조의 부친이다.

29) 뒤에 중의원의장을 역임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의 이사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인물이다.

30) 뒤에 사회민주당 출신으로 일본 최초의 여성 중의원의장을 역임하였다.

31) サハリン残留韓国・朝鮮人問題議員懇談会 編, 『サハリン残留韓国・朝鮮人問題と日本の政治 議員懇談会の七年』, 1994.2.

박노학과 ‘한국인회’가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첫 번째 계기는 미하라 레이(三原令)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평범한 일본의 주부였던 미하라는 생활협동조합 운동과 외국인 등 마이너리티의 인권옹호에서 출발했다. 그녀는 1973년 한국인 밀입국자인 김무근(金武根)³²⁾ 학생의 구명운동을 벌이다가 사할린한인 문제를 알게 되었다.³³⁾

박노학을 직접 찾아 가서 사할린한인 귀환운동에 뛰어든 미하라는 ‘화태억류귀환한국인회에 협력하는 부인들의 모임’(樺太抑留帰還韓国入会に協力する妻の会, 이하 ‘부인회’)을 결성하고, 모임의 기관지인 『부인(妻)』을 발행하면서 ‘화태잔류자귀환 청구소송’(이하 ‘사할린재판’)을 추진하는 데 열성적인 활동가가 되었다. ‘부인회’에는 박노학의 아내 호리에를 비롯하여 일본인 여성 시민운동가와 주부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나중에 사할린한인의 일시방문 및 가족상봉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나아가 미하라는 과거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청년들을 모아 사할린한인의 귀환운동을 일본 사회에 홍보하는 데 주역했다. 미하라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은 ‘부인회’와 일본인 여성, 주부, 학생, 청년들을 연계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고, 자료와 책자의 발간과 우송, 팸플릿 제작, 기사 투고, 강연회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2) 사할린재판

이러한 활동은 일본사회에 사할린한인 문제를 각인시킨 ‘사할린재판’의 시작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미하라는 박노학과 함께 ‘사할린잔류자귀환 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식있는 일본인 변호사의 섭외에 나섰다. 이때 중견 변호사 아리가 마사아키(有賀正明)를 직접 찾아 간 것이 바로 미하라였다. 미하라의 열성적인 설득 덕분에 아리가 변호사는 무보수 변론을 약속했고, 이후 다카키 겐이치(高木健一), 아리가 마사아키(有賀正明) 변호사 등도 사할린한인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³⁴⁾

1975년 다카키 겐이치(高木健一) 등 일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재사할린 한국인 귀환소송 변호인단’을 결성하고 사할린한인 4명을 원고로 내세워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4년에 걸친 재판에서 박노학과 ‘한국인회’ 그리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였다. 박노학은 사할린한인 약 100여 명에게 연락을 취하여 64명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냈다. ‘한국인회’는 일본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미하라 등의 ‘부인회’는 소송 지원을 위한 자금모금에 나서고 전단지 배포, 집회와 공부회 개최, 노조단체 등의 협력 호소, 매스컴에 알리기, 외무성 등 관계 기관에 청원소 보내기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미하라는 ‘화태억류한국인귀환청구소송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를 결성하고 소식지를 발행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펼쳤다.

다카키 변호사 등은 박노학과 함께 재판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여 명의 변호인단을 발족시켰다. 그리고 1975년 12월 1일 도쿄지방법원 민사3부에 ‘화태잔류자귀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9년까지 14년 간 소송을 진행하였다.

재판 중에도 박노학과 변호사, 실행위 등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부치 의원 등을 통해 의

32) 제주도 출생의 김무근이 1967년 일본에 밀입국했다가 당국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미하라 등 일본인과 한국인 단체가 김무근을 후원했는데, 김무근은 오무라(大村)수용소를 거쳐 한국으로 귀국(추방)하였다.

33) 村田豊明著, 『わたし、ただの主婦です : 三原令さんの記』, 新泉社, 1984年, 109~130쪽 ; 三原令, 「金武根と浦和の主婦たち」, 『朝鮮研究』108号, 1971, 15~25쪽.

34) 村田豊明著, 『わたし、ただの主婦です : 三原令さんの記』, 新泉社, 1984年, 143쪽.

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외무성을 방문하여 정부 입장을 추궁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협조관계는 ‘사할린재판’이 정체되거나 위기에 빠진 순간에도 빛을 발했다.

1982년 재일동포이자 친북 작가인 이회성(李恢成)이 1982년 『사할린으로의 여로(サハリンへの旅)』라는 책을 발간하여 사할린한인 귀환운동과 ‘사할린재판’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반공·반북·친한적 정치활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서자, 일본 시민들과 재일한인 커뮤니티에서 사할린 귀환운동과 ‘사할린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박노학과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인 시민들은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국제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박노학과 일본 시민 지원단은 1983년 초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과 조선·한국인, 중국인 등 아시아인의 전쟁피해 보상 문제에 관심을 지닌 학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모여 4월에 ‘아시아에 대한 전후책임’을 생각하는 모임’(이하 ‘전후책임 모임’)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전후책임 모임’은 그해 6월 사할린한인 문제를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전후책임 모임’의 하라코 산지(原後山治) 변호사가 유엔의 차별방지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에서 사할린한인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이 문제의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하였다.

또한 ‘전후책임 모임’은 이듬해인 1984년 8월 국제심포지엄 개최하여 일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측에서는 ‘중소이산가족회’의 이두훈 회장과 배재식 서울대 교수, 함정호 변호사 등 9명이 참석하여 한일 시민사회 간 연대를 보여주었다. 국제심포 준비와 개최를 통해 ‘전후책임 모임’에 참여한 변호사, 지식인, 언론인 등은 반소·반일·반공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인권적 차원에서 사할린한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할린재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잦아들었다.

1989년까지 계속된 ‘사할린재판’은 원고들이 모두 사망함으로써 최종적인 판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하지만 64회에 걸친 구두 변론과 재판과정을 통해 일본사회에 사할린한인 문제를 각인시키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³⁵⁾

1984년 박노학 등의 끈질긴 노력 끝에, 소련이 10명 단위의 일본으로의 출국과 가족 상봉을 허용하면서부터 사할린한인의 출국과 가족상봉, 모국방문, 그리고 영주귀국으로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1984년 처음으로 사할린한인 10명이 일본으로 출국하기까지 이들의 초청하고 입국수속과 한국의 가족 초청, 체류 뒷바라지 일체를 박노학과 ‘한국인회’가 주도하였다. 일본 정부가 다카키 변호사를 통해 일부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사할린한인과 한국에서 오는 가족들을 마중하고 이들의 상봉을 주선하고 이들의 숙소를 제공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한 것은 박노학과 그 일가족, 그리고 ‘한국인회’, ‘부인회’ 등의 노력과 헌신이 절대적이었다.

1988년 3월 박노학 사후에는 ‘한국인회’의 2대 회장인 이희팔을 중심으로 이갑수, 쿠라모토(倉本フサ子) 부부와 재일한인 동포, 기독교 관계자 등이 ‘사할린잔류한국·조선인 원호회’를 조직하여 이 ‘일시 일본방문 및 가족상봉’ 사업을 지원했다. 그리고 박노학의 부인인 호리에 가즈코 외에 아라이 사와코(新井佐和子), 다키자와 다츠오(滝沢達夫) 등의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은 ‘사할린재회 지원회’를 조직하여 이 사업을 지원했다.³⁶⁾

35) 新井佐和子, 『サハリンの韓国人はなぜ帰れなかったのか - 帰還運動にかけたある夫婦の四十年』, 草思社, 1997; 金敬得, 「日本에서의 在サハリン韓国人歸還運動의 経緯와 現段階」, 『大韓辯護士協會誌』 88호, 1983.7, 14~18쪽.

5. 정부 간 외교협상

1) 한국과 일본

전후 사할린한인의 귀환은 크게 다음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시기	주요 사건
제1기	해방 ~ 1940년대	개인별 귀환
제2기	1950년~1980년대	정부 간 협상에 의한 일시방문, 모국방문 등 개시
제3기	1989년~2007년	한러 수교 및 1세대 영주귀국 실현
제4기	2008년~현재	2세대 영주귀국, 역방문, 3세대 정착 지원

한국전쟁 전후 시기까지 한국 정부는 사할린한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사할린한인 문제를 외교적 사안으로 인식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이다. 1956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주노(Marcel Junod) 부총재 등 사절단의 한국 및 일본을 계기로 사할린한인 문제가 떠올랐다. 당시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 사이에는 오무라(大村)수용소와 부산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일동포와 일본인 어부 등의 억류 문제를 놓고 3개국 정부와 각 적십자사 간의 공방이 치열했다. 이때 ICRC가 사할린에 억류 중인 한인들의 귀환 문제 역시 억류자 송환 차원에서 각국을 방문하여 수용소를 둘러보고 각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려고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다. 하지만 사할린한인 이슈는 각국 수용소의 인질 문제에 비해서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³⁷⁾

ICRC의 사절단 방한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1957년 8월 6일 일본 정부에 외교구술서(Note Verbale)을 전달하여, 일본 정부가 사할린한인의 귀환을 책임지고 소련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사할린한인에 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외교문서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다.³⁸⁾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할린한인을 소련과 협상하여 귀환시킬 책임이 있으며 이때 1인당 1만엔의 귀환 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사할린한인을 한국으로 귀환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들의 한국 귀환보다는 일본에 체류시킬 것을 선호했다. 이는 당시 국내 실업률이 높고 소련 치하에서 있었던 한인들의 좌익 또는 친북성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박노학과 ‘한국인회’의 탄원과 이른바 ‘박노학 명부’를 통해 사할린한인의 존재가 확인되자, 한국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ICRC가 이들의 송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다. 동시에 한일회담에서는 청구권, 재일동포 법적지위, 선박 등의 이슈에 밀려 사할린한인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비로소 사할린한인 이슈가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사할린한인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일본

36) 大沼保昭著, 앞의 책, 196~197쪽 ; 新井佐和子, 앞의 책.

37) 당시 3국간 인질 및 억류자 문제 등에 관한 협의는 吳日煥, 「引揚・送還をめぐる1950年代の日中・日朝交渉に関する研究-交渉戦略と交渉理論」, 國際政治經濟學博士學位論文, 筑波大學大学院人文社會科學研究科國際政治經濟學專攻, 2006年度 참조 바람.

38) 이 외교문서의 존재는 필자가 외교부 지하서고에 보관중인 비공개 문서 『樺太僑胞關係資料』(1981년)과 『樺太僑胞關係資料』(1983년)을 발굴하여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外務部, 『樺太僑胞關係資料』, 1981.6. ; 外務部, 『樺太僑胞關係資料』, 1983.1. 참조.

정부는, 1966년 3월 30일 일교 경로를 통해 사할린한인 문제에 대해 일본이 소련과 협의할 용의가 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 왔다. 첫째, 한국 정부가 모든 사할린한인을 받아들인다. 둘째, 일본 정부는 사할린한인의 귀환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³⁹⁾ 그러나 얼마 후 일본 정부는 첫 번째 조건인 사할린한인의 한국 귀환을 한국 정부가 보장할 경우, 선편을 제공하는 등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⁴⁰⁾

이후 80년대까지 일본 정부는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오는 모든 한인을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귀국시킬 것을 보장한다면 교통비용 등의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는 사할린에서 출국한 한인들이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며 한국 정부가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간다고 보장한다면 소련과 협의하고 이들의 수송 비용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특히 한일 양국 정부는 국교정상화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일각료회담에서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를 협의하였다. 1969년의 제3차, 1977년의 제9차, 1978년의 제10차 각료회담에서는 사할린한인 귀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973년 무렵 일소 간 협의를 통해 사할린한인의 출국과 일본 입국 가능성이 열리자, 1974년 200여 명의 사할린한인이 소련주재 일본대사관에 입국신청을 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의 일본 입국을 허가하되 한국 정부가 이들을 모두 인수하여 한국으로의 귀국을 보장할 것과 선박운임비는 지원하되 정착금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5월 8일 이들의 한국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였다.⁴¹⁾

그밖에 한일 양국과 각국 적십자사 간의 협의와 ICRC의 중재 노력 끝에,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써 1971년 1명, 1976년 2명, 1977년 1명의 사할린한인의 출국이 승인되어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하지만 소련 측은 이례적인 승인 외에, 일소 간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나머지 사할린한인의 출국 문제를 불허하였다.

1980년 이후 한국 정부는 한일 각료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사할린한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ICRC에도 협조 요청을 거듭하였다.

1988년 3월 한국 국회는 ‘사할린동포 귀환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일본을 압박하였다. 이후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소련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자 일본 정부에 사할린한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 무렵 소련은 사할린한인에게 일본으로의 출국을 허용함으로써 일본에서의 가족상봉이 가능해졌다. 소련과 일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박노학과 ‘한국인회’는 한국 내 가족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박노학의 자택에서 사할린한인과 가족상봉을 주선하였다. 이를 통해 한소 수교 전까지 무려 1,100명의 사할린한인이 일본에서 가족상봉을 할 수 있었다. 이때 일본 정부는 다카키 변호사를 통해 일본을 방문하는 사할린한인의 체재비를 지원하였다.⁴²⁾

이러한 방식은 점차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진화하여 한국으로의 일시방문, 나아가 모국방문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39) 外務部, 『樺太僑胞關係資料』, 1981.6., 38~39쪽.

40) 위의 자료, 39쪽.

41) 外務部, 『樺太僑胞關係資料』, 1983.1., 52~53쪽.

42) 1988년 사할린한인의 일본 내 체재비 지원금으로 일본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700만 엔이었다.

2) 일본과 소련

전후 소련 정부는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귀환하려는 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과 ICRC의 요구와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그후 1970년대에 접어들자, 일본과 ICRC의 거듭된 요구에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1972년 1월 일·소 정기각료회의에서 후쿠다(福田康夫) 외상이 그로미코(Gromyko) 외상에게 사할린한인의 송환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자, 그로미코 외상은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동안 한국으로 귀환하려는 사할린한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 왔던 소련 정부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5월에는 ICRC 총재와 일본적십자사 총재가 소련을 방문하여 트로얀스키 소련적십자사 총재에게 사할린한인 귀환에 협조를 요청하자, 트로얀스키 총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⁴³⁾

이윽고 1973년 9월 일본 민사당의 다부치(田淵哲也) 의원이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 외무성 극동 제2부장 유코니시코프를 만나서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에 협조를 타진하자, 그는 “무국적자의 출국은 자유다. (중략) 한국과 국교가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출국은 허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으로 간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⁴⁴⁾ 사실상 소련 정부가 사할린한인의 일본 출국, 즉 귀환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를 계기로, 소련 측이 일부 사할린한인의 일본 출국을 허가하고, 일본 측이 이들의 일본 입국을 허용(비자발급)하는 방안이 급진전되었다.

그러나 그해 말 일본 측이 소련 외무성에 200여 명의 사할린한인의 출국을 요청하는 구술서를 수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련 측은 ‘일본 정부와 교섭할 수 없다’면서 구술서의 수고를 거부했다. 이는 북한이 소련 측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결과였다. 결국 1975년 1월 일소 외상회담에서 그로미코 외상이 사할린한인 출국 불허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할린한인의 출국은 무산되었다.⁴⁵⁾

그후 소련 정부는 사할린한인에게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입국 소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할 경우 출국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할린한인의 출국에 앞서 일본으로부터 초청서와 같은 증명서를 제시하라는 것인데, 이는 까다로운 절차를 제시하여 사실상 사할린한인의 출국 의사를 억제하려는 수법인 셈이다.

그러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일본입국 소환증명서’에 필적할 방법으로 일본 내의 연고자를 찾아 초청장을 보내거나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한국인회’가 초청장을 발급하게 하고, 일본 정부가 ‘사증발급예정증명서’, 즉 비자발급예정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⁴⁶⁾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귀환 보장’을 조건으로 일본 입국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 무렵부터 ‘일본 정착 희망자’에 대해서 우선 ‘일본 입국을 허가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1976년 1월 이나바(稲葉修) 법무상은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사할린한인은 한국으로 귀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일본 측이 이들을 인수하여 인도적으로 귀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⁴⁷⁾

43) 위의 자료, 47~49쪽.

44) 위의 자료, 51쪽.

45) 위의 자료, 56~57쪽.

46) 위의 자료, 60쪽.

47) 日本參議院決算委員會(77차)會議錄(3号), 1976.1.22, 国会會議 録檢索システム([http:// kokkai.ndl.go.jp](http://kokkai.ndl.go.jp)).

하지만, 1976년 9월 소련의 '미고기 망명사건'을 계기로 소련과 일본 간 대화는 경색되면서 사할린한인 문제는 전혀 진전을 볼 수 없었다. 이후 1983년까지 소련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한하여 사할린한인에 대해 일본으로의 출국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사할린한인 문제의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다가 1983년 평소 박노학과 밀접하게 교류하던 공명당의 부대표인 쿠사가와 쇼조(草川昭三) 의원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사할린주 공산당 제1서기와 협의 끝에, '1년에 10명 내외의 일본 출국 및 가족 재회'에 합의하였다.⁴⁸⁾ 비록 그해 9월 'KAL기 격추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시 일본방문'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듬해인 1984년 9월 10명의 사할린한인이 일본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온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다. 이는 소련이 다수의 사할린한인에게 최초로 출국 허가를 해 준 것이며 이후 '일시 모국방문'과 '영주귀국'으로 발전하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일본에 초청할 사할린한인을 선정하고 한국의 가족들을 수배한 것이 박노학이고, 10명에 대한 일본인 초청자 겸 보증인은 바로 쿠사가와 의원이었다. 이후 '일시 일본방문 및 가족상봉'은 박노학과 '한국인회', 그리고 일본 시민단체의 노력과 봉사에 의해 정례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소 정부 간 협상도 급진전하였다.

1984년 일소 외상회담 등에서 일본 정부는 소련 측에 사할린한인 문제의 본격적인 해결을 제기하였고,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소련 측의 태도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1988년 일본 정부는 사할린한인의 일본 체류의 갱신, 즉 일본 영주를 허용하였고, 일본에서의 가족상봉을 지원하는 예산 5,800만 엔을 계상하여, 이후 한국으로의 모국방문과 영주귀국을 지원하는 예산의 물꼬를 마련하였다. 88서울올림픽 직후인 1989년부터 소련은 사할린한인의 한국 방문을 전제로 한 일본으로의 출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러수교를 계기로 사할린한인의 모국방문과 영주귀국 사업이 본격화하였다.

3) 한국과 소련(러시아)

1988년 9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련 당국은 사할린한인의 일시 또는 영주 목적의 출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자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과 내부 소수민족에 대한 유연화 정책 추진, 그리고 한소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듬해인 1989년 4월 베라노소프 사할린주 공산당서기가 한국과 사할린한인 문제를 직접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는데, 이때 '본인이 원한다면 귀국시키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⁴⁹⁾

1989년 4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사할린한인의 일시귀국, 영주귀국 사업에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였다.

이에, 1989년 7월 14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양국 적십자사 간에 '사할린거주한인 지원 공동사업 협정서'가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적십자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매년 사할린한인의 귀국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⁵⁰⁾

그리고 1989년 6월 전후 최초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의원단이 사할린을 현지 방문하고, 8

48) 産経新聞, 「凜として」取材班, 『凜として-日本人の生き方』, 193~194쪽.

49) 외무부 보도자료, 「사할린거주 무연고 동포1세 영주귀국」1992.6., 동북아1과/재외국민2과 작성, 『재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및 영주 귀국문제 검토 1991~92』, 77쪽, 외교사료관 소장.

50) 일본 정부는 1989년 최초로 5,800만 엔을 제공하고, 1990년 1억 엔, 1991년 9,400만 엔, 1992년 1억2,000만 엔을 제공했다. 동북아1과, 「사할린同胞 問題」, 1992.10., 동북아1과/재외국민2과 작성, 『재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및 영주 귀국문제 검토 1991~92』, 189쪽, 외교사료관 소장.

월에 한국 정부조사단이 처음으로 사할린에 파견됨으로써, 그동안 민간이 추진하던 일시귀국, 가족상봉, 영주귀국 문제를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소 간 수교를 전후하여 성사된 사할린한인의 모국방문, 유연고자 영주귀국, 무연고자 영주귀국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한소 국교정상화

- 1990년 9월 30일

○ 모국방문

- 1989~1992.9월 3,298명 방문⁵¹⁾

○ 유연고자 영주귀국

- 소련의 개혁·개방정책, 한소 수교에 따라 1989년 8월 정부조사단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소련 당국과 협의, 9월 소련이 사할린한인의 모국방문과 영주귀국을 허용

-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재정보증과 신병 인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주귀국을 허용하기로 결정

- 1989년부터 허가 개시, 1992년 9월까지 유연고자 89명 영주귀국⁵²⁾

○ 무연고자 모국방문

- 1988년 2회(216명), 1991년 2회(194명) 실시

- 단 이들의 영주귀국은 1992년까지 불허

- 1992년 2월 현재 1세 무연고자 약 150명이 영주귀국을 희망⁵³⁾

- 1992년 6월 65세 이상 무연고자의 영주귀국을 허용하기로 결정(광림교회 '사랑의 집' 수용 방식)⁵⁴⁾

- 1992년 9월 현재 76명 영주귀국⁵⁵⁾

○ 무국적자 및 북한적 사할린한인

- 1992년 무국적자 및 북한적 사할린한인에게도 모국방문 및 영주귀국을 허용하기로 결정⁵⁶⁾

51) 동북아1과, 「사할린同胞 問題」, 1992.10., 동북아1과/재외국민2과 작성, 『재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및 영주 귀국문제 검토 1991~92』, 188쪽, 외교사료관 소장.

52) 동북아1과, 「사할린同胞 問題」, 1992.10., 동북아1과/재외국민2과 작성, 『재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및 영주 귀국문제 검토 1991~92』, 188쪽, 외교사료관 소장.

53) 사할린고려인협회장 등 4인, 「대한민국 대통령께 올리는 글」, 동북아1과/재외국민2과 작성, 『재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및 영주 귀국문제 검토 1991~92』, 29쪽, 외교사료관 소장.

54) 외무부가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실장에게 보내는 공문, 「사할린 무연고동포1세 영주귀국 주선계획」, 1992.6.16, 동북아1과/재외국민2과 작성, 『재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및 영주 귀국문제 검토 1991~92』, 70쪽, 외교사료관 소장.

55) 동북아1과, 「사할린同胞 問題」, 1992.10., 동북아1과/재외국민2과 작성, 『재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및 영주 귀국문제 검토 1991~92』, 188쪽, 외교사료관 소장.

56) 구주국, 「'표도로프' 사할린주지사를 위한 오찬시 참고자료」, 1992.1.13, 동북아1과/재외국민2과 작성, 『재사할린 동포 실태조사 및 영주 귀국문제 검토 1991~92』, 16쪽, 외교사료관 소장.

6. 북한, 소련(러시아)

소련은 전후 사할린한인을 노동력 자원으로 인식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사할린한인의 한국 귀환은 이념과 체제선전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53년부터 소련은 사할린한인에게 무국적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지만, 이듬해부터 소련 국적 취득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북한 역시 사할린한인에게 북한 국적 취득을 유도하는 공작을 전개하였다.

사실 사할린한인의 모국방문과 영주귀국은 북한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사할린한인의 북한 왕래는 1957년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1~2회(부정기) 가량 북한 및 소련 국적 소지자를 대상으로 약 50~60명정도를 북한에 데려가 1~2개월(1회당) 정도 만경대 등 김일성 전적지를 답사하고 주요 산업시설을 견학시키며 북한의 발전상을 선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다.⁵⁷⁾

이런 가운데, 1950년대 중반 이후 소련과 중국 간 분쟁이 확대되자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이중외교를 구사하며 실리를 취하려고 했지만, 북한의 입장은 점차 소련에서 중국으로 기울었다. 1960년 중반 이후 중소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북한과 소련 간의 관계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북한은 1963~1964년에 걸쳐 소련지도부의 수정주의적 경향과 분열주의적 책동, 코민테른식의 강압적 해계모니 행사, 고압적 자세, 내정에 간섭하려는 대국주의적 태도,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함으로써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⁵⁸⁾

그러자 소련도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할린한인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소련은 사할린 각 지역에서 북한이 추진하던 조선인민학교에서의 한글교육을 금지시키고 김일성 초상화를 제거하도록 했다. 그리고 소련 당국은 사할린한인이 소속된 각 기관과 기업소를 방문하여 한 북한의 친중노선을 비방하는 한편, 사할린한인에 대한 북한의 선전과 사상학습 활동 등을 금지시켰다.⁵⁹⁾

북한은 나흐트카의 총영사관을 통해 사할린 각 지역을 순회하며 사할린한인 20~80명을 1개 조로 4개 반의 학습조를 구성하여 북한에 대한 선전활동과 북한 국적 취득을 종용하였다. 학습조 활동은 1965년에 최고조에 달했지만 점차 소련의 금지 조치와 북한체제의 허구성이 알려지면서 쇠퇴하였다. 이후 북한과 소련(러시아) 관계는 사할린에 파견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로 옮겨갔다. 당시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북한으로 귀환하지 않고 사할린에 정착하여 무국적자로 살거나 소련의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았다.⁶⁰⁾

그후 1970년대 중반 소련이 사할린한인 200여 명의 출국을 승인하는 문제가 대두되자, 북한이 소련 측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무산시켰다. 이 무렵 중국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논의하자 북한은 다시 소련과의 관계개선으로 중점을 두었다. 마침 북한은 제1차 6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서방의 기술과 자본 및 설비를 도입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나 1975년부터 외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했다.

마침 '미그기 망명사건'을 계기로 소련과 일본 간의 관계도 경색된 가운데, 1980년대 중반까지 사할린한인 문제는 소련과 북한의 관계개선 기조 속에서 아무런 진전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1985년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 선언 이후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사할린한인 문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소련은 한국과의 수교를 향해

57) 이연식·방일권·오일환 저, 앞의 책, 177쪽.

58)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년, 226~227쪽.

59) 이연식·방일권·오일환 저, 앞의 책, 174~176쪽.

60) 이에리아·이창호·방일권, 『2016 위탁연구,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통일연구원, 2017년.

움직였고 사할린한인의 귀환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떠 올랐다. 이제 북한은 사할린한인의 귀환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7. 나오면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인 박노학은 일본으로 귀환하여 1988년 사망할 때까지 일생동안 사할린한인의 귀환과 영주귀국을 위해 헌신했다. 그가 조직하고 이끈 ‘한국인회’는 사할린한인의 존재와 귀환 의지를 한국, 일본, 소련, 그리고 ICRC 등 국제사회에 알리는 초석을 놓았다. 이들의 노력과 활동은 일본인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로 확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국 정부와 국회, 정치인, 관료를 설득하고, 압박하여 외교협상을 이끌어 내고 때론 이들과 협력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인 시민단체의 참여와 활동은 각국 정부와 관료, 정치인을 압박하여 정부 간 협상과 외교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박노학과 ‘한국인회’의 노력과 활동이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와의 연대로 이어졌고, 시민단체의 활동과 압박은 각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와 시민단체는 사할린한인의 신원보증, 초청장 발급, 일시 방문, 가족상봉, 모국방문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호 협조하고 지원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정부 간 협조관계는 결국 정부 간 협상에 의한 정부 주도의 ‘영주귀국 사업’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이상과 같이, 박노학 개인에서 출발한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는 인도주의 문제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정부 간 관계, 정부 간 외교협상, 민관 협조, 정부 주도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로써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ICRC,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연계 구조와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및 국제적 각 행위자(Actor)와 시민사회(Civil Society), 그리고 국가(State) 간 관계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로써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토론문

<사할린한인 귀환을 둘러싼 시민운동과 정부 간 협상>에 대한 토론문

임성숙(충남대학교)

- 한국사회에서 사할린 한인의 귀환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
 - 정형화된 거대 서사
 - 민족집단의 비극으로서 재생산되어 옴.
 - 정계, 시민사회 속의 개인들 간의 접촉, 협상, 교섭, 우회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귀환='냉전의 종말'로 환원
- 발표자가 장기간에 걸쳐 실시해 온 자료조사와 분석의 중요성
 - 실증 연구.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사실관계 규명의 의미
 - 사할린 한인 귀환(운동) 과정을 복합적, 다원적으로 접근
- 풀뿌리, 시민사회, 정계, 정부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상호 협력 관계
 - 시대에 따른 관계의 변화
 - '제국해체' 후 냉전시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 발표자가 직접 발굴한 자료와 논문에서 참조한 최근 외교사료관에서 공개된 문서
 - 자료의 성격
 - 새로 공개된 자료의 중요성과 한계
 - 향후 어떠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 새로운 문제제기와 과제
- 그 외 논의
 - 제국 일본영토에 남겨진 일본인 '히키아게/引揚者(귀국자)'의 움직임과 연관되는 점
'중국 잔류고아,' '부인'들에 대한 '망각'
1960년대 일본인 귀국자들이 일본 내에서 전개한 권리운동 등
 - 시민사회와 일본 정계 행위자들과의 관계: 정치적, 사회적 거리와 지위
'협력'의 전제조건
여러 자원을 가진 정계 행위자와 사할린 한인의 관계
 - 사할린 한인에 대한 '공감': 부분적 공감?
'인도적'인 문제로 취급한다는 것.
'가족의 이산'을 인도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메카니즘 (전략?)
전략적 인도주의? 사할린 한인의 '정의'문제와의 괴리

2018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재외동포사' 서술 분석

-만주, 사할린,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재욱(진선여자중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재외동포사 관련 단원의 구성과 특징
 - III. 고등학교 한국사의 '재외동포사' 서술체제 및 내용 분석
 - IV.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 역사 속에서 한인 디아스포라¹⁾의 시작은 19세기 중엽, 조선후기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이주 역사는 짧지만 여러 국가에서 복잡하게 변화하는 시대흐름 속에 적응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던 나름의 과정이 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²⁾사에 대해서는 역사 이외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재외동포사는 대부분 인류학, 사회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었지만, 역사학계에서도 재외동포의 이주사와 더불어 민족운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역사교육에서 교과서 속의 재외동포와 관련된 이주사와 민족운동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³⁾ 연구 성과가 많지는 않다. 한국사의 큰 흐름 속에 재외동

- 1)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본래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후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집단 또는 그 거주지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고등학교 『세계 한인 정치·경제사』, 전라북도교육청, 2019.) 그리고 우리말로로는 민족분산(民族分散) 또는 민족이산(民族離散)으로 번역되는데, 단지 같은 민족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 뿐만 아니라 분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 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2004. 8쪽 참고)
- 2)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용어 사용에서 저마다 차이점을 보인다. 재외동포란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해외동포, 해외교포, 해외한민족, 재외한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재외동포이다. 하지만 ‘동포’라는 용어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재외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에서도 재외동포와 재외한인 두 용어를 혼용하고자 한다.(윤인진, 앞의 책, 8쪽 참고)
- 3) 조승희, 「일제 강점기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분석과 교육방안」,

포들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세기 중엽부터 이들이 이주한 후 어렵게 정착한 제 2의 터전에서 재외동포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역사가 한국사 교과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깝지만, 조금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해본다. 이런 측면에서 현행 교과서 내의 재외동포사 내용의 분석하는 작업이 다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은 현재의 지리적 개념으로 보았을 때 중국 동북 지방,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과 중앙아시아, 미주(미국, 멕시코), 일본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 가운데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당시 우리나라와 가까웠던 중국의 만주와 러시아의 연해주지역이다. 이들은 초기에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하여 독자적인 한인 사회를 형성했다면, 1910년대 이후부터는 이주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재외동포들은 독립운동과 생활적 이주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었다.⁴⁾

재외동포의 이주 시기를 이주 국가, 시기, 이주동기, 이주한 사람들의 성격 등에 따라 재외동포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⁵⁾ 이 글에서는 재외동포사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사 교과서 내 서술된 재외동포사 관련 역사적인 사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사로 구분하고 있는 내용들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되는지, 서술체계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외동포사에서 분류하는 이주 약사를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과서 내용은 아래 <표 1>로 정리해볼 수 있다.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윤상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사 서술 현황과 과제」, 『史叢』 79, 2013.

김상윤,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재미 한인들의 독립운동 서술과 문제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최효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재외동포’ 서술의 현황과 과제-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최도연, 「해방 이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연해주 한인사회 서술의 변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4) 김주용, 「한인의 서간도, 북간도 이주와 정착: 1910년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 54호, 2021.

5) 윤인진, 앞의 책, 8~9쪽의 내용과 고등학교 『세계 한인 정치·경제사』, 전라북도교육청, 20~21쪽을 요약하여 간단히 표로 만들었다.

구분	이민시기	특징	내용
1기	1860년대 ~1910년	기근,빈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60년대 : 대규모 흉년으로 중국의 만주,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 • 1903년 대한제국 시기 : 미국 하와이 이민 • 1905년 : 멕시코 에네켄 농장 이주
2기	1910년 ~1945년	일제 강점기 수탈, 강제이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강점기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 • 정치적 난민, 독립운동가들의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이주 • 일본에 의한 강제 이주(징용 및 징병 등) • 1937년 연해주 지역 한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3기	1945년 ~1962년	광복, 6.25전쟁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전쟁 전후 국제결혼, 전쟁고아, 입양 등 특수이주
4기	1962년 ~현재	「해외이주법」제정 후 다양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독 광부, 간호사, 남미 농업 이민 등 • 소련 해체 후 연해주로의 고려인 재이주 및 국내 귀환 • 해외 유학 및 취업 등

<표 1> 교과서에서 재외동포사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⁶⁾

시기 구분	내용
1860년대~1910년	① 해외이주 : 만주, 연해주, 미주(하와이, 멕시코), 일본
1910년 ~1945년	②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 한인촌, 독립운동단체, 민족교육
	③ 3.1운동 이후 - 국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 재외 동포들의 3.1 운동 참여
	⑤ 해외 이주 동포들의 시련 : 간도참변, 관동 대학살,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⑥ 전시 동원에 따른 인적 수탈 : 강제이주(징용, 징병)

이주의 역사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우리에게 익숙한 재외동포들이 사는 지역은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의 연해주, 중앙아시아, 미주, 일본 등이다. 이 지역 가운데서도 만주와 사할린,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서술된 한국사 교과서의 재외동포사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과서 단원에 맞추어 주제별로 세분하여 각 교과서의 서술 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 내용들이 교과서 내에서 서술된 구성 체계, 즉 지도와 읽기자료 등의 각종 학습 자료들을 교과서 서술에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2018 개정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토대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의 재외동포에 관한 서술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18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근거로 『한국사』의 목차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한국사』의 재외동포에 대한 서술 내용과 구성 및 그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II. 재외동포사 관련 단원의 구성과 특징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정부 주도 아래 역사,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 체제로 발간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⁷⁾ 결국 국정 교과서는 보급되지 못하고 역사과만 교육과정이 재편되었다. 2018년 7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정이 수정되어 다시 발표되었다. 이에 2018년 7월에 개정된 2018 역사과 교육과정⁸⁾ 아래 새로운 검정 교과서가 개발되었고 2020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이 글에서는 2018 개정 교육과정이라 표현하기로 한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내용과 방법, 그리고 달성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를 체계적으로 편성·조직한 교육계획이다.⁹⁾ 교과서의 서술 체제와 내용은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고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 집필기준안 등 여러 규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과목별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와 단원별 학습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에 관한 진술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핵심은 학습내용이다.¹⁰⁾

6) 윤인진, 앞의 책, 2004. 8~14쪽, 고등학교 『세계 한인 정치·경제사』, 전라북도교육청, 20~21쪽. 2019.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교과서 내 단원 및 주제에 맞게 시기별 재외동포사 내용을 표로 간단히 만든 것이다.

7) 김한중, 「교육과정 구성 논리로 본 2015 개정역사교육과정의 쟁점」, 『역사교육연구』 23, 2015., 방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힘을 가진 그들’의 역사를 반복하다」, 『역사비평』 113, 2015., 김성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역사과 핵심역량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역사와 교육』 22,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 연구소, 2016.

8)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8-162호」, 2018.

9) 김한중, 「중등 역사교과서 개편의 과정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4, 2011, 7쪽.

10) 방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힘을 가진 그들’의 역사를 반복하다」, 『역사비평』 113, 2015.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한국사 내용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고등학교 한국사 내용 체계(2018)

대주제	소주제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 ○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 ○ 고려의 통치 체제와 국제 질서의 변동 ○ 고려의 사회와 사상 ○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 ○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 화폐 경제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 ○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 ○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 ○ 개항 이후 경제적 변화 ○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 ○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 광복을 위한 노력
대한민국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 경제 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 ○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2018 역사 개정 교육과정은 다시 검정 체제로 돌아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차별성을 두기 위해 중학교는 전근대 시기 위주로,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 시기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제하였다. 이에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체계를 전근대사는 1개, 근현대사는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여 총 4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졌다.

<표 3>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2018)

(2)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
 흥선 대원군 집권기부터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된 시기까지를 다룬다. (중략)…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략과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나타난 변화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10한사02-01] 흥선 대원군이 추진한 정책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하고,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파악한다.

:

[10한사02-06] 개항 이후 근대 문물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를 살펴본다.

(가) 학습 요소

소주제	학습 요소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근대 문물의 수용, 근대 의식의 확대, 해외 이주

다음으로 2018 개정 교육과정 상에서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¹¹⁾ <표 3>를 보면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 단원에서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학습요소로 ‘해외 이주’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 요소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성취 기준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개항 이후 근대 문물 수용과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에 치중하다보니 성취기준에서는 자연스럽게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해외 이주’ 사실 보다 근대 문물 수용에 관한 사회·

11) 2018개정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 내 재외동포사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국사(7차)	(5)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 근·현대의 사회 (㉡) 근대 사회로의 발전 ② 한민족의 국외 이주 과정과 상황을 파악하고, 해외에서의 활동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 (7차)	(2) 근대 사회의 전개 (㉠)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 생활 모습의 변화 ② 19세기 후반 이후 간도와 연해주로 이주하는 동포가 늘어났고, 20세기 초에는 미주 지역으로의 이민도 많았음을 파악한다. (㉠) 3.1 운동과 대한 민국 임시 정부 (㉡) 3.1 운동 이전의 민족 운동 ② 1910년대에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국외 이주 동포 사회를 바탕으로 독립 운동 기지 건설과 독립군의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항일 의병 투쟁과 애국 계몽 운동을 계승한 민족 운동임을 설명할 수 있다. (㉠) 3.1 운동의 전개 ③ 국외 동포들이 거주하는 간도, 연해주, 미주 지역으로 3.1 운동이 확산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 (㉡) 국외 이주 동포의 활동 ① 국권 강탈 이후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경제적 수탈로 인하여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는 동포들이 계속 늘어났음을 이해한다. ② 만주에서 무장 독립 전쟁을 뒷받침한 이주 동포들은 일본군의 만행인 간도 참변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연해주에서 한인 집단촌을 형성하고 민족 독립 운동의 기지를 건설한 동포들은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에 기여하였으나, 1930년대 후반에 소련 당국에 의해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한 수난을 겪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④ 미주 이주 동포들은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대한인 국민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고 독립 운동 자금을 모금하여 민족 독립 운동에 공헌하였음을 이해한다.
2007, 2009, 2011 교육과정	(5)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④ 나라 안팎에서 전개된 다양한 민족 운동의 사례를 조사한다.

문화적 내용을 더 많이 서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¹²⁾

<표 4>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 관련 평가기준(2018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준거 성취기준	평가기준	
[10한사02-06] 개항 이후 근대 문물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 문화적 변화를 살펴본다.	[10한사02-06-00] 개항 이후 근대 문물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해한다.	상	개항 이후 근대 문물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의 특징을 당시의 신문이나 생활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중	개항 이후 근대 문물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를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	개항 이후 근대 문물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의 예를 들 수 있다

<표 4>의 평가 기준에서도 해외 이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나와 있지 않고, 근대 문물 수용으로 인한 영향을 좀 더 비중 있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III.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2018 개정 교육과정)

대단원 : (3)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1910년 국권 피탈 이후부터 1945년 8·15 광복 직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중략) 3·1 운동과 다양한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중략) 전체주의 국가의 침략 전쟁 속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의 흐름을 설명한다. 전시 동원 체제가 초래한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항일 투쟁 과정에서 건국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음을 파악한다.

[10한사03-02] 3·1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의미를 파악한다.

[10한사03-03] 3·1 운동 이후 나타난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10한사03-05]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가) 학습 요소

소주제	학습 요소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비밀 결사 운동, 독립 운동 기지 건설 ,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일제의 침략 전쟁, 2차 세계 대전, 민족 말살 통치, 전시 수탈과 일상적 궁핍, 일본군 ‘위안부’

대단원 III에서는 II처럼 직접적인 학습요소 언급은 없지만 재외동포사로 볼 수 있는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자면 학습요소로 제시된 ‘독립 운동 기지 건설’ 또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성취기준 ‘[10한사03-03]에서 3·1 운동 이후 나타난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에서도 ‘국내외 민족 운동’이라는 단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외동포와 관련된 역사적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2) 최도연, 앞의 글, 108쪽.

<표 6>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관련 평가기준(2018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준거 성취기준	평가기준	
[10한사03-02] 3·1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의미를 파악한다.	[1 0 한 사 03-02-00] 3·1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의미를 파악한다.	상	3·1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성격 및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고, 자료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의미를 발표할 수 있다.
		중	3·1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하	3·1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알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말할 수 있다.
[10한사03-03] 3·1 운동이후 나타난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1 0 한 사 03-03-00] 3·1운동 이후 나타난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상	3·1 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나타난 민족 운동의 흐름을 사건과 인물의 활동을 제시하여 설명할 수 있다.
		중	3·1 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나타난 민족 운동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하	3·1 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나타난 민족 운동의 예를 들 수 있다.
[10한사03-05]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1 0 한 사 03-05-00]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상	일제가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을 변화시킨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고, 자료를 활용하여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설명할 수 있다.
		중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시 동원 체제로 달라진 민중의 삶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하	일제의 침략 전쟁 이후 식민지 지배 방식이 변화했음을 알고, 전시 동원 체제로 민중의 삶이 달라졌음을 말할 수 있다.

대단원 Ⅲ의 경우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는 재외동포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내용적 추론을 통해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이라는 평가기준 내용으로 확인 가능하다.

재외동포사 관련 역사는 한시적, 개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에서 단독으로 제시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는 교과서 서술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장에서 분석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사와 관련된 서술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그 내용과 서술 체제 및 구성요소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Ⅲ. 고등학교 한국사의 ‘재외동포사’ 서술체제 및 내용 분석

현재 사용되는 역사과의 교과서 목차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대단원명은 그대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大綱化 정책에 따라 중단원과 소단원, 그리고 소주제의 경우는 집필진의 자율성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습요소와 성취기준에 맞추어 집필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2018 개정 교육과정기에 발행되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9종¹³⁾을 대상으로 하여 만주,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사의 서술 방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교과서 목차와 분량

2018 개정 교육과정에서 재외동포사와 관련한 내용은 대단원 Ⅱ의 중단원 6의 학습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외이주’이다. 하지만 대단원 Ⅱ 이외에도 해외이주 후 이들이 정착한 뒤 만들어진 정착사 또한 재외동포사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국외에서 동포들이 참여한 민족독립운동 또한 재외동포사의 연장선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도 함께 검토할 내용으로 보고자 한다. 2018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각 출판사 교과서마다 구성한 목차 가운데 재외동포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대단원은 Ⅱ, Ⅲ이다. 직접적으로 해외이주라고 명시된 것은 대단원 Ⅱ. 근대 국가 수립 운동에서 중단원 6.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부분이다. 그 외 Ⅲ단원은 재외동포라고 직접적인 주제로 드러나진 않고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이라는 내용으로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목차를 정리하면 아래 <표 7>, <표 8>과 같다. 단원 나열 순서는 중단원-소단원-소주제 순서대로 기입하였다.

<표 7> Ⅱ.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의 재외동포사 관련 목차

비상교육	미래엔
6.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1) 근대 문물의 유입으로 생활양식이 변하다 : 국외로의 이주 증가(본문)	05. 개항 이후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 1)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 : 더 나은 삶을 찾아 해외로 떠나다(본문)
동아출판	천재교육
6. 개항 이후 사회·문화의 변화 02. 근대 문물의 수용과 생활의 변화 : [역사 특집] 해외 이주(특집)	6.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03.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 : <특집> [해외로 떠난 우리 민족]
금성출판사	지학사

13) 2018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 도면희 외 8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20.
- 한철호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20.
- 노대환 외 9인,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2020.
- 최병택 외 10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20.
- 최준채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2020.
- 송호정 외 9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20.
- 신주백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씨마스, 2020.
- 박중현 외 9인, 고등학교 『한국사』, 해냄에듀, 2020.
- 이익주 외 6인,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2020.

6. 개항 이후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 주제 37. 근대 의식의 확산과 생활의 변화 : 해외 이주 동포들의 생활 + [탐구 교실](본문+탐구)	6.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03. 해외 이주 : 하와이 이주가 시작되다(본문) : 멕시코 이주가 이어지다 :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다
씨마스	해남에듀
6. 개항 이후 사회·문화의 변화 01. 근대 교육과 근대 의식의 확대 :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국외로 떠나다(본문)	역사 톺아보기 :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특집) 리베르 스쿨 06.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 해외 이주가 늘어나다(본문)

9종의 한국사는 교육과정의 학습요소에서 제시된 소주제에 따라 중단원 6. 개항 이후의 사회·문화적 변화에서 ‘해외이주’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해외이주’가 학습요소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만큼 교과서 목차에서도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구성은 교과서마다 차이를 보인다. 우선 목차만으로 분석하자면 동아출판, 천재교육, 해남에듀의 경우 해외이주 주제를 중단원 마무리로 편성, 특집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금성출판사의 경우 본문과 연결된 탐구활동을 두어 각 지역별 이주 관련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본문으로 구성 시 지역별로 이주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나열식으로 제시되는 것보다 읽기자료 식으로 구성했을 때 학습자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는 집필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표 8>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와 재외동포사 관련 목차

비상교육	미래엔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01.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다 : 독립운동기지건설 02. 3·1 운동을 전개하다 : 만세 시위의 발전과 일제의 탄압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01. 항일 비밀 결사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02. 3·1 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 : 시위가 농촌으로 확산되다 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01. 무장 독립 전쟁 : 독립군의 시련,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01. 무장 독립 투쟁을 전개하다 : 독립군의 시련	4.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 01. 사회 모습의 변화: [이야기 더하기] 국외 이주 동포의 고난
5.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02. 일제가 침략 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다	5.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02.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 : 전쟁 동원 체제 속에서 인력과 물자를 수탈당하다
6. 광복을 위한 노력 : <지역답사>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의 삶	
동아출판	천재교육
2.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01. 3·1 운동 이전의 민족 운동 : 만주 지역에서 독립을 준비하다 : 연해주와 미주 지역에서 독립을 준비하다 : <역사 깊이 보기> 신민화와 신흥 무관 학교 02. 3·1 운동 : 해외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나다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01.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다. 02. 3·1 운동의 전개와 영향 : 3·1운동이 전개되다-국외로 확산 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p>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p> <p>01. 무장 투쟁과 의열 투쟁 : 만주의 독립군이 3부를 편성하다</p> <p>5.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04. 징병과 징용 : 한국인이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이 되다 : 한국인을 끌고 가 강제 노동을 시키다 : <역사 특집>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p>	<p>01. 무장 투쟁과 의열 투쟁 : 독립군의 시련,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p> <p>5.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02. 전시 동원 체제와 민족 말살 통치 : 인적 자원을 수탈하다 : <역사 다큐> 끌려간 사람들</p>
금성출판사	지학사
<p>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p> <p>주제41. 191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 : 국외에서 진행된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p> <p>주제42. 독립을 향한 외침 3·1운동 : 3·1운동의 전개</p> <p>3. 민족 운동의 성장</p> <p>주제44.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 : 독립군의 시련,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p> <p>5.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p> <p>주제54. 해결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의 상처 : 만주,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일본, 미주 + 본문(고국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p>	<p>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p> <p>01.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다 : 연해주에서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하다 : 가난과 고생길, 그러나 희망을 꿈꾸던 이주민의 삶</p> <p>02. 3·1 운동의 전개 : 일제의 탄압에도 각지로 만세 시위가 퍼져 나간다</p> <p>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01.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 : 독립군이 시련을 겪다</p> <p>5.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03. 병참 기지화 정책 :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강제로 동원하다</p> <p>04. 해외 이주 동포들의 활동과 수난 : 만주에서 독립 전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다 : 한인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다 : 일본에서 차별당하고 강제 징용으로 고통받다</p>
씨마스	해냄에듀
<p>1. 식민 통치의 시작과 민족 운동의 전개</p> <p>03. 191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 : 해외에서 항일 운동의 기반을 만들어 가다</p> <p>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p> <p>02. 3·1운동의 전개 : 국외 이주 동포도 독립 만세를 외치다</p> <p>3. 식민 통치의 변화와 민족 운동의 성장</p> <p>04. 1920년대 국외 민족 운동 :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독립군의 시련을 겪다</p> <p>5.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03. 전시 동원 체제하의 민중의 삶 :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강제 동원하다</p>	<p>주제 02. 비밀 결사를 만들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다 :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p> <p>주제 04. 3·1운동, 대한 독립을 외치다 : 평화시위는 왜 무력투쟁으로 바뀌었을까?</p> <p>주제 06. 무장 투쟁으로 일제에 맞서다 : 독립군은 어떤 시련을 겪었을까?</p> <p>주제 10. 농민과 노동자,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 : 해외로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생각 토크> 한국 '디아스포라'의 역사</p> <p>주제 14. 전시 수탈로 궁핍이 일상화되다 : 강제 동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p>
리베르스쿨	
<p>2.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p> <p>01. 191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 :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다</p> <p>02. 3·1운동의 전개 : 3·1운동이 국내외로 확산되다</p> <p>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p> <p>01. 무장 투쟁의 전개 : 독립군이 시련을 겪다</p> <p>03. 해외 한인 사회의 형성과 민족 운동 : 만주와 연해주에 한인 사회가 형성되다</p> <p>5.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p> <p>03. 인적, 물적 수탈의 강화 : 전시 동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인적, 물적 수탈을 강화하다</p>	

다음은 Ⅱ단원의 해외이주가 이루어진 후 일제강점기 즉 1910년대부터의 재외동포사 내용이 담겨 있는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에 목차를 살펴보겠다. 이 단원에서는 국외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생활을 민족운동이라는 주제 아래 함께 서술되어 있다.

다만 Ⅱ단원과 차이점은 Ⅲ단원 또한 교육과정에 따라 전체적인 목차 구성은 비슷하지만 재외동포사와 관련한 내용은 교과서마다 배치하는 단원이 저마다 다르다. 이는 Ⅱ단원의 경우 중단원 6에서 학습요소로 분명하게 해외이주가 제시되어 있는 반면 Ⅲ단원의 경우 재외동포사로 볼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이 민족운동과 재외동포들의 정착 후의 역사적 상황들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서술되다 보니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반면 지학사는 8종의 교과서와는 달리 소단원으로 해외이주를 설정하여 각 지역별로 소주제를 나누고 본문을 서술한 점이 특징이다. 소단원으로 편성할 경우 소단원 내 하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량부분에 압박이 덜하여 자세한 내용을 모두 교과서 페이지에 담을 수 있어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학사는 대단원 Ⅱ, Ⅲ에서 재외동포사 관련 주제들은 모두 소단원으로 편제하였고 학습목표와 도입글, 도입질문, 사진자료까지 제시하여 8종의 교과서와 확연히 구분된다.

<그림 1> 지학사 Ⅱ,Ⅲ단원 소단원 편제

<h1 style="font-size: 2em; color: orange;">03</h1> <h2 style="font-size: 1.2em; color: green;">해외 이주</h2> <p style="font-size: 0.8em; color: red;">학습 목표</p> <p style="font-size: 0.7em; color: gray;">해외 이주민이 발생한 이유 및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p>	<h1 style="font-size: 2em; color: blue;">04</h1> <h2 style="font-size: 1.2em; color: blue;">해외 이주 동포들의 활동과 수난</h2> <p style="font-size: 0.8em; color: red;">학습 목표</p> <p style="font-size: 0.7em; color: gray;">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의 삶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p>
---	--

내용 양에서 저마다의 차이가 있을 뿐 교육과정이라는 법적 틀 안에서 9종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공통된 서술체제를 따른다. 교과서에 완전히 재외동포에 관한 주제로, 서술한 분량을 해외이주와 국외동포의 시련이라는 주제로 한정하여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9>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재외동포사 관련 서술 분량¹⁴⁾

출판사	전체분량	근현대사분량	대단원 Ⅱ~Ⅲ에서 재외동포사 단독 분량 (해외이주, 국외동포 시련 중심)
비상	325쪽	86~311쪽	1쪽(본문)+ 1쪽(특집)
미래엔	326쪽	82~309쪽	1쪽(본문)+1쪽(이야기 더하기)
동아출판	326쪽	76~305쪽	2쪽(특집)
천재교육	335쪽	92~317쪽	1쪽(특집)+1쪽(특집)
금성출판사	327쪽	88~313쪽	1쪽(탐구)+2쪽(본문, 자료)
지학사	327쪽	90~307쪽	2쪽(본문)+1쪽(특집)
씨마스	335쪽	92~325쪽	1쪽(특집)
해냄에듀	335쪽	86~317쪽	1쪽(특집)+1쪽(본문, 자료)
리베르스쿨	324쪽	84~307쪽	2쪽(본문)

위의 표는 재외동포라는 주제를 서술체제 상 직접적으로 제시한 내용만을 서술한 교과서 쪽 수만을 분량으로 정리한 것이다. 교육과정의 학습요소에 해외이주가 제시되어 있어 이에 맞춰

14) Ⅲ단원은 한인이주사 내용들이 중단원-소단원별로 분산되어 서술되어 있기에 분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인이주사 내용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면수로만 분량을 측정하였다.

대단원 Ⅱ, 중단원 6에 해외 이주에서 1쪽을, 대단원 Ⅲ의 경우 대단원 Ⅱ의 내용과 이어지면서 일제 강점기 재외동포들이 겪었던 시련을 다루는 내용 1쪽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중단원과 소단원, 기타 읽기자료 등으로 제시된 자료들을 보았을 때 교과서 상에서 재외동포사에 대한 분량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독립운동 부분에서도 재외동포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소주제 중간중간 관련 내용들을 반복해서 서술되기도 한다. 다만 이런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 내용이 분산되어 있어 각 지역별로 시기에 따른 재외동포사 흐름의 연결이 어색한 점이 아쉽다.

2. 서술내용 분석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인 한국사 교과서의 재외동포사 관련 서술은 대단원 Ⅱ와 대단원 Ⅲ에서 집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교과서 내의 서술 큰 흐름은 2가지인데 ‘이주’와 ‘민족 독립 운동’이라는 주제이다. 즉 근대국가수립 과정에서의 국외로 이주한 배경과 당시의 상황이며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시기 국외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함께 서술되는 재외동포들의 내용이다.

이 글에서는 시기순서를 따르되 교과서 서술 순서에 따라 1910년 이전, 1910년대~1945년 광복 이전 시기로 구분하고 재외동포사 관련 주제별로 교과서 내의 서술 내용, 구성방식, 구성요소들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으로는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의 중국,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중앙아시아 지역 중심 한정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1) 1910년 이전 재외동포사 관련 서술내용 분석

대단원 Ⅱ 대단원 1910년 이전에 대대적으로 발생했던 해외이주의 내용을 큰 흐름 속에서 이주 지역, 이주 시기, 이주 동기를 포함하여 당시 이주한 후의 이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9종 교과서 모두 분량 및 구성요소 별로 작은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서술되어 있다.

<표 10> 1910년 이전 지역별 해외 이주에 대한 서술 유무

출판사	교과서 내 서술유무	서술 구성 방식	중국 ¹⁵⁾			러시아
			만주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
비상	○	본문	○			○
미래엔	○	본문	○	○(간도)		○
동아출판	○	본문 X, 중단원 특집		○(간도)		○
천재교육	○	본문 X, 중단원 특집	○	○(간도)		○
금성출판사	○	본문, 탐구활동	○	○	○	○
지학사	○	소단원 편성(본문)	○			○
씨마스	○	본문, 특집 및 활동	○	○(간도)		○
해냄에듀	○	본문 X, 중단원 특집		○(간도)		○
리베르스쿨	○	본문	○	○	○	○

15) 교과서 별로 만주라고 통칭하기도 하고 중국 안에서 만주, 서간도, 북간도라고 지역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교과서가 있어 이 글의 표에서도 따로 구분해하였다.

<표 11> 1910년 이전 해외 이주 서술 내용 분석(2018 개정 교육과정)

출판사	이주 지역 ¹⁶⁾	이주 시기	이주 동기 ¹⁷⁾	본문 서술 내용
비상	중국	1860년대	기근, 빈곤, 수탈, 독립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 제국 정부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관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 정부는 1902년 이범윤을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함. • 국권침탈 후 항일 운동가 망명, 독립운동 기지 건설.
	러시아	1860년대	지리적 이점, 독립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초반에는 연해주 지역의 관리가 한국인 이주민에게 우호적. 점차 러시아인과 한국인 사이에 경작할 토지를 놓고 경쟁. • 1910년 전후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애국지사들이 다수 망명하면서 연해주에는 한인 집단촌이 형성.
미래엔	중국	19세기 중반	지리적 근접, 독립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무지 개간하며 생활 근거지 마련 • 일제 침략 본격화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이주 • 이주민과 연대하여 자치적인 한인 사회 형성, 독립운동 기지 건설
	러시아			
동아출판	중국	19세기 후반	자연재해, 수탈, 독립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국지사들이 국권 회복을 목표로 이주
	러시아	19세기 후반	기근, 지방관수탈, 독립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면함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정착 • 러시아도 조선인의 이주를 장려
천재교육	중국	1860년대	경제적 이유, 독립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들은 농업, 수렵, 어업, 상업 등에 종사 • 자치 기구 조직, 한인 사회를 형성,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됨
	러시아	1860년대	독립운동, 러시아 정부의 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정부의 조선인의 이주를 장려 • 조선인들은 농업, 수렵, 어업, 상업 등에 종사 • 자치 기구 조직, 한인 사회를 형성,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됨
금성출판사	중국	1880년대	경제적 빈곤, 사회적 혼란, 독립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만강 건너편의 북간도 일대에 이주하여 한인촌 세움. 1890년대에는 하얼빈 일대까지 이주. • 북간도 연변 지역 용정(龍井) • 서간도 일대에도 집안현, 통화현, 유하현, 장백현 등에 한인 사회가 형성
	러시아	19세기 후반	지리적 근접성, 국권회복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한인들이 늘어나자, 시 당국에서 ‘한인촌’을 만들. • 1911년 러시아는 페스트 창궐을 이유로 한인촌을 강제 철거하고, 강제 이주. 새로운 한인 마을로 ‘신한촌’ 형성.
지학사	중국		경제적 어려움, 사회 불안, 지리적 근접, 역사적 친근, 독립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을 피할 수 있는 장소 • 1907년부터 1910년까지 매년 약 1만 명이 만주로 이주 • 국외에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 공화제 정치 이념에 바탕을 둔 신국가 건설 운동.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
	러시아			

씨마스	중국	1870년대 이후	국내 정치의 혼란, 부정부패, 자연재해, 항일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무지 개간, 벼농사 보급, 민족 운동 지원 및 가담. • 중국인과의 마찰을 줄이고자 복식을 바꾸기도 함
	러시아	186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조선인 이주 적극 허용 •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한 사람들은 신한촌 비롯, 집단 거주지 형성. • 국권피탈 후 많은 민족 운동가 망명. 권업회 등 민족 운동단체 조직. 러시아의 한국인 무장활동 금지
해남예뉘	중국	한말	경제적 어려움, 독립운동, 지리적 근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터전을 일군. •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7년 3만 명에서 1911년 6만 명으로 증가
리베르스쿨	중국	1870년대	기근 항일의병 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이 특히 많았던 곳은 두만강 너머의 북간도. 19세기 말부터 압록강 너머의 서간도로도 이주. 간도 이북의 만주 지역으로 이주
	러시아		항일의병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가 연해주 개척 목적으로 한인 이주 허가 • 20세기 초에는 연해주로의 이주가 급증. 신한촌을 세우고, 자치 기구와 학교를 설립. • <신한촌>1860년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이주한 조선인이 정착. 1920년 일본군의 습격과 1937년 스탈린의 고려인 이주 정책으로 해체

1910년 이전에 이루어진 해외이주에 대한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주 시기 및 배경이고 두 번째, 이주 후 생활상의 흐름이다. 이주 배경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생활의 어려움에 따른 경제적 이유이고, 두 번째는 독립운동을 위한 정치적 이유, 세 번째는 지리적 근접성이다. 이주 배경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교과서 별로 한정된 면수 안에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19세기 말 혼란스러웠던 조선의 당시 상황 설명을 통해 이주 후에는 각 지역 별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생활적 어려움, 그리고 이를 이겨내면서 한인사회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독립운동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교과서별로 서술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1910년 이전 이들이 정착한 후 1910년대 이주민들이 겪었던 시련도 함께 연결하여 서술하는 교과서가 있는데 씨마스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해외이주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 다른 교과서와는 다르게 ‘조상의 제사를 중요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나라를 떠나 국외로 이주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문장이 독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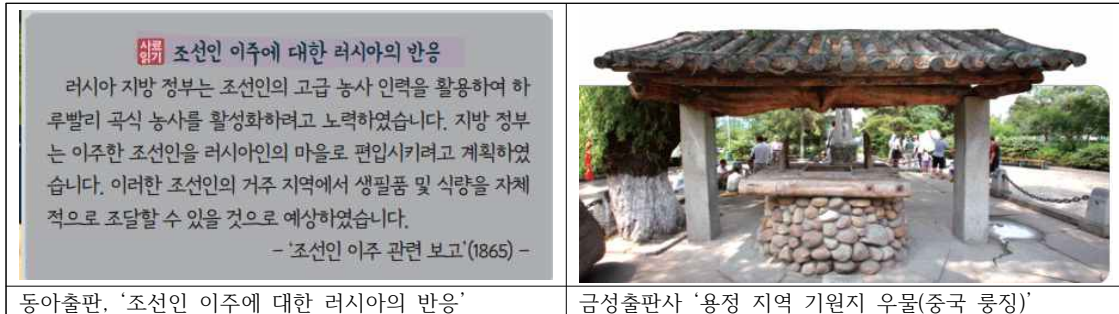
이 시기의 해외이주는 중국, 러시아를 비롯하여 미주(하와이, 멕시코), 일본 등으로 이주한 내용들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어떤 특정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기보다 지역별 재외동포사의 흐름을 소개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16) 이주지역은 교과서마다 만주지역, 간도지역,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 등 지명이 저마다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다. 이 표에서는 현재의 지리적 개념으로 크게 구분하여 중국과 러시아 국가명으로 표기하였다.

17) 9종 교과서 모두 앞 중단위의 항일의병투쟁에서 의병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아, 천재교육, 씨마스. 리베르스쿨의 4종 교과서는 러시아 정부의 한인 정책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한 예로 동아출판의 경우 본문 외 구성 요소에서 조선인 이주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을 사료로 제시한 점이 다른 교과서와의 차이점이다. 금성출판사 또한 북간도의 용정촌과 연해주 신한촌이 만들어지게 된 기원 설명을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한 점도 타 교과서와 서술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해냄에듀의 경우 러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의 수를 시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



<표 12> 1910년 이전 재외동포사 본문 외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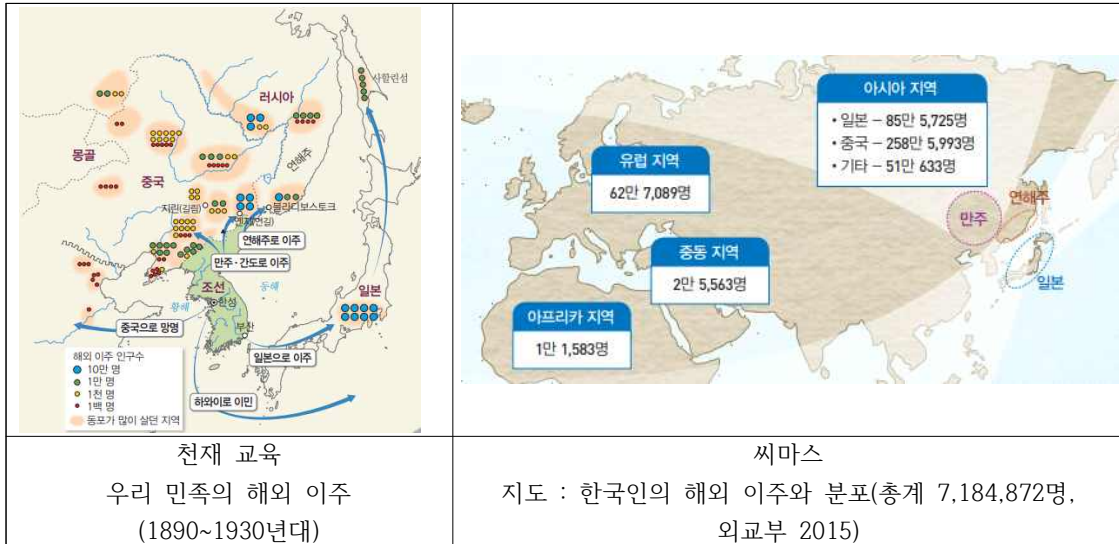
출판사	본문 외 구성 요소
비상	(날개단) 사진으로 보는 이주 동포의 삶 -사진자료 : 만주의 한인 이주민 초막 -사진자료 :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한인 가족
미래엔	(날개단) 사료 특특 : 간도 이주민의 고난 -황성신문, 1904. 3.3.-
동아출판	(특집자료) 역사특집 : 해외 이주 -지도 : 해외 이주 표시 지도 1) 자료 1 : 연해주 -내용설명 : 연해주 이주 배경 -사진자료 : 연해주 이주 초기의 한국인 아이들 -사료읽기 : 조선인 이주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조선인 이주 관련 보고'(1865)- 2) 자료 2 : 간도 -내용설명 : 간도 이주 배경 -사진자료 : 서간도 류허현의 한국인 마을 -사료읽기 : 간도 이주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천재교육	(특집자료) 해외로 떠난 우리 민족 -지도, 그래프 : 우리 민족의 해외 이주(1890~1930년대), 해외 이주 인구수 표시 -내용설명 : 주제-간도, 연해주로 떠난 우리 민족 -사진자료 : 1880년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한 조선인 가족
금성출판사	(탐구자료) 해외 이주 동포들의 생활 1) 자료 1 : 만주 지역 이주민의 삶 -사진자료 : 용정 지역 기원지 우물(중국 룡징) -설명자료 : 만주 지역 이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설명과 용정 지역에 대한 설명 2) 자료 2 : 연해주의 신한촌

	-사진자료 : 신한촌 기념탑 -설명자료 : 신한촌이 만들어진 역사에 대한 설명 (활동) 1. 자료 1과 2에서 해외 이주 동포들이 한인촌을 건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2. 자료 2와 3을 참고로 연해주와 하와이 이주의 차이점을 서술해보자.
지학사	(날개단) 사진자료 : 만주 용정촌에 세워진 서전서숙 + 설명
씨마스	(날개단) 사진자료 :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떠나는 한인들 (특집자료) 집중주제탐구 :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의 삶은 어떠하였을까? ¹⁸⁾ 1) 민족 운동의 바탕이 된 만주 동포 -설명자료 : 만주 이주의 배경과 시련 -사진자료 : 간도 이주 한인의 타작하는 모습 2)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연해주 동포 -설명자료 : 연해주 이주 시작부터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내용까지 모두 서술함 -사진자료 :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국인 -지도 : 한국인의 해외 이주와 분포 -활동 : 1. 만주·연해주·미주·일본 등으로 이주한 동포들이 겪은 어려움을 조사해 보자. 2. 해외 이주 한국인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조사해 보자. 3. 현재 해외 동포의 삶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해냄에듀	(특집자료) 역사 돌아보기 :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 (내용설명) 간도, 연해주 등 이주 배경 및 이주 상황 (사진자료) 간도 이주민들 (사료)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의 힘든 삶을 신문 사료로 제시-황성신문, 1904, 3.3.-
리베르스쿨	(날개단) 용어설명 : 신한촌 (하단자료) 사진자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 개척리

각 교과서는 다양한 시각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교과서 대부분은 해외로 이주한 이후 힘든 삶을 살았던 재외동포의 삶에 집중 조명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재외동포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시각자료 및 사료를 주로 제시하고 있으며, 활동 또한 ‘동포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등의 내용이 많다. 그 외에 천재교육은 우리 민족의 해외 이주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시하고, 각 지역별로 재외동포의 이주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를, 씨마스의 경우도 한국인의 해외 이주와 분포라는 제도를 제시, 각 지역별로 재외동포들의 분포를 보여주기도 한다.

18) 대단원 Ⅲ에서 조선 후기~일제 강점기까지 해외 동포들의 이주부터 시련, 삶, 현재까지 모두 묶어서 특집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



그리고 지식 내용을 서술하고 정보를 전달하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응용하는 활동을 제시한 교과서도 있다. 금성출판사와 씨마스 2종은 해외이주를 한 동포들의 입장을 생각 해볼 수 있는 활동을 주어 학습자로 하여금 역사적 지식을 흥미 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1910년대 이후 재외동포사 관련 서술내용 분석

1910년대 이후 재외동포사와 관련한 교과서 서술내용의 주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10년대 국외독립운동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인사회와 독립운동단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3·1운동 전개과정에서 재외 동포들의 참여가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간도참변과 중앙아시아의 강제 이주와 같은 국외 동포들의 시련과 관련된 내용, 네 번째는 일제에 의해 행해진 강제이주(징병, 징용)에 대한 것이다.

가) 1910년대 한인 사회 및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서술

9종 교과서 1910년대 국외 민족 운동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소단원으로 내용을 편제하여 서술하고 있다. 다음 표는 지역별 국외 독립 운동 기지를 한인촌-독립운동단체(자치단체)-교육 기관-군대로 분류, 이에 대한 서술유무를 확인한 표이다.

<표 13> 1910년대 한인 사회 및 독립운동 단체 서술 유무¹⁹⁾

지역	한인 사회	비상	미래엔	동아출판	천재교육	금성	지학사	씨마스	해냄에듀	리베르스쿨
중국 북간도	한인촌	○ 용정촌, 명동촌	○ 명동촌	○ 용정촌, 명동촌	x	x	○ 용정촌, 명동촌	○ 용정촌, 명동촌	x	○ 용정촌, 명동촌
	독립운동단체	○ 간민회,	○ 간민	○ 간민회,	○ 간민	○ 간민	○ 간민회,	○ 중광	○ 중광	○ 중광

19) 교과서 본문에서 서술한 지명 및 단체명 이외에도 본문 이외 지도에서 표시된 명칭도 모두 표에 기입하였다.

		중광단, 북로군정서	회, 간도 대한 국민회, 중광단, 북로군정서	대한 국민회, 광단, 북로군정서	회, 중광단, 북로군정서 사관 양성소.	회, 중광단, 북로군정서	중광단, 북로군정서 사관 양성소	단, 간민회	단, 북로군정서	단, 북로군정서 사관 양성소
	교육기관	○ 서전서숙, 명동학교, 사관연성소	○ 서전서숙, 명동학교	○ 서전서숙, 명동학교	○ 명동학교	○ 서전서숙, 명동학교	○ 서전서숙, 명동학교	○ 서전서숙, 명동학교	○ 서전서숙, 명동학교	○ 서전서숙, 명동학교
	한인촌	○ 신한민촌	○ 신한민촌	x	x	x	x	x	x	x
	독립운동단체	○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로군정서	○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로군정서	○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 경학사, 한족회	○ 경학사, 서로군정서	○ 경학사, 부민단	○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로군정서	○ 경학사, 부민단, 서로군정서
	교육기관	○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한인촌	○ 신한촌, 한흥동	○ 신한촌, 한흥동	○ 신한촌	○ 신한촌	○ 신한촌	○ 신한촌, 한흥동	○ 신한촌	○ 신한촌, 한흥동	○ 신한촌, 한흥동
	독립운동단체	○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전로한족회 중앙	○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한인사회당	○ 성명회, 권업회, 전로한족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	○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전로한	○ 성명회 권업회	○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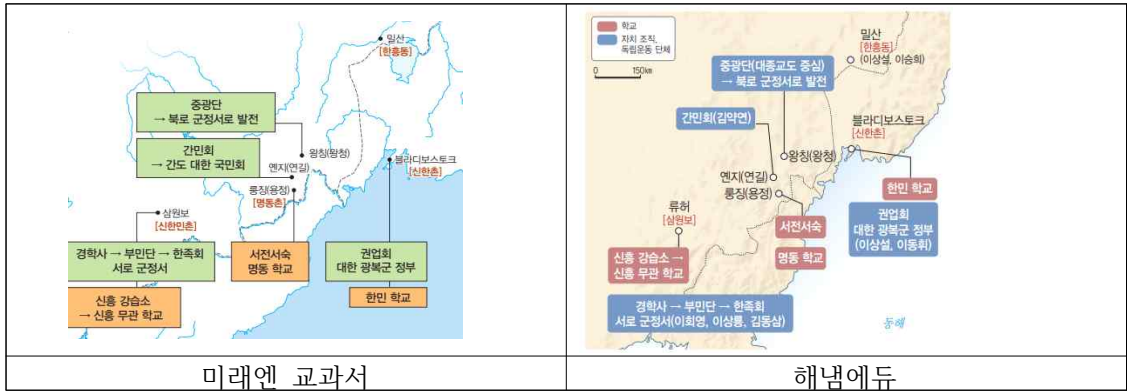
		총회, 한인 사회당			국민 의회		족회 중 앙 총회, 한인 사 회당			
교육기 관	x	○ 한민 학교	x	x	x	x	x	○ 한민 학교	x	
기타	권업 신문				권업 신문			권업 신문		

본문에서 한인촌-독립운동단체(또는 자치단체)-교육기관-군대라는 병렬적 순서대로 각 단체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본문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기도 하지만 주로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는 제목의 지도가 항상 포함된다. 지도 위에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 지역을 표시하고 여기에 독립운동단체와 교육기관, 그리고 군대들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서술방식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부터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그 서술체계가 변화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당시 국외에 만들어진 독립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본문 상에서 하나하나 열거하기보다 지도에서 바로 보여주는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문 서술 구성 방식은 교과서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예를 들면 본문 서술은 간단히, 지도상에서도 모든 단체를 표시한 교과서가 있고, 지도에서는 간단히 표시하지만 본문에서 자세히 단체명을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이 시기는 워낙 단체명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단체명을 서술하고 있다. 민족교육기관으로 북간도에서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서간도에서 신흥무관학교의 경우 신흥강습소에서 신흥 무관 학교로 발전하였다는 서술은 9종 모든 교과서에서 언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연해주 지역의 민족교육기관을 서술한 교과서는 2종이다. 미래엔과 해냄은 본문에서는 서술하지 않았지만 지도에서 한민학교를 표기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4> 1910년대 국외독립운동 기지 관련 지도 ‘한민학교’



또한 지학사의 경우 연해주의 권업회 단체와 더불어 권업신문을 언급한 것도 타교과서에 비해 상세하다. 해당 주제 페이지는 아니지만 해냄의 경우도 권업신문을 주제 열기로 활용한 지면이 있으며 권업신문에 대한 용어설명도 함께 실었다.

<그림 5> 권업회 관련 자료

<p>● 권업회 일제와 러시아의 탄압을 피해 한인의 단결과 지위 향상, 독립운동의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p>	 <p>○ 「권업신문」 권업회에서 발간한 기관지로, 순한글로 제작되었다. 권업회는 연해주 이주 동포 자치 기관으로, 연해주 일대에 사는 20만 명의 동포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고자 하였다.</p>
지학사	해냄에듀

9종 교과서 가운데 비상, 동아, 지학사 3종의 교과서에서 연해주 지역의 사회주의 세력이 조직한 한인사회당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국외 독립 운동기지 건설과 관련한 주제에는 본문의 서술내용이 단체 명칭의 개수가 차이가 날 뿐 대부분 지역별 단체를 서술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본문 이외의 읽기자료들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 본문 이외에 읽기자료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학습자에게 익숙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인물이나 주제들로 구성하고 있다. 주로 인물에 대한 소개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련 기관에 대한 내용이다. 그 외에 건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인 사회에 대한 서술 언급 내용이다.



<표 14> 1910년대 한인 사회 및 독립운동 단체 본문 외 구성 요소

출판사	본문 외 구성 요소
비상	(날개단) 지도 :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날개단) 사진자료 : 연해주 신한촌 기념탑+기념탑에 대한 설명 (하단 코너) 역사다가가기 : 이회영 형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회영 형제가 만주로 이주하게 된 배경과 이회영 형제가 겪은 시련에 대한 설명 -사진자료 : 이회영 -사료 : 이은숙, 「민족 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
미래엔	(날개단) 용어 설명 : 신흥 무관 학교 (날개단) 지도 : 1910년대 만주·연해주의 독립운동기지 (하단 코너) 자료 속 지식백과 :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료 :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내용설명 : 국외 독립 운동 기지 건설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 (특집자료) 이야기 더하기 : 이회영과 형제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 활동 -사료 : 이은숙, 「민족 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 -내용설명 : 이회영 형제의 독립운동 운영과 시련 -사진자료 : 이회영 사진 -활동 : 자신이 독립운동을 위해 국경을 넘는 일행 중 한명이라면 어떤 결심을 했을지 글로 써 보자.
동아출판	(날개단) 지도 : 만주·연해주의 독립운동 기지 (하단 코너) 역사 깊이 보기 : 신민회와 신흥 무관 학교

	<p>-연표 : 1910.12. 이회영 등 6형제 서간도 이주~1919.5. 신흥 무관학교로 개명</p> <p>-사진자료 : 영농작업하는 신흥 무관 학교 학생들 사진</p> <p>-자료 : 신흥 무관 학교 교가</p> <p>-내용설명 : 신민회 및 신흥 무관 학교에 대한 설명</p>
천재교육	<p>(날개단) 지도 :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기지</p> <p>(날개단) 사진자료 : 이회영</p> <p>-내용설명 : 이회영의 만주 이주에 대한 간단한 설명</p>
금성출판사	<p>(날개단) 지도 :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 건설</p> <p>(하단 코너) 자료 :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 건설 운동</p> <p>-내용설명 :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상하이, 미주지역</p> <p>-지도 : 1910년대 독립운동기지 건설 운동</p> <p>-사진자료 : 이회영(서간도), 이상설(연해주), 서진서숙(북간도)</p>
지학사	<p>(날개단) 지도 : 1910년대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 기지+설명</p> <p>(날개단)용어설명 : 권업회</p> <p>(하단코너) 역사 더 알기 :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 무관학교</p> <p>-자료 : 신흥무관학교 교가</p> <p>-사진자료 : 농사일 하며 군사 훈련을 받는 신흥 무관 학교의 학생들 사진</p> <p>-내용설명 : 신흥 무관 학교</p> <p>(특집자료) 역사 특집 : 가난과 고생길, 그러나 희망을 꿈꾸던 이주민의 삶</p> <p>1) 주제 : 독립운동가의 가족들, 국경을 넘어 만주로 이주하다</p> <p>-내용설명 :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의 시련</p> <p>-사진자료 : 지복영(지정천의 딸)</p> <p>-자료 :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이라는 수기</p> <p>2) 주제 : 간도에 모인 흰옷 입은 사람들, 공동체를 만들다</p> <p>-사진자료, 자료 :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p> <p>-내용설명 : 간도로 이주한 동포들의 시련</p> <p>-사진자료 : 간도 별판에 흰옷을 입고 모인 한인들 사진</p> <p>(활동)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가족이라고 가정하고 만주와 간도에서의 삶과 그곳에서 꿈꾸었을 희망을 상상해 보자.</p>
씨마스	<p>(날개단) 지도 : 1910년 전후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주요 학교와 민족 운동 + 설명</p> <p>(상단코너) 주제열기 : 신흥무관학교는 어떤 곳이었을까요?</p> <p>-도입글 :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설명</p> <p>-사진자료 : 신흥 무관 학교 설립 제107주년 기념식</p>
해냄에듀	<p>(날개단) 사진자료, 설명 : 이회영 인물+인물에 대한 설명</p> <p>(날개단) 지도 :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및 단체</p> <p>(하단코너) 인물 토크 :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1860~1920)</p> <p>-사진자료 : 최재형 사진</p> <p>-내용설명 : 인물에 대한 일대기</p>
리베르스쿨	<p>(날개단) 지도 :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p> <p>(하단코너) 역사 역량 강화하기 : 독립군의 산실, 신흥무관학교+활동</p> <p>-자료 1 : 신흥 무관 학교 졸업생 김산의 일대기와 사진</p> <p>-자료 2 : 신흥 무관학교와 이회영 6형제(요약)-서중석, '신흥 무관 학교와 망명자들'-</p> <p>-활동 : 자료1과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원보에 파견된 기자로서 신흥 무관 학교를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해 보자.</p> <p>-사진자료 : 신흥 무관 학교 학생들이 받을 경작하는 모습</p>

교과서 별로 1910년대 국외독립운동기지건설에 대한 본문 서술 이외에도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주기 위한 추가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추가 자료에 대한 주제는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에 힘쓴 이회영 일대기,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역할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 이회영 관련 자료를 넣은 교과서가 9종 중 8종이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본문을 학습자로 하여금 역사적 익숙함을 통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당대 대표적인 인물과 그에 대한 일대기를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인물의 생애를 통해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그림 6> 이회영과 신흥무관학교 자료

<p>8월 초에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리요,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들 집을 예전 대갓집이 그렇듯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우리 집 어른(이회영)은 위아래 구분 없이 뜻만 같으면 동지로 대접하였다.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족을 모두 팔고 경술년(1910) 12월 30일에 큰 집, 작은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p> <p>— 이은숙, 『민족 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p> 	<p>역사 깊이 보기 신민회와 신흥 무관 학교</p>  <p>신민회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여 독립 전쟁을 준비하려 하였다. 이에 이회영 형제가 중심이 되어 신흥 김승소(신흥 무관 학교)를 세웠다. 신흥 무관 학교가 배출한 인재들은 여러 독립군 부대에서 활약하였으며, 이후 한국광복군의 토대가 되었다.</p>
<p>비상, 역사 다가가기, 이회영 형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p>	<p>동아출판, 신민회와 신흥 무관 학교</p>

동아출판의 경우 본문 하단에 역사 깊이보기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1910년대 만주 이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연표를 제시한 점, 관련 사진과 사료 등 다양한 자료를 구성하였다. 해냄 에듀 교과서에서는 연해주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최재형에 대한 읽기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기존에 잘 알려진 이회영 이외의 인물로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학사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조명하여 독립운동가가 되는 입장도 있지만 옆에서 가족이 되어 역사적인 상황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한 점은 다른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료이다. 지복영의 ‘민들의 비상’과 허은의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라는 회고록을 사료로 보여주어 당시 재외 동포 사회의 힘들었던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이를 활동으로 제시하여 보다 학습자가 심층적으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7> 지학사, 역사 특집, 가난과 고생길, 그러나 희망을 꿈꾸던 이주민의 삶

<p>독립운동가의 가족들, 국경을 넘어 만주로 이주하다</p> <p>총독부에서는 한사코 우리 가족이 국경 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도 끈기 있게 “나 같은 능력 없는 여자의 몸으로 바느질품만으로는 도저히 세 자식을 먹여 기르기가 어렵다. 마침 봉천에 있는 모 여관에서 찬모와 침모를 구한다고 하며 대우도 좋은 편이니 꼭 가야만 하겠다.”라고 거듭 말한 끝에 겨우 만주로 떠나게 되었다.</p> <p>—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p>	<p>간도에 모인 흰옷 입은 사람들, 공동체를 만든다</p> <p>처음 도착하면 자치구에서 당번들이 나와 누구네 몇 가구, 또 누구네 몇 가구를 배당해 보살펴 준다. 만주의 허허벌판은 이때부터 흰옷 입은 우리 민족들로 허영게 덮어 갔다. 멀리서 서로 쳐다만 봐도 든든하였다. 이렇게 되자 애국지사들이 한 인 자치 단체를 만들어 엄중한 규율을 세우고 학교도 세웠다.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을 때까지 만주 땅에다 하나의 작은 나라를 만들어 운영한 셈이었다.</p> <p>—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p>
---	--

이처럼 교과서들은 본문 내용 이외에도 구성 요소를 통해 다양하게 사건에 대해 서술하였다. 단순히 사진이나 날개단을 통한 추가 설명을 넣은 것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체로 하단 코너를 만들어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본문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넣어 강조하였다.

나) 3.1운동 시기 재외 동포의 참여

국내에서 선포된 3.1 독립 선언문에 따라 중국의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 미주 등에 거주하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의 독립 선언과 시위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국외의 만세 시위는 이주한 재외동포들이 전개한 독립운동이라는 점에서 재외동포사의 한 역사로 볼 수 있다.

3.1운동 시기 국외 동포들의 만세운동 참여는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서술 양과, 그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표 15> 3.1 운동 시기 만주, 연해주 동포 참여 관련 서술 내용

출판사	본문 주요 서술 요약 내용	구성 요소
비상	<만세 시위의 발전과 일제의 탄압> 3·1 운동은 국외의 한인 사회로도 확산 …서간도의 삼원보,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이어졌고,	(사진자료)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 대회에서 행진하는 재미 한인들(1919. 4. 16.)
미래엔	<시위가 농촌으로 확산되다> …(중략)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연일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중략)	없음
동아출판	<해외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나다> 국외의 한국인들도 독립을 위한 만세 시위에 참여…만주에서는 서간도의 삼원보에서 가장 먼저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서도 만세 시위…	(사진자료) 필라델피아 시가행진
천재교육	<3·1 운동이 전개되다-국외로 확산> 서간도 지역에서는 부민단을 중심으로 독립 축하회를 열고 만세 시위를 펼쳤다. 북간도 지역의 용정과 연해주에서도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중략)	(사진자료)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 시가행진
금성출판사	<3.1운동의 전개> 만주와 연해주, 미주 등 국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이어졌다.	(사진자료) 종로에서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여성들의 만세 행진, 미국 필라델피아 시가 행진 사진
지학사	<일제의 탄압에도 각지로 만세 시위가 퍼져 나간다> 만세 시위는 해외로까지 확산하여 북간도 룡징,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시위가 전개	(사진자료) 미주 동포의 시가행진(미국 필라델피아)
씨마스	<국외 이주 동포도 독립 만세를 외치다> 만세 시위는 국외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남만주 류허(유하)현에서는 3월 12일에 부민단을 주축으로 수백 명이, 간도에서는 3월 13일에 1만여 명이 만세 시위를 벌였다. 연해주의 신한촌에서도 시위가 일어났고. (중략)	(하단코너) 국외에서 일어난 3·1운동 (지도) 국외에서 일어난 3.1 운동 만세시위 횡수 (사진자료) 간도 룡진 서전대야 만세시위, 재미동포 한인 자유대회
해냄에듀	<평화 시위는 왜 무력투쟁으로 바뀌었을까?> 3·1 운동은 국외로도 번져 나갔다. 간도 용정, 연해주 블	없음

	라디보스토크 등을 비롯하여 (중략) 동포들도 독립 선언을 하고 시위에 나섰다.	
리베르스쿨	<3.1운동이 국내외로 확산되다> 만주, 연해주, (중략) 지역에서도 대규모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서간도에서는 부민단이 중심이 되어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고, 북간도에서는 3만여 명의 한인들이 용정 서전대야에 모여 만세 시위를 하였다. 연해주에서도 한인들이 만세 행진을 하는 등 만주와 연해주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사진자료) 미국 필라델피아 대한 독립 만세 시가행진

9종 한국사 교과서 모두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전개된 국외 만세 운동을 서술하고 있다. 서술방식은 소주제를 따로 편성한 동아출판이 있는 반면, 대부분은 3.1운동이 국내로 확산되는 과정과 더불어 국외 만세운동을 함께 서술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는 공통적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를 개최하고 시가행진을 한 사진을 날개단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만세 시위 사진



하지만 씨마스의 경우 ‘국외에서 일어난 3·1운동’이라는 주제로 하단코너를 따로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만주, 러시아, 연해주 등 국외에서 일어난 3.1운동 만세시위 횃수를 표시한 지도를 배치하였고, 더불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활용하는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 사진 뿐만 아니라 간도 룡진 서전대야에서 일어난 만세시위 사진 자료를 제시하였다.

8종의 타교과서가 재외동포들의 3.1운동 참여를 본문에서 지역 나열 및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는 단순한 서술을 다루고 있는 점과 다른 점이다. 재외 동포들의 만세 시위 참여의 중요성을 보다 더 부각시키기 위해 국외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의 구체적인 횃수를 제시하여 당시 3.1운동이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까지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 재외 동포의 시련(간도참변,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이 일제 강점기에 겪은 시련으로는 중국에서 일어난 간도참변, 일본에서는 관동대학살, 그리고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가 있다. 이 중에서 간도참변과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에 대한 서술 유무와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외 동포의 시련의 경우는

출판사들마다 서술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해외이주가 처음 시작된 시점부터 한번에 다루기도 하며 전시체제 동원에 따른 강제 징용과 징병도 함께 언급하며 시련으로 다루기도 한다.

<표 16> 재외 동포의 시련 서술 유무

사건	비상	미래엔	동아출판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지학사	씨마스	해냄에듀	리베르스쿨
간도참변	○	○	○	○	○	○	○	○	○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	○	x	x	○	○	○	○	○

2018 개정 교육과정기에 발행된 한국사 교과서의 국외동포 시련에 대한 서술 내용 유무를 살펴보면 위 표와 같다. 간도참변에 대한 서술은 모든 9종의 한국사교과서에서 서술을 하였지만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에 대한 서술은 동아출판과 천재교육 2종 출판사에서는 그 내용을 서술하지 않았다.

<표 17> ‘간도참변’의 본문 서술 및 구성요소 분석

출판사	본문 요약 및 구성요소
비상	(본문) 독립군의 시련 :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군에 패한 일본군은 독립군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간도 지역의 한인 마을을 습격하여 가옥, 학교 등을 불태우고 우리 동포를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간도 참변). 이 사건은 1920년 10월부터 1921년 봄까지 이어졌으며, 이 사건으로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비롯한 민간인이 무참히 학살. (하단코너) 만주 지역 동포의 시련, 간도참변 -사진자료 : 간도참변으로 가족을 잃은 부녀자의 모습 -자료 : 선교사 스탠리 마틴이 목격한 현장 -조지훈, 한국 민족 운동사- -설명자료 : 간도참변에 대한 상세 내용
미래엔	(본문) 독립군의 시련, 간도참변과 자유시참변 : 일본군은 청산리 대첩을 전후하여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구실로 간도의 한인 마을을 초토화. 연이은 패전에 대한 보복으로 양민과 어린이까지 학살하고, 집과 학교, 교회 등을 불태우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름.(간도 참변, 1920) (특집자료) 이야기 더하기-국외이주동포의 고난(간도참변) -지도 : 간도참변 발생 지역 -자료 : 간도 참변을 목격한 서양 선교사 마틴(S. H. Martin)의 수기 - -사진자료 : 간도 참변 때 일본군이 독립군을 총살하는 장면
동아출판	(본문) 만주의 독립군이 3부를 편성하다 : 일제는 독립군 근거지를 없애고 봉오동 전투 등의 패배를 보복, 이에 1920년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간도 지역의 한국인을 학살하고, 가옥과 학교 등을 불사르는 간도 참변을 일으킴. (날개단) 용어설명 : 간도참변-1920년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해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사건. 당시 대한민국 임시 정부 간도 통신원은 1920년 10월에서 11월까지 두 달 동안에만 3천명 이상의 한국인이 학살되었다고 보고
천재교육	(본문) 독립군의 시련,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 청산리 대첩을 전후하여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간도의 한인 촌락을 습격하여 한인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만행. 1920년 10월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만행은 1921년 봄까지 이어짐(간도참변). (상단코너) 자료 : 간도참변 -캐나다 선교사 마틴의 후기 -사진자료 : 간도 참변으로 가족을 잃은 한인들 (날개단) 지도 : 독립군의 이동 지도에서 간도참변 표시


금성출판사	(본문) 독립군의 시련, 간도 참변과 자유시참변 :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보복을 자행.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간도 지역의 한인 마을을 파괴하고, 한국인을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간도 참변, 1920). (날개단) 사진자료 : 간도 참변으로 폐허가 된 농가
지학사	(본문) 독립군이 시련을 겪다 :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간도의 한인 마을을 습격. 일본군은 한인 수천 명을 학살하고 집과 학교, 교회 등을 불태우는 등 만행을 저지름(간도 참변, 1920~1921). (사진자료) 간도 참변으로 폐허가 된 마을
씨마스	(본문)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독립군이 시련을 겪다 :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은 1920년 10월부터 1921년 봄까지 간도의 한국인 마을을 공격하여 무차별 학살을 자행(간도 참변). -지도 : 1920년대 독립군과 3부의 활동 범위에서 간도참변 표시 (하단코너) 역사 산책 : 서양 선교사 눈에 비친 간도 참변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사진자료 : 간도 참변 당시 일본군의 학살 만행(1920) -자료 : 선교사 마틴의 수기 내용
해냄에듀	(본문) 독립군은 어떤 시련을 겪었을까? : 1920년 청산리 전투를 전후하여 일제는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10월부터 3개월간 간도에 사는 한국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름(간도 참변). (지도) 무장 독립 투장과 3부의 성립 지도에서 간도 참변 표시
리베르스쿨	(본문) 독립군이 시련을 겪다 : 일제는 청산리 전투를 전후하여 1920년 10월부터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만주에 사는 한국인 양민을 학살하고, 한국인 학교를 방화하는 간도 참변(경신 참변)을 일으킴. (하단코너) 역사 역량 강화하기 -자료 : 간도참변에 대한 선교사 마틴의 기록

간도참변의 대한 서술은 9종 교과서에서 모두 서술하고 있다. 서술내용의 대략적인 흐름은 청산리대첩 이후 간도지역에 머물던 한인들이 일본군에 의해 입었던 피해사실을 본문 상에서 언급해주고 이와 관련한 추가 사진 자료를 보여주는 구성이다. 간도참변의 내용은 독립군의 시련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간도참변이 일어난 배경, 시기, 피해내용에 대해 서술되어 있고, 금성출판사, 지학사 2종은 간도참변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으로 서술하였고 미래엔은 본문에서는 간단히, 자료를 통해 추가로 사료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반면 나머지 6종의 교과서에서는 간도참변이 일어난 시기까지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다. 동아출판은 본문에서는 본문 내용 이외에도 날개단의 용어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림 9> 씨마스 '선교사 마틴의 수기'

역사 산책

서양 선교사 눈에 비친 간도 참변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간도 참변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목격한 외국인 선교사들은 그 참상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920년 10월 31일, 연기가 자욱하게 낀 마을에 가 보았다. 사흘 전 새벽에 무장한 1개 대대가 이 마을을 포위하고 남자라면 늙은이,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죽였다. …… 반만 탄 19채 집 주위를 차례로 돌아보니 할머니와 딸들이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살덩이와 부서진 뼈를 줍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 시체를 하나 끌어내어 뿔뿔이 흩어진 사지를 정확하게 맞추어 사진을 찍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사진기를 고장시킬 수 없어 네 번이나 다시 찍었다.”

- 선교사 마틴의 수기

▲ 간도 참변 당시 일본군의 학살 만행(1920)

당시 사건에 대해 본문에서 상세히 서술하기보다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이 사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간도참변의 경우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시각자료로써 교과서 별로 다양한 사진들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사진 이외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작성한 글을 사료로 제시하여 피해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게끔 한 자료로 위의 <그림 9> '선교사 마틴의 수기'가 인상적이다.

다음으로는 중앙아시아의 강제이주에 대한 내용 분석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재 한민족(고려사람)이 살고 있다. 이들이 이국땅에 이주하게 된 이유는 1937년 소비에트 스탈린정부에서 연해주 조선인들을 적극적으로 분류하여 강행한 조선인 추방정책의 결과이다.²⁰⁾

<표 18>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의 서술 및 구성요소 분석

출판사	서술 내용 요약 및 구성요소
비상	(특집자료) 지역답사-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의 삶(연해주) -내용설명 : 러시아 혁명 이후 한인들은 카레이스키(고려인. 1937년 소련은 한국인들이 일제에 협력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연해주 지역의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이에 따라 한인 10만 명 이상이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강제 이주당하였다. 오늘날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이들의 후손. -지도 : 연해주 한국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1937) -사진자료 : 고려인 강제 이주 기념비+간단설명
미래엔	(특집자료) 이야기 더하기-국외이주동포의 고난 : 연해주 한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1937) -지도 : 중앙 아시아 강제 이주 표시 지도 -내용설명 : 소련은 일본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인이 일본을 지원할 것이라는 구실로 연해주에 살던 한국인 수십만 명을 약 6,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그곳에서 한국인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불모의 땅을 개척하고 농장을 일궈.
동아출판	서술하지 않음
천재교육	서술하지 않음
금성출판사	(본문 아래 하단코너) 주제 54. 해결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의 상처(연해주와 중앙아시아) -내용설명 : 스탈린은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을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 시킴.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강제로 내몰린 한인들을 카레이스키(고려인)이라고 부름. -지도 : 연해주에서 강제이주 표시 지도 -사진자료 : 목화를 재배 중인 고려인 -사진자료 : 흥범도 장군 기념비 + 설명(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뒤 극장 수위로 일하다 사망)
지학사	(학습목표)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의 삶에 대한 설명 (도입자료) -사료 : 문영숙,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 사진자료 : 고려인 강제 이주 기념비 (본문) 해외 이주 동포들의 활동과 수난-한인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다 :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여 정착한 한인들은 신한촌 등 한인 마을을 형성. 이곳을 기반으로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 민족 운동의 기틀을 마련. 그러나 소련 정부는

20) 김중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이주과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글로벌문화연구』 제 7권 제 1호, 2016, 1~2쪽.

	일본과 전쟁 가능성이 커지자 한인들이 일본에 협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1937). 약 6,000km나 되는 강제 이주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 척박하고 낮은 땅에 어렵게 도착한 한인들은 황무지를 개척하고 집단 농장을 운영. 이들은 현재도 '고려인(카레이스키)'이라 불리며 한인 사회형성. (지도)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 설명
씨마스	(특집) 집중 주제 탐구 :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의 삶은 어떠하였을까? 2)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연해주 동포 -내용 설명 : 1860년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획득한 러시아는 개척을 위해 조선인의 이주를 적극 허용.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한 사람들은 신한촌을 비롯한 여러 곳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 국권 피탈 무렵에는 많은 민족 운동가가 망명.한국인은 권업회를 비롯한 민족 운동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였으나, 일본과 마찰을 우려한 러시아가 한국인의 무장 활동을 금지. 1937년에는 이 지역에 살던 동포 수십만이 소련 당국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그 과정에서 약 1만여 명이 희생되었으나 갖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 중앙아시아에 새로운 한국인 사회를 형성. -사진자료 :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국인
해냄 에듀	(하단코너) 인물 토크 : 무장 독립운동의 전설, 홍범도(1868~1943) -사진자료 : 홍범도 -내용설명 : 1937년 소련에 의해 연해주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할 때 홍범도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어 정착함. (본문) 해외로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1937년 소련의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한국인 17만여 명은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추방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목숨을 잃는 이주민들도 있었다.
리베르 스쿨	(본문) 해외 한인 사회의 형성과 민족 운동 - 만주와 연해주에 한인 사회가 형성되다 :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러시아 연해주로의 한국인 이주. 신한촌과 자치 단체이자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 1919년에는 대한 국민 의회.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은 소련과 일본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인들이 일본의 첩자 노릇을 할지 모른다고 의심하여 한국인 17만여 명을 6,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인이 희생. 우리 동포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불모의 땅을 개척. 오늘날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은 이들의 후손. (사진자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한인들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시행한 역사적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서술 여부는 교과서마다 차이를 보인다. 천재와 동아의 경우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지 않았다.

서술을 한 교과서들 가운데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사건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을 서술한 교과서와 피해 상황까지 상세히 서술한 교과서로 분류할 수 있다. 금성과 해냄에듀, 씨마스 3종은 1937년 강제 이주 상황에 대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추방당했다.' 정도로 간단한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상세하게 설명을 보여주는 교과서는 비상교육, 미래엔, 지학사, 리베르스쿨 4종이다. 강제 이주 배경, 피해 규모, 시련과 극복 노력, 현재 '고려인'으로 한인 사회 형성이라는 흐름으로 서술되고 있다. 비상의 경우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시, 지도 위에 이주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숫자까지 표기해두어 당시의 이주상황을 보다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쉽게 제시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시련과 관련하여 Ⅲ단원에서 따로 소단원을 편제한 지학사의 경우는 단원도입부 자료로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당시 상황을 회고 하는 형식의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에

게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은 왜 갑자기 중앙아시아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였을까?'라는 주제 열기 질문을 통해 역사적 상황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림 10>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관련 자료

<p>이곳은 원동(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p> <p>○ 시베리아 철도 숫자: 소련 각 공화국 내의 한인 수(1959) ● 한인의 집중 거주지 → 연해주 한인의 이주</p> <p>① 연해주 한국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1937) ② 고려인 강제 이주 기념비(카자흐스탄 우슈투베)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의 최초 정착지에 세웠다.</p>	<p>학습 목표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의 삶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p> <p>기차에 탄 카레이스키들은 꿈쩍없이 우리에게 갇힌 가족들 같았다. …… (기차 안이 울음바다로 변하였다. 칼바람 때문이었을까. 극심한 추위와 싸우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얼어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 몸이 쇠약한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p> <p>- 문영숙, 『카레이스키, 끝없는 방랑』</p> <p>② 연해주에 살던 한인은 왜 갑자기 중앙아시아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였을까?</p>
<p>비상출판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의 삶'</p>	<p>지학사 '해외 이주 동포들의 활동과 수난'</p>

<표 19> 재외동포 시련 관련 기타 내용

출판사	내용 요약 및 구성요소
비상	<p>(특집자료) 지역답사 -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의 삶(만주) -사진자료 :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들 -내용설명 :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토착민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황무지를 개간, 한인 사회를 형성. 그러나 일제는 만주의 한인 사회를 탄압, 1920년대에는 간도 참변과 미쓰야 협정 등으로 만주 동포들이 많은 피해. 1930년대에는 일제가 만주국을 세운 이후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 국내 한국인들을 강제 이주. 1940년대에 중국 국공 내전의 결과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중국 국민의 자격을 받았고, 1952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세움</p>
지학사	<p>(본문) 해외 이주 동포들의 활동과 수난-만주에서 독립 전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다 : 일제의 식민 통치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은 만주로 이동. 1930년대에 일제가 만주 개척을 위해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한인이 만주로 이주. 그러나 한인 대부분은 소작농으로, 중국인 지주에게 차별을 받으며 힘들게 생활. 특히,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자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이 크게 악화하여 만주 이주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짐. 한편, 만주에서는 일찍이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등 무장 투쟁을 위한 활동이 전개. 만주의 독립군은 일제의 공세에도 독립을 위한 투쟁. 이러한 활동은 만주 지역 한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p>
씨마스	<p>(특집) 집중 주제 탐구 :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의 삶은 어떠하였을까? 1) 만주 운동의 바탕이 된 만주 동포 -내용설명 : 만주 이주 배경과 이주 후 민족 운동 지원. 한국인은 중국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머리 모양과 옷을 중국식으로 바꾸기도 함. -사진자료 : 간도이주 한인의 타작하는 모습 사진 -지도 : 한국인의 해외 이주와 분포 (중국-258만 5,993명) (활동)-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 등으로 이주한 동포들이 겪은 어려움을 조사해 보자, 해외 이주 한국인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조사해 보자, 현재 해외 동포의 삶은 어떠한지 알아보자.</p>
해냄 에듀	<p>(하단코너) 생각 토크 : 한국 '디아스포라'의 역사 -지도 :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국외 이주(연해주, 간도, 만주, 중앙아시아 이주 표시)</p>

	-내용설명 : 디아스포라의 의미. 조선후기~1960년대까지 이루어진 해외이주에 대한 설명 (날개단) 레퀴엠-한민족 유민사 그림과 설명
리베르스쿨	(본문) 해외 한인 사회의 형성과 민족 운동 - 만주와 연해주에 한인 사회가 형성되다 : 만주 지역은 고대부터 한민족의 활동 무대였고 국권 상실을 전후한 시기에는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 지역. 1930년대에는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 만주 이민 정책을 추진하여 만주의 이주민 수는 증가. 중국 동북 지역에는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존재.

재외동포사에 대한 교과서 내 서술 중 만주 지역의 경우 만주 사변 이후 일본에 의한 강제 이주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가 있다. 비상, 지학사, 리베르스쿨 3종 교과서이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만주지역의 경우는 간도참변까지 재외동포의 시련을 다루고 있다면 3종 교과서는 현재의 조선족까지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냄에듀는 하단코너에서 한국 ‘디아스포라’의 역사라는 주제로 읽기자료를 제시하였는데, 8종의 다른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자료라는 점에서 신선하다. 주제 그대로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고 있다.

<그림 11> 해냄에듀, 한국 ‘디아스포라’의 역사



디아스포라(Diaspora)는 본거지에서의 추방이나 기약 없는 민족의 이산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조선 후기에 시작된 한국인의 국외 이주는 일제강점기에 더욱 확산되었다. 생존을 위해 떠난 사람도 있었고, 항일 투쟁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도 있었으며,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국과 캐나다로의 이주가 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외로 떠난 사람들이 한인 사회를 형성하여 현재 700만 명 이상의 재외 동포가 지구촌 세계에 살고 있다.

대단원 Ⅲ에서 ‘재외 이주 동포들의 시련’ 주제는 1910년 이전부터 이루어진 이주사를 한번 더 언급하면서 일제강점기 재외동포들이 겪었던 시련을 추가로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다.²¹⁾ 이는 앞의 Ⅱ단원의 해외이주와의 연결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강제 이주에 의한 징용, 징병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강제 이주는 징용과 징병에 해당한다. 이 내용은 일제의 전시 체제 동원이라는 주제 안에서 서술되고 있다. 9종 교과서 모두 이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이 국가 총동원 체제를 제정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인력을 수탈하였으며, 지원병제, 학도병제, 징병제에 따라 강제이주가 이루어졌다는 흐름으로 본문이 서술되어 있다.

강제 이주에 의한 징용과 징병에 대한 본문 서술 가운데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 및 그 내용을 찾아 정리하면 아래 <표 20>과 같다.

21) 재외동포의 시련에 대한 내용은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 및 지면에서 서술하기보다, 여러 지면에서 분산되어 서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간도참변은 본문에서 독립군의 시련과 관련한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재외동포의 시련이라는 주제로 재언급을 해주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0> 강제 이주의 중요 서술 내용 및 구성 요소

출판사	강제 이주(징병, 징용)의 주요 서술 내용 및 구성요소
동아출판	(본문) 04.징병과 징용-한국인을 끌고 가 강제 노동을 시키다 : 전쟁 막바지인 1944년에는 국민 징용령을 다시 개정하여 한국인을 본격적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이 시기 강제 징용된 이들의 수는 수백만 명을 헤아렸다. 강제 동원된 사람들은 주로 농민 출신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사할린, 동남아시아 등의 광산, 건설 현장, 군수 공장 등에 끌려가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 (날개단) 통계자료 : 한국인 노동력 강제 동원 현황
금성출판사	(본문 아래 하단코너) 주제 54. 해결되지 않은 일제 강점기의 상처(일본) -내용설명 :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 내 한인들은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일본 각지와 사할린 지역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림. (본문)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 :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해 「국민 징용령」(1939)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을 탄광이나 군수 공장, 군용 활주로 공사 등에 투입하였다. 이들은 당시 전장이었던 일본·중국·동남아시아·사할린 등지로 끌려가 혹사당하였다.
해냄에듀	(본문) 강제 동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 사할린에 징용된 사람들은 다시 일본으로 끌려가거나 광복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해 이산의 아픔을 겪음.
리베르스쿨	(본문) 3. 인적 물적 수탈의 강화 - 전시 동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인적, 물적 수탈을 강화하다 : 국민 징용령을 공포하여(1939) 많은 한국인을 징용함. 징용된 한국인은 홋카이도, 사할린, 남태평양 등지의 탄광이나 군수 공장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림.

재외동포사에서 연구된 내용에 따르며 중앙아시아의 한인 외에 극동의 사할린에도 한인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1860년대 자발적인 농업이주로 형성되었지만, 본격화 된 것은 일제말기의 강제징용에 의한 것이었다. 일제말기 이 지역에 강제징용 된 한인은 무려 15만 명 정도에 이르렀는데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약 43,000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었다. 사할린 이주는 여러 시기로 구분이 되지만²²⁾,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할린 이주 내용은 아주 소략하다. 교과서 가운데 4종만이 사할린 관련 강제 이주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또한 1줄 정도이며 ‘일본에 의한 강제이주가 되었다’는 단순 사실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교과서 지면의 한계 상 상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기에 선택적인 서술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2018 개정 한국사에 나타난 재외동포사를 중국과 러시아,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미주와 일본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재외동포사에 대한 내용도 많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맺음말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간단한 문제점 몇 가지를 제기한 후 마무리하고자 한다.

22) 사할린 한인의 이주는 정치적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으로 6개의 이주기로 구분될 수 있다. 사할린이 남북으로 분할되기 이전인 1905년 이전의 초기이주시기, 남 사할린과 북사할린 모두 비교적 자유로운 이주를 했던 자유이주기(1905-1937), 일본의 강제이주기(1937-1945)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재혁, 「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 『한국 시베리아연구』, 8쪽, 2011. 참고)

재외동포 이주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1910년 이전, 1910년~1945년 이 두시기에 집중하여 한국사 교과서 Ⅱ, Ⅲ단원의 재외동포사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았다. 교과서 검토에 앞서 2018 개정 교육과정 상 재외동포사 관련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에서는 해외이주, 국내외 민족 운동이라는 2가지 갈래로 볼 수 있었다.

1910년 이전 교과서 내 서술된 재외동포사는 주로 지역별 해외 이주를 하게 된 이주 배경과 이주 후 생활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1910년 이후 교과서 내 재외동포사는 주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1910년대 국외독립운동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인사회와 독립운동단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3·1운동 전개과정에서 재외 동포들의 참여가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간도참변과 중앙아시아의 강제 이주와 같은 국외 동포들의 시련과 관련된 내용, 네 번째는 강제이주(징병, 징용)에 대한 것이다. 9종 교과서에서 서술된 재외동포사 관련 내용은 본문 뿐 만 아니라 본문 하단코너, 날개단, 탐구활동, 특집 등 교과서에서 다양한 코너를 통해 기술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서술 분량과, 서술내용, 주제를 보충하는데 활용하는 구성요소 등 9종 교과서에서 재외동포 관련 서술체계는 저마다 작은 차이점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재외동포 서술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용어 사용이 교과서 마다 혼재되어 서술된다는 점이다. 재외국민, 재외한인, 동포 등 여러 명칭으로 서술되고 있어 용어에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둘째, 교과서마다 서술방식에서 고유의 선택과 자율성이 있지만 재외동포사의 경우 해외 이주와 민족운동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시련 등 그 내용들이 분산되어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이는 교과서 내 민족운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재외동포사가 함께 전개되다 보니 서술적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재외동포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위주의 상세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전부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사 또한 우리의 역사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학생들에게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 이를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지식 나열적인 서술은 교사들로 하여금 한정된 수업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이 간략화 된 역사 사실을 가르치다 보면 단순 정보 지식 전달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교과서 서술체계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교실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교과서에 탐구활동으로 제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내용을 서술할 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사와 관련된 최신 연구 성과가 꾸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가 일상이 되어가는 오늘날에 재외동포의 역사와 현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도면희 외 8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20.
- 한철호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20.
- 노대환 외 9인,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2020.
- 최병택 외 10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20.
- 최준채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2020.
- 송호정 외 9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20.
- 신주백 외 7인, 고등학교 『한국사』, 씨마스, 2020.
- 박중현 외 9인, 고등학교 『한국사』, 해냄에듀, 2020.
- 이익주 외 6인,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2020.
- 고등학교 『세계 한인 정치·경제사』, 전라북도교육청, 2019.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김상윤,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재미 한인들의 독립운동 서술과 문제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성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역사과 핵심역량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역사와 교육』 22,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 연구소, 2016.
- 김중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이주과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글로벌문화연구』, 2016.
- 김주용, 「한인의 서간도, 북간도 이주와 정착: 1910년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 54호, 2021.
- 김한종, 「중등 역사교과서 개편의 과정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4, 2011.
- 김한종, 「교육과정 구성 논리로 본 2015 개정역사교육과정의 쟁점」, 『역사교육연구』 23, 2015.
- 방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힘을 가진 그들’의 역사를 반복하다」, 『역사비평』 113, 2015.
- 윤상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사 서술 현황과 과제」, 『史叢』 79, 2013.
- 이재혁, 「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 『한국 시베리아연구』, 2011.
- 조승희, 「일제 강점기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분석과 교육방안」,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최도연, 「해방 이후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연해주 한인사회 서술의 변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최효정,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재외동포’서술의 현황과 과제-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2018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재외동포사’ 서술 분석

-만주, 사할린,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호경(동국대학교)

이 글은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의 근대사 부분에 서술된 ‘재외동포사’ 중 만주, 사할린, 중앙아시아로 그 지역을 한정하여 관련 단원의 서술체제와 내용을 분석한 ‘역사교과서 서술내용’ 연구입니다.²³⁾ 해방 후 국가적 차원에서 재외동포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를 위한 노력은 1997년 10월에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부터는 외교부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어 국가가 직접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외동포의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진 현 시점에서 그에 대한 역사교과서 서술을 고찰하는 것은 연구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재외동포사에 대한 연구는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지만 역사교육학에서는 아직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역사교육의 절대 지침서는 아니지만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상보관계를 이루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기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²⁴⁾ 또한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각 주제에 대한 학계의 성과를 반영하며 당시 정권의 성향과 논리, 국가관 등 역사교육의 현재주의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재외동포사의 내용 검토와 분석은 현재 재외동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고찰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발표 논문을 읽으며 재외동포사에 대한 공부의 깊이가 많이 되었고, 이 주제에 대한 역사교육학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통해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첫째, 이 연구의 주제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의 재외동포사 서술인만큼, 핵심용어인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자의 개념 정의와 용어 통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각주 2번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의 재외동포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다고 밝힌 후 그 의미와 유사 용어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는 ‘재외동포와 재외한인’ 두 용어를 혼용한다고 하였는데, 하나의 개념적 용어를 특별히 두 용어로 혼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 이유가 연구 대상인

23) ‘역사교과서’는 역사교육학에서 그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첫째, 역사교과서의 내용 선정 및 조직 원리에 관한 연구, 둘째, 역사교과서 서술내용에 관한 연구, 셋째, 역사교과서의 서술양식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호환 편, 신유아 외 3인, 「역사교과서 내용 및 서술양식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 역사교육의 연구동향』, 책과함께, 22쪽, 2011.

24) 한철호,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서술과 그 특징」, 『역사와 교육』 27, 역사와교육학회, 2018, 157쪽.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의 용어 사용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분류와 유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머리말의 첫 문장은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로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 디아스포라 용어는 머리말 처음과 본문의 서술 분석 중 ‘해냄에듀’의 내용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각주 2번의 내용에 따라 한인 디아스포라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서 사용된 재외동포 관련 유사 용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인 디아스포라는 이 글의 핵심용어인 재외동포와 동일한 개념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두 개념을 ‘혼용 또는 구분’하는 이유를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에 서술된 재외동포사 연구 범위를 만주, 사할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할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언급하셨듯이, 재외동포사는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에서 먼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학계를 대표하는 논문과 함께 연구 동향의 특징을 보여준다면 이 연구 주제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역사교육에서 교과서를 통해 재외동포사를 분석한 선행 연구인 각주 3번에 관한 구체적 분석이 제시될 때 앞선 연구들과 차별화된 이 글의 문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머리말 첫 문장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은 19세기 중엽 조선후기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 윤인진의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 주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표 1>과 같이 연구 시기를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에 발표자의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사적 의의를 드러낸다면 이 글의 논거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²⁵⁾

셋째, II장에서는 2018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재외동포사 관련 단원의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는 2018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표 2>와 같이 근·현대 시기 위주로 편제한 고등학교 『한국사』의 단원 구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표 3>에서 대주제 ‘II.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의 학습요소에 ‘해외 이주’가 명시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전 교육과정과 다른 특징적 요소로 이것이 나온 배경과 그 의미를 연구 주제에 맞춰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주 11번은 재외동포사 관련 내용에 관한 이전 교육과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이기 때문에 비교사적으로 이 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주제 II와 III의 학습요소와 평가기준을 보여준 <표 3>, <표 4>, <표 5>, <표 6>은 현재의 나열식 구성보다 연구의 범위에 맞게 범주화하여 하나의 표로 구성한 뒤 각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넷째, III장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의 재외동포사 근대사 부분의 서술체제 및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글은 1910년을 기점으로 ‘해외 이주와 민족 독립 운동’ 두 가지의 특징을 대주제로 나눈 다음 해외 이주 1시기, 민족 독립 운동 4시기로 연구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고등학교 『한국사』 9종에 서술된 재외동포사 관련 본문 내용과 본문 외 구성요소의 특징을 병렬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IV장의 맺음말에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의 재외동포 서술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 재외동포 관련 용어 사용의 혼재 ② 각 주제별 내용 서술의 분산 ③ 내용과 연결된 탐구 활동의 실질적 활용 방안 모색 ④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 방지 및 최신 연구 성과 반영 총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발

25) 해외 한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한데, 이 책의 가장 큰 이론적 시각은 ‘디아스포라’론이며, 비교사회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근식,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의 두 개의 진진」, 『황해문화』 43, 새얼문화재단, 2004, 354쪽.

표자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내용 분석 기준을 표장에 적용한다면 발표자께서 세밀하게 분석한 내용들이 보다 설득력 있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이재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